

2018

정책연구 2018-18

지방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전라북도 미래정책 아젠다 발굴

연구진 김동영 · 김진병 · 이종섭 · 송용호 · 신지원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8-18

지방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전라북도 미래정책 아젠다 발굴



연구진

연구책임	김동영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김진병 • 원광대학교 초빙연구위원
	이중섭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송용호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신지원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 18JU1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론	3
1. 연구 배경과 목적	3
2. 연구 추진과정	4
제2장 정책분석	11
1. 정책환경분석	11
2. 지방분권 정책현황	31
3. 시사점	36
제3장 시·도별 민선7기 정책분석	41
1. 주요공약 및 정책현황	41
2. 핵심정책 분석(빅데이터 분석)	62
3. 전라북도 10대 아젠다 설정 전문가 델파이조사	71
제4장 전라북도 민선7기 정책방향	85
1. 전라북도 민선7기 추진전략	85
2. 전라북도 민선7기 10대 아젠다	93
제5장 결론	117
부록	123
[부록 1] 주요 정당 10대 공약 세부내용	123
[부록 2] 빅데이터 분석 자료	171
[부록 3]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지	197

표목차 | Contents

〈표 1-1〉 자치분권 로드맵(안)	3
〈표 1-2〉 조사 분야의 유형화 사례	5
〈표 2-1〉 전국 시도별 소멸위험지수 추이	15
〈표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32
〈표 2-3〉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중점 검토과제	35
〈표 3-1〉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주요내용	41
〈표 3-2〉 자유한국당 10대 공약 주요내용	44
〈표 3-3〉 바른미래당 10대 공약 주요내용	46
〈표 3-4〉 민주평화당 10대 공약 주요내용	49
〈표 3-5〉 정의당 10대 공약 주요내용	50
〈표 3-6〉 전라북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53
〈표 3-7〉 경기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54
〈표 3-8〉 강원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55
〈표 3-9〉 충청북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56
〈표 3-10〉 충청남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57
〈표 3-11〉 전라남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58
〈표 3-12〉 경상북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59
〈표 3-13〉 경상남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60
〈표 3-14〉 제주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61
〈표 3-15〉 기타 시도지사 후보 5대 공약 핵심 단어	65
〈표 3-16〉 소셜미디어 및 언론분석 핵심 단어	66
〈표 3-17〉 소셜미디어 및 언론분석 핵심 단어	67
〈표 3-18〉 주요정당 10대 공약 분석 핵심 단어	68
〈표 3-19〉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결과	69
〈표 3-20〉 델파이 조사 대상자 및 조사응답자 현황	71

〈표 3-21〉 민선7기 아젠다 선정을 위한 10대 이슈	72
〈표 3-22〉 분야별 주요 키워드	73
〈표 3-23〉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 1	74
〈표 3-24〉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 2	75
〈표 3-25〉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76
〈표 3-26〉 분야별 정책우선순위조사결과	77
〈표 3-27〉 순위별 가중치 계산	78
〈표 3-28〉 분야별 아젠다 우선순위	78
〈표 3-29〉 아젠다 전체 우선순위	80
〈표 3-30〉 최종 선정 10대 아젠다	81
〈표 4-1〉 전라북도 민선7기 101대 공약	85
〈표 4-2〉 전라북도 5대 도정목표에 따른 세부 실행과제	89
〈표 4-3〉 10대 아젠다 및 추진전략	93
〈표 4-4〉 농생명 금융관련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상	100
〈표 5-1〉 전라북도 민선7기 정책분야 우선순위	117
〈표 5-2〉 전라북도 민선7기 추진분야와 연구결과 비교	118
〈표-1〉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주요내용	123
〈표-2〉 자유한국당 10대 공약 세부내용	133
〈표-3〉 바른미래당 10대 공약 세부내용	140
〈표-4〉 민주평화당 10대 공약 세부내용	147
〈표-5〉 정의당 10대 공약 세부내용	151
〈표-6〉 전북도지사 송하진 후보 10대 공약	163
〈표-7〉 전북도지사 임정엽 후보 10대 공약	165
〈표-8〉 전북도지사 권태홍 후보 10대 공약	166
〈표-9〉 전북도지사 이광석 후보 10대 공약	169
〈표-10〉 5대 공약 핵심 단어	171
〈표-11〉 10대 공약 핵심 단어	174
〈표-12〉 전라북도지사 후보 5대 공약 핵심 단어	177
〈표-13〉 기타 시도지사 후보 5대 공약 핵심 단어	177

〈표-14〉 언론 핵심 단어	179
〈표-15〉 언론 공약 중심 핵심 단어	181
〈표-16〉 소셜 미디어 핵심 단어	186
〈표-17〉 소셜 미디어 전복 핵심 단어	190
〈표-18〉 소셜 네트워크 전복 핵심 단어	191
〈표-19〉 소셜 네트워크 전복 핵심 단어	192
〈표-20〉 주요정당 10대 공약 핵심단어 분석	194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STEEP분석 체계도	4
〈그림 1-2〉 이슈도출과정	5
〈그림 1-3〉 연구체계도	8
〈그림 2-1〉 전국 장래 인구 추계(1970~2065년)	11
〈그림 2-2〉 전국 인구구조 현황(2015년 기준)	12
〈그림 2-3〉 전국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2000~2016년)	13
〈그림 2-4〉 전국 청년층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2000~2016년)	13
〈그림 2-5〉 전국 경제활동인구 추이(2000~2016년)	14
〈그림 2-6〉 전국 소멸위험지수 유형 분포(2000~2015년)	16
〈그림 2-7〉 주요국 상위 10% 소득집중도	17
〈그림 2-8〉 산업혁명의 전개과정	18
〈그림 2-9〉 4차산업혁명의 산업구조 영향	18
〈그림 2-10〉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20
〈그림 2-11〉 메이커시대의 패러다임변화	21
〈그림 2-12〉 미국의 무역제재 조치현황	23
〈그림 2-13〉 공유경제 분야별 시장규모	24
〈그림 2-14〉 최종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6
〈그림 2-15〉 IEA의 재생에너지 기술별 2025년 전망	27
〈그림 2-16〉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	28
〈그림 2-17〉 전세계 난민현황	30
〈그림 2-18〉 자치분권 비전 및 5대 핵심전략	32
〈그림 2-19〉 전라북도 민선7기 메가트렌드분석	37
〈그림 3-1〉 전국 5대공약 핵심단어 워드클라우드	62
〈그림 3-2〉 5대 공약 핵심 단어 워드 네트워크(전국)	63
〈그림 3-3〉 전라북도 5대 공약 핵심 단어 워드 클라우드	63

〈그림 3-4〉 5대 공약 핵심 단어 워드 네트워크(전라북도)	64
〈그림 3-5〉 정책영역별 우선순위	78
〈그림 4-1〉 전라북도 5대 도정목표 및 16대 핵심전략	89
〈그림 4-2〉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구상(안)	94
〈그림 4-3〉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구성요소	95
〈그림 4-4〉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비전 및 목표	96
〈그림 4-5〉 새만금 태양광·풍력단지 구축계획	97
〈그림 4-6〉 전라북도 전입·전출 현황	98
〈그림 4-7〉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개념도	99
〈그림 4-8〉 금융중심지 지정절차	100
〈그림 4-9〉 블록체인활용 국제무역 플랫폼	101
〈그림 4-10〉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추진사업	102
〈그림 4-11〉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비전체계도	103
〈그림 4-12〉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104
〈그림 4-13〉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안)	105
〈그림 4-14〉 전라북도 장소기반 전통문화산업 육성전략	107
〈그림 4-15〉 전북대도약 하드웨어 주요아젠다	108
〈그림 4-16〉 전북권 트램-트레인 실용화 및 신설노선	109
〈그림 4-17〉 전라북도 5권5축 공간발전구상	110
〈그림 4-18〉 한반도신경제구상과 전북발전	111
〈그림 4-19〉 동서내륙경제벨트 구상(안)	111
〈그림 4-20〉 인구댐 거점조성	111
〈그림 4-21〉 전라북도 미세먼지 추진대책	112
〈그림 4-22〉 농업안전스마트시티 개념도	113
〈그림-1〉 5대 공약 2단계 워드트리 - 1	172
〈그림-2〉 5대 공약 2단계 워드트리 - 2	173
〈그림-3〉 10대 공약 2단계 워드트리	175
〈그림-4〉 5대 공약 핵심 단어 워드 클라우드	176
〈그림-5〉 10대 공약 핵심 단어 워드 클라우드	176
〈그림-6〉 전라북도지사 후보 5대 공약 핵심 단어 워드 클라우드	177

〈그림-7〉 기타 시도지사 후보 5대 공약 핵심 단어 워드클라우드	178
〈그림-8〉 언론 워드 클라우드	180
〈그림-9〉 지방선거 공약 언론 가중 네트워크	181
〈그림-10〉 언론 CONCOR 분석 네트워크	182
〈그림-11〉 5대 공약 핵심 단어 워드 클라우드	183
〈그림-12〉 지방선거 공약 언론 전북 가중 네트워크 분석	183
〈그림-13〉 지방선거 공약 언론 전북 가중 네트워크 CONCOR 분석	184
〈그림-14〉 소셜 미디어 워드 클라우드	186
〈그림-15〉 소셜 미디어 가중 네트워크 분석	186
〈그림-16〉 소셜 미디어 가중 네트워크 CONCOR 분석	187
〈그림-17〉 광역단체장 선거 워드 클라우드	188
〈그림-18〉 전북도지사 선거 워드 클라우드	189
〈그림-19〉 소셜 미디어 전북 워드 클라우드	190
〈그림-20〉 소셜 네트워크 전북 워드 클라우드	191
〈그림-21〉 소셜 네트워크 전북 워드 클라우드	192
〈그림-22〉 송하진 도지사 공약 네트워크	193
〈그림-23〉 송하진 도지사 공약 CONCOR 분석 네트워크	193
〈그림-24〉 주요 정당 10대 공약 핵심 단어 워드클라우드	195

1

장

서론

Jeonbuk Institute

-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 추진과정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발전정책 또한 변화와 대응이 필요
-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행정안전부, 2017)
- 주요추진과제로 자치분권사전협의제 도입, 지역경제·정주여건 등 포괄적 지방이양, 특행 기관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중 개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지방소비세 배분 균형기능강화,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혁신읍면동 사업추진,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개선, 광역연합 설립, 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을 제시함

〈표 1-1〉 자치분권 로드맵(안)

비 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 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치분권
핵심전략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추진기반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자료 : 행정안전부(2017), 자치분권로드맵(안)

- 2018년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정책 트렌드 분석과 전라북도 민선7기 정책방향의 시사점 도출하고자 함
-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읍·면의원 등 기초 및 광역의원과 기초 및 광역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특히, 광역단체장들은 시·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역의 이슈와 국가적 정책 흐름을 파악 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4년간의 정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방자치 정책의 트렌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기회임

- 이에 따라 광역시도의 정책트렌드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민선7기의 정책을 각 시도의 정책과 비교분석하여 전라북도 민선 7기의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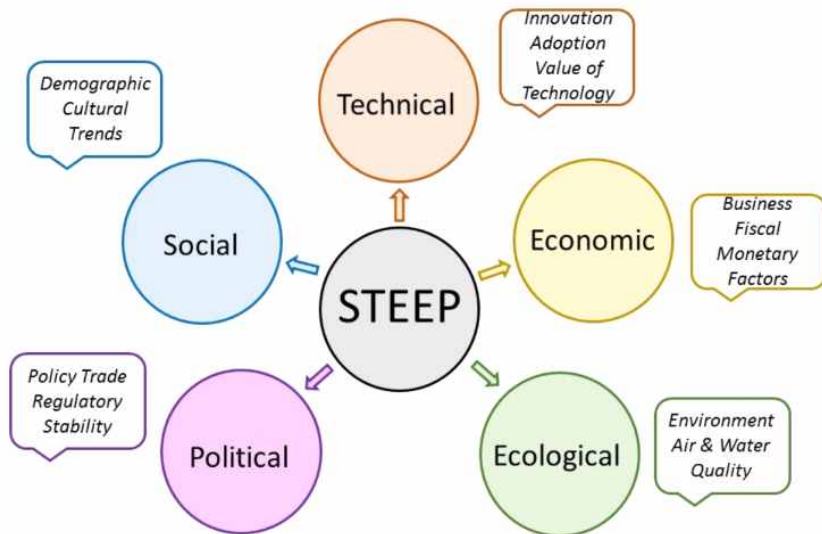
2. 연구 추진과정

1) 연구 내용

(1) 트렌드 환경분석

○ STEEP분석을 통해 지방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환경요인

- Social(사회적/문화적), Technological(기술적), Economic(경제적), Ecological(생태학적), Political/ Legal(정치적/법적)



자료: <http://linecard.tistory.com/153>

〈그림 1-1〉 STEER분석 체계도

- 메가트렌드 분석으로 전라북도 정책의 분야별 주요키워드를 도출하고 향후 민선 7기 정책공약과 연계하여 주요이슈를 도출하고자 함



〈그림 1-2〉 이슈도출과정

(2) 민선7기 정책공약 분석

- 17개 광역시도 정책공약의 주요분야와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를 다시 분야의 재 구성을 통해 세부아젠다를 도출

〈표 1-2〉 조사 분야의 유형화 사례

분야	세부 어젠다
지방자치/정치행정개혁	정치/행정개혁, 책임행정, 사업평가제, 공직자 윤리,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
안전/방재	공공안전, 치안, 재난관리, 사회안전망 등
지역경제	경제활성화, 지속가능 지역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브랜드 특성화, 새만금 등
농산어촌	도농교류/로컬푸드, 농산어촌 경제활성화, 마을재생, 사회적 경제, 친환경 등
도시계획/개발	주민참여형, 원도심 재생, 전복권 신공항, 혁신도시, 광역개발, 대중교통 등
의료/복지	소외계층 일자리, 사회적 기업, 노인복지, 의료환경 개선 등
여성/청소년/다문화	일-가정 양립 지원, 영유아 보육, 청소년복지, 저출산 대책 등
교육	지역대학 위기,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학교폭력, 평생교육 등
환경/에너지	공원/녹지, 에너지 자립마을, 기후친화 녹색도시, 명품하천 등
문화/관광	지역 문화관광, 지역문화 정체성, 한국적 문화도시, 시민주체 문화도시 등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7회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의 선거공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주요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
-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주요 시책의 중심성 분석을 실시한 후, 시·도지사 후보의 공약 중에서 중심 위치에 해당되는 핵심 정책이 무엇인지 분석

(3) 전라북도 민선7기 정책방향

- 전국적인 민선7기 지방자치의 아젠다를 도출한 후 이를 전라북도 상황과 비교하여 전라북도 만의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자문회의를 통해 기존 전국적인 10대 아젠다 속에서 전라북도 아젠다 도출
- 전라북도의 10대 아젠다를 도출 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아젠다에 따른 전라북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전라북도의 10대 아젠다 우선순위 설정은 전문가 AHP조사를 통해 쌍대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

2) 연구 방법

(1) STEEP 분석

- 트렌드 분석을 하기 위해 메가트렌드 분석사례를 검토하여 전라북도에 맞는 STEEP분석 틀을 마련
- 정책동향에 대한 분석은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분석, 민선6기와 민선7기 선거과정에서 도출된 지방자치관련 정책동향분석을 실시

(2) 빅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 분석: 빅카인즈와 텍스트를 통한 분석

- 분석대상: 국내의 신문 기사와 방송 보도 내용
- 수집기간: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2월 13일부터 지방선거일 전날인 6월 12일까지
- 기사와 보도 내용의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신문·방송 검색 서비스인 빅카인즈를 활용
- 텍스트를 이용하여 빈도수와 빈도 매트릭스를 작성
- 텍스트와 호환이 되는 UCINET 6.0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와 중심성 분석 진행
- 텍스트와 호환이 되는 Netdraw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시각화 진행

○ 빅데이터 분석: 텍스트를 통한 분석

- 분석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선거공약집
- 수집기간: 시·도지사 후보 선거공약집 등록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 텍스트를 이용하여 내용을 수집 및 정제한 후 빈도수와 매트릭스를 작성
- 텍스트의 시각화 기능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시각화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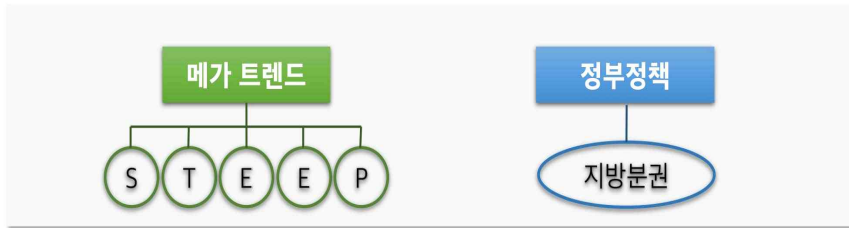
(3) 전문가 자문방법

○ 델파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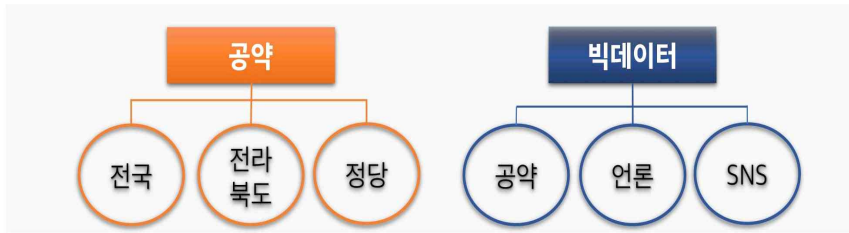
- 빅데이터분석에 기초한 분야와 주요키워드를 제시하고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10대 아젠다 도출 후 아젠다별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라북도 민선7기 정책아젠다를 도출하고 정책아젠다별 추진과제 도출

정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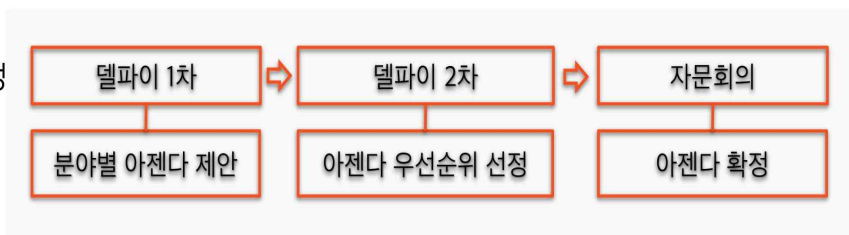


공약 분석



10대 분야 도출

아젠다 선정



10대 아젠다 선정

추진 전략



〈그림 1-3〉 연구체계도

2

장

정책분석

Jeonbuk Institute

-
1. 정책환경분석
 2. 지방분권 정책현황
 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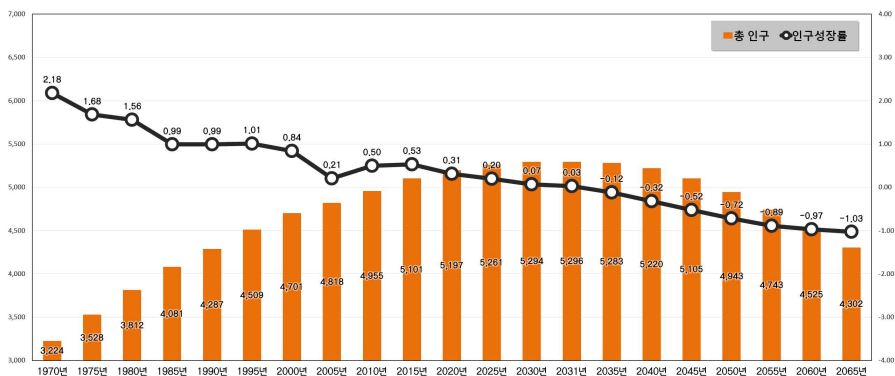
제2장 정책분석

1. 정책환경분석

1) 사회적(Social) 환경

(1) 인구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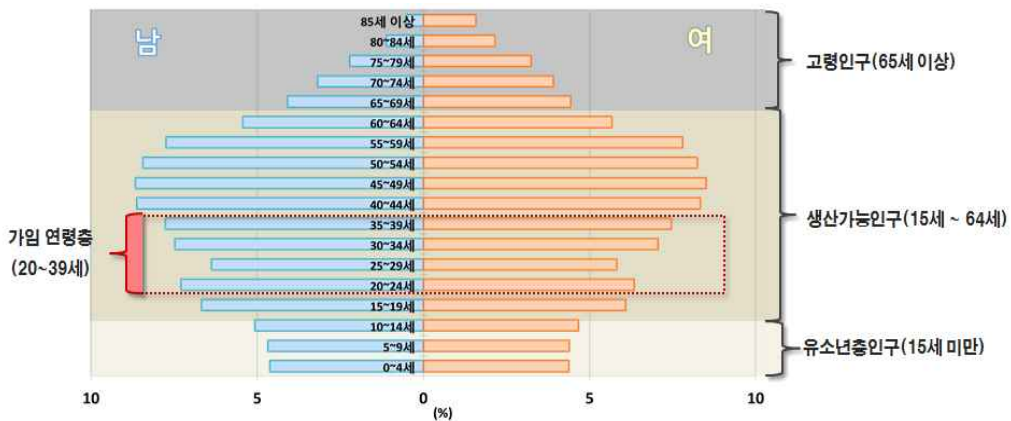
-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를 전망해보면, 2031년 총 인구 5,296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시대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됨
- 전국 총인구 : 1970년 약 3,224만명에서 2031년 5,296명, 2065년 4,302명으로 감소할 전망
- 인구 성장률 : 1970년 2.18%에서 2015년 0.53%로 둔화되고 있으며, 2032년 기점 마이너스 성장률로 진입하여 2065년 인구성장률 -1.03% 전망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2-1〉 전국 장래 인구 추계(1970~2065년)

- 인구구조를 전망한 결과, 과거 1970년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에서 2015년 항아리형으로 변화하였으며, 미래 2065년에는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심화로 유소년층 감소 및 노년층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인구 부양 부담 증가와 국가경쟁력 악화를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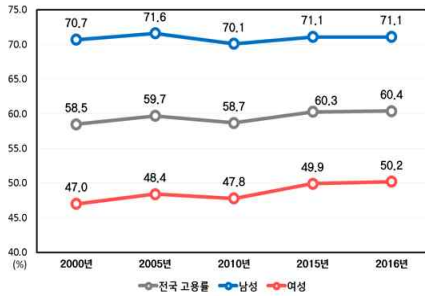


〈그림 2-2〉 전국 인구구조 현황(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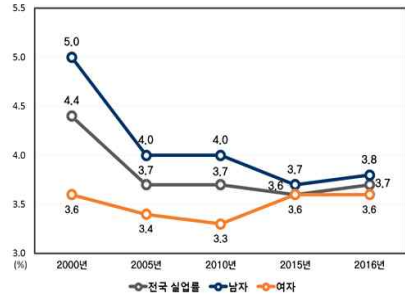
- 해리 텐트(2014)는 한국의 경우 47세가 주택, 자동차, 가구 등 가장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소비정점나일로 47세의 인구가 정점을 찍고 연령대가 줄어드는 2018년부터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소비절벽으로 이어지는 인구절벽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45~49살 인구는 196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436만2천명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431만 7천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22년 39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

(2) 경제활동인구 감소

- 전국의 고용률은 남성의 경우 2000년 70.7%에서 2016년 71.1%, 여성의 경우 47.0%에서 50.2%로 유지 및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며, 전국 평균 고용률도 2000년 58.5%에서 2016년 60.4%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남
- 전국의 실업률은 남성의 경우 5.0%에서 2016년 3.8%, 여성의 경우 2000년 3.6%에서 2010년 3.3%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6년 다시 3.6%를 유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실업률은 2000년 4.4%에서 2016년 3.7%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전국의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업률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고용 수치로는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나 청년층 고용률과 실업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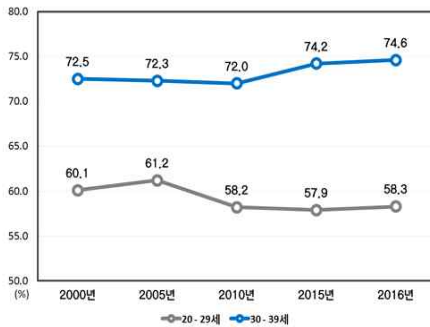
<실업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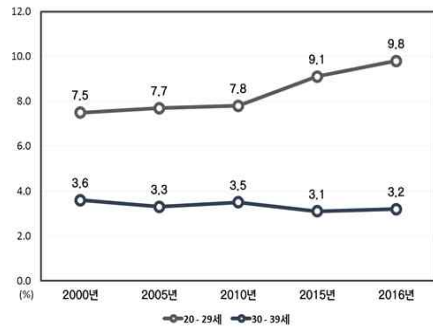
<그림 2-3> 전국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2000-2016년)

- 전국 20대 고용률은 2000년 60.1%에서 2016년 58.3%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실업률은 2000년 7.5%에서 2016년 9.8%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20대의 고용률 감소와 실업률 증가는 만혼화의 요인이 될 수 있음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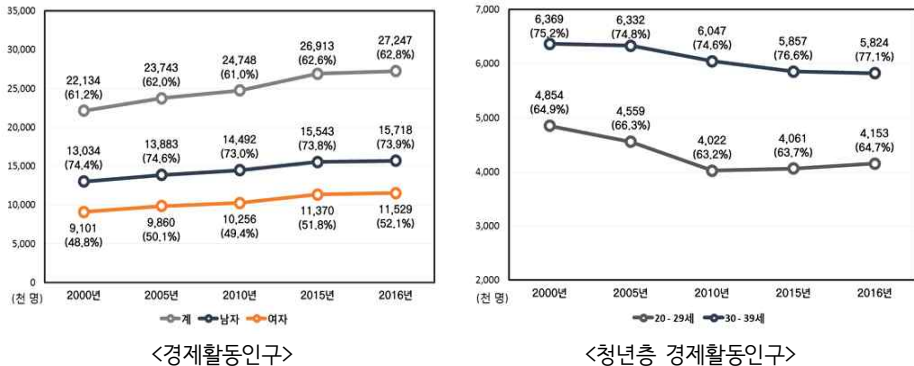


<실업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4> 전국 청년층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2000-2016년)

- 전국의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2,213만 명에서 2016년 2,725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대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485만 명에서 2016년 415만 명으로 감소, 30대 경제활동인구는 637만 명에서 582만 명으로 감소하여 총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추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5> 전국 경제활동인구 추이(2000~2016년)

(3) 지방소멸

- 소멸위험지수란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로 지방소멸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됨¹⁾
- 소멸위험지수가 1.0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0.5이상 1.0미만이면 소멸주의지역, 0.2이상 0.5미만이면 소멸위험진입지역, 0.2미만이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멸위험지수가 낮을수록 위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박상현 외, 2017)
- 전국의 소멸위험지수는 2005년 1.75로 고령인구 1명당 가임여성 인구 1.75명이었으나 2015년 1.01로 감소하였으며 모든 시도에서도 소멸위험지수가 감소하여 소멸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시도별 분석 결과 울산광역시 1.46, 세종특별자치시 1.44, 대전광역시 1.31, 인천광역시 1.29, 서울특별시 1.24로 대부분의 광역시 고령인구 대비 가임여성의 인구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구광역시는 0.99, 부산광역시는 0.88로 고령인구가 더욱 많은 것으로 판단됨

1)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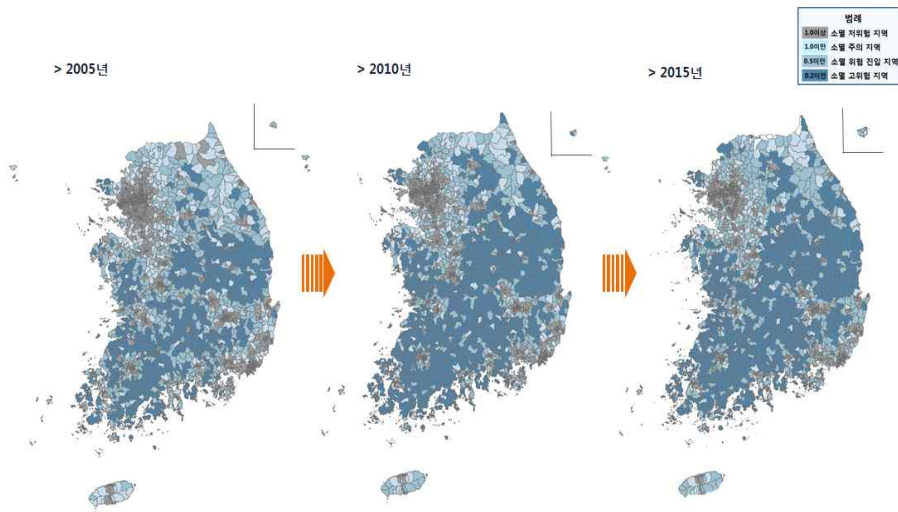
- 광역도의 경우 경기도 1.30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소멸위험지수 1.0이하로 고령 인구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 0.85, 경상남도 0.85, 충청북도 0.82, 충청남도 0.75, 강원도 0.65, 전라북도 0.63, 경상북도 0.62, 전라남도 0.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 전국 시도별 소멸위험지수 추이

구분	2005	2010	2015
전국	1.75	1.30	1.01
서울특별시	2.53	1.78	1.24
부산광역시	1.83	1.20	0.88
대구광역시	2.06	1.39	0.99
인천광역시	2.35	1.71	1.29
광주광역시	2.44	1.72	1.26
대전광역시	2.47	1.77	1.31
울산광역시	3.05	2.00	1.46
세종특별자치시	-	-	1.44
경기도	2.37	1.73	1.30
강원도	1.07	0.77	0.65
충청북도	1.22	0.95	0.82
충청남도	0.96	0.84	0.75
전라북도	0.95	0.74	0.63
전라남도	0.66	0.50	0.47
경상북도	0.95	0.73	0.62
경상남도	1.37	1.04	0.85
제주특별자치도	1.47	1.01	0.85

- 전국 소멸위험지수를 읍면동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소멸 고위험지역은 2005년 585개소(16.4%)에서 2015년 805개소(23.1%)로 220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소멸 위험진입지역도 2005년 471개소(13.2%)에서 2015년 574개소(16.4%)로 103개소 증가, 소멸 주의지역 415개소(11.6%)에서 825개소(23.6%)로 410개소가 증가한 반면, 소멸 저위험지역은 2,102(58.8%)에서 2015년 1,288개소(36.9%)로 410개소가 감소하였음

- 소멸위험군의 지역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소멸 저위험 지역은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 2-6〉 전국 소멸위험지수 유형 분포(200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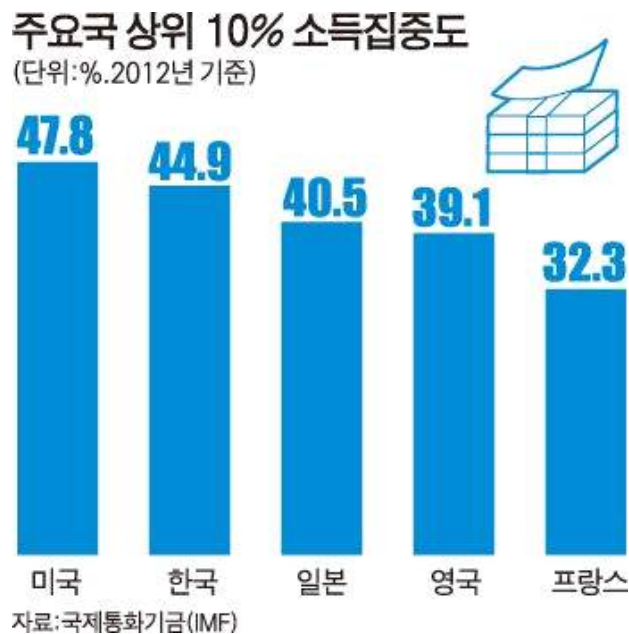
- 전국적으로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시도 수준에서는 광역도의 소멸위험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동 수준에서는 면지역의 소멸위험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4) 불평등/갈등 심화

- 토마 피케티(2014)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현재의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빨라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줌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대 최상위 10% 소득비중은 미국 50.5%, 일본 41.6%, 영국 39.1%, 프랑스 30.5%, 스웨덴 30.7%로, 한국의 개인소득 불평등도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홍민기, 2017)
- 국회입법조사처(2016)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위 10% 소득 집중도(2012년 기준)는 44.9%로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며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소득집중도는 소득 상위권 구간의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소득불평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만 해도 상위 10%를 차지하는 인구의 소득집중도가 29.2%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35.8%, 2008년 43.4%, 2012년 44.9%까지 상승
- 1995~2012년 동안 상위 10%의 소득집중도 상승폭은 15.7%포인트로 싱가포르(11.7%포인트), 미국(7.3%p), 일본(6.5%p), 호주(1.9%p) 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림 2-7〉 주요국 상위 10% 소득집중도

-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더 이상 사회적 이동이 불가능하고 부모의 재력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수저계급론’이 SNS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황
- 소득불평등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성혐오와 남성혐오 등 성별갈등이 또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세대갈등, 성별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2) 기술적(Technological)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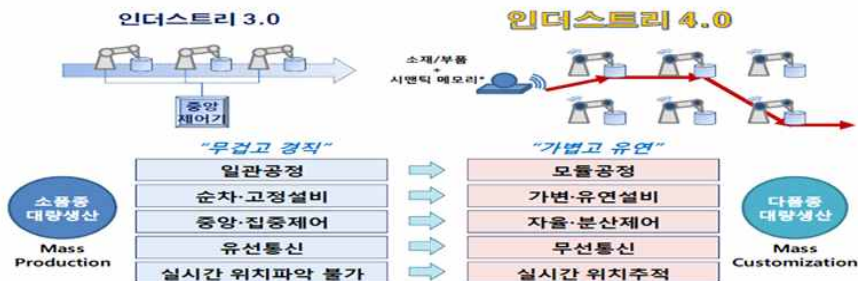
(1) 제4차 산업혁명 대응

- 제4차 산업혁명이란 제3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되는 기술혁신으로 사회, 경제분야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남을 의미



〈그림 2-8〉 산업혁명의 전개과정

- 제4차 산업혁명은 제조공정의 혁신, 제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팩토리 확산 등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 디지털화와 3D프린팅 기술도입 등으로 시제품 공유를 통한 피드백이 가능함. 또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음
 - 장소 제약 없이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기기들이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결합되어 디지털 제조공장이 가능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노동력 대체 가능
 - IoT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는 빅데이터상황분석으로 생산시뮬레이션, 사전검증, 실시간 관리 생산체계 구축이 가능



〈그림 2-9〉 4차산업혁명의 산업구조 영향

-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의 자동화로 한국의 일자리 63%가 사라질 위기에 있어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변화 예상
 - 단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무행정직, 저숙련 업무 등의 일자리는 축소되며 IT와 SW개발, IT 및 데이터 통합분야, 로봇 코디네이터 등 고숙련 전문직 일자리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등 R&D투자, 혁신창업, 4차산업 인재양성, 일자리창출, 스마트시티 등의 정책적 분야의 이슈가 미래사회대응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음

(2) 미래 혁신기술²⁾

- 제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성장 토대마련
- 인공지능(AI)은 급속도로 우리 삶에 스며들어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하게 활용되어 생활의 변화를 주고 있음
-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은 몰입감을 높여 가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증강현실 기술은 더 많은 스타트업들의 참여와 함께 게임 분야 외에도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측
-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된 가상화폐서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가상화폐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디지털 데이터 기반을 활용한 수익창출구조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데이터 활용 기반의 기업가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사물인터넷(IoT)과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진료하는 방식이 활용될 전망

2) 삼성뉴스룸(2018.3.15.), 2018년 주목받을 5가지 혁신기술 트렌드

- 사람과 기기를 연결하는 기술이 가정을 넘어 도시 전반으로 확대되며 디지털지도 서비스, 주차 솔루션, 자전거를 비롯한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등 IoT 기술이 생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음
-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을 선도 할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 13개 분야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 및 추진계획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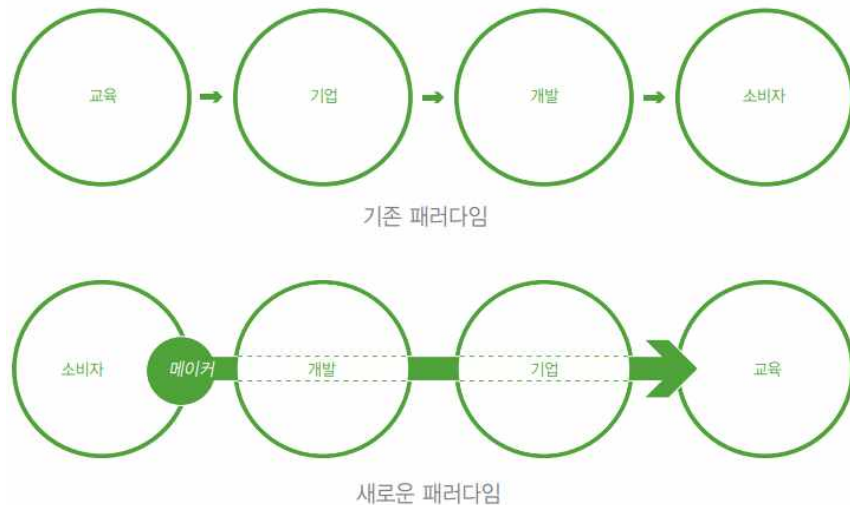
구분	지능화 인프라	스마트 이동체	융합 서비스	산업기반
분야	빅데이터(D) 	자율주행차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반도체 
	차세대통신(N) 	드론(무인기) 	스마트시티 	첨단소재 
	인공지능(A)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그림 2-10〉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3) 메이커스(MAKERS)

- PC가 일상적으로 활용되면서 물리적 한계 없이 디지털을 활용하며 생활의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자 세대 등장
-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한계 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혁신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고, 소프트웨어는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흰 캔버스와도 같아 기업에 속해있지 않아도 충분히 개인도 비즈니스 모델을 뛰어넘는 뛰어난 제품을 제작하는 메이커스(MAKERS)시대 도래
- 전 세계의 다양한 메이커들은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스마트 가젯, 로봇 장치, 자율 비행 장치, 착용 가능한 장비를 만들 수 있음. 제조혁신은 더 이상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왔음

- 메이커들은 자신의 발명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다른 메이커들이 영감을 얻어 다양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자극을 줌. 메이커 운동과 같은 “바이럴 혁신”이 기술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음
-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든 메이커운동은 펍랩, 시제품제작소 등 다양한 메이커 공간의 필요성과 창의성과 상상력에 기반 한 융합능력을 가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까지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림 2-11〉 메이커시대의 패러다임변화

3) 경제적(Economic) 환경

(1) 뉴 뉴트럴(New Neutral·새로운 중립) 시대³⁾

- 세계 최대 채권투자회사 핼코(PIMCO)는 지난 2009년 높은 실업률과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정상)’이 찾아왔다고 주장

3) 프리미엄조선(2016. 10. 2)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30/2016093001108.html

- 펄코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공동창업자(현 알리안츠 고문)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시기를 ‘올드 노멀’로 부르며, 글로벌 경제가 올드 노멀로 회귀하지 못하고 ‘뉴 노멀’에 정착할 것이라고 예측
- 7~9%대 성장률을 보이던 고성장 시대는 가고 제로에 가까운 저성장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으로 ‘뉴 노멀’은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나타내는 용어가 됨
- 펄코는 최근 뉴 노멀에 이어,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을 맴도는 ‘뉴 뉴트럴(New Neutral·새로운 중립)’ 시대가 온다고 예측
- 댄 아이버슨(Ivascyn·47) 펄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뉴 뉴트럴 시대엔 전 세계 금리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다시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물가상승률과 투자 수익률도 동시에 낮아지면서 예전처럼 금리 인상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
- 201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쳤지만 일자리는 43만 7000개가 늘어 경제 성장률 1%당 1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2017년 성장률 1%당 취업자 증가 규모가 10만명 정도에 머물고 있음
- 기술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자동화와 무인화로 인해 저성과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돼 이에 따른 대응마련 필요

(2) 트럼프발 무역전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무역전쟁이 관세, 투자 제한, 통화가치 하락 경쟁 등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시행/발표일자	2018. 2. 7일(시행)	3. 23일(시행)	4. 3일(계획 발표)
대상 품목 및 수입관세율	태양광판(30%), 세탁기(50%)	철강(25%), 알루미늄(10%)	지적재산권 관련 1,333개 품목(25%)
근거 규정	통상법 201조(GATT 19), 국내 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통상법 232조(GATT 21), 국가 안보	통상법 301조, 지적재산권 보호
면제 대상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 개도국	캐나다, 멕시코, EU,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중국에 대해서만 부과
중국 적용 여부	적용	적용	적용
중국의 대응	N/A	128개 품목(돼지고기, 과일, 견과류, 와인 포함), 30억 달러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 부과 (4.2일 시행)	106개 품목(대두, 옥수수, 소고기, 위스키, 담배, 항공기 포함), 500억 달러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 (4.4일 계획 발표)

자료 : 한국은행 홍콩주재원, 미·중 무역분쟁 양상에 대한 홍콩 IB의 견해, 2018.4.11.

주 : 1) () 안은 과세율

2) 필리핀과 태국은 면제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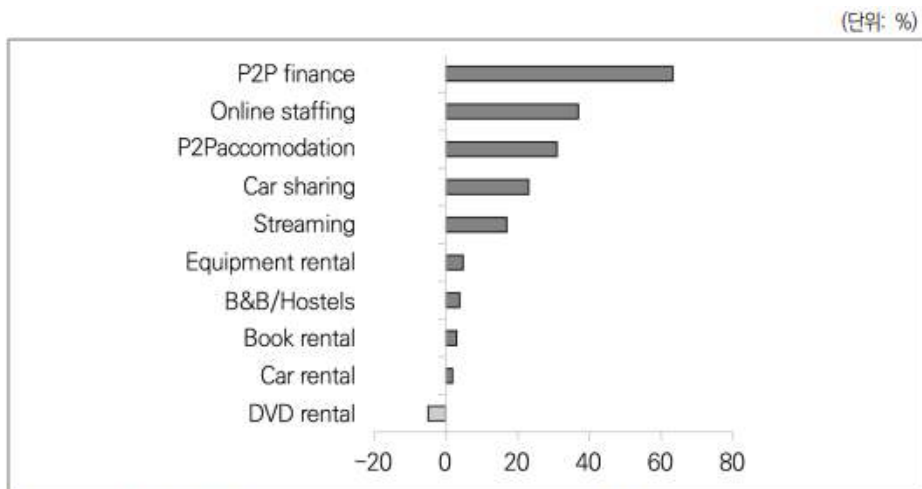
출처: KJET 산업경제

〈그림 2-12〉 미국의 무역제재 조치현황

- 미국정부는 중국의 첨단산업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관세 조치에 따라 중국은 기존의 미국산 원유와 농산물 수입 확대방안에 대한 모든 효력을 취소하고 항공기, 차량, 대두 등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물품 106개에 대해 보복관세 조치 발표
- 최근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조치,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 고율관세에 따른 대응으로 유럽연합이 미국산 위스키, 오토바이, 청바지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분쟁 심화
-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향후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세계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고용부진 등이 겹치면서 생산, 고용뿐만 아니라 소비심리지수도 1년 2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소비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공유경제 활성화

-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는 물품을 소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대여해 주고 차용하여 쓰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음(위키백과)
- 공유경제시장은 전체적으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국, 유럽 시장이 이를 주도하고 있음
- PwC(2014)에 따르면 공유경제시장이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약 3,3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공유경제가 아닌 기존의 전통적 거래시장과 동일한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주: 2013~25년 분야별 수입(Revenue)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PwC(2014), 재인용: Credit Suisse(2015, p. 20).

〈그림 2-13〉 공유경제 분야별 시장규모

- 공유경제는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개인이나 영세업체가 거래에 참여하기 용이하고 공급자와 소비자는 상호 거래관계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의 수요자가 된다는 점이 기존의 전통적 거래와 차이가 있음

-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차량, 숙박 등 기존의 규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상호거래에서 나타나는 윤리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

4) 생태적(Ecological) 환경

(1) 기후변화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등에 의한 온실가스에 의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남극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의 환경적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2030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몰디브가 수몰되고 2040년 전에 시베리아 동토가 녹으면 서 러시아가 식량강국으로 부상함(Park & Glenn, 2015)
 - 2040-45년 지구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 한국은 해수면 상승으로 새만금/서해안/제주도 등에 수몰지역 발생, 그린란드가 용융의 티핑포인트에 도달, 멕시코만의 슈퍼태풍으로 휴스턴/뉴올리언스가 영구파괴됨(Park & Glenn, 2015)
-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친환경 재료·소재,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환경시장의 등장이 예상되며, 청정생산 기술의 활용 증가로 산업구조가 친환경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
-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청정생산기술의 등장으로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저공해, 저폐기물, 리사이클링, 에너지효율 등이 고려된 환경 친화적인 제품 설계 기술 등이 점진적으로 확대할 전망
-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은 어종 어획량에도 변화를 줘 최근 고등어, 멸치 등의 어획량은 늘고 명태, 꽂치 등은 줄어 향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사는 한류성 어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
- 영국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LSHTM) 연구팀은 현재와 같이 지구의 기온이 오르고 물부족이 계속되면 21세기말에는 토마토·콩·잎채소 등 건강에 꼭 필요한 채소·콩과작물 생산량이 지금보다 31.5%나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농민신문, 2018. 6. 25)

(2) 대체에너지

- 에너지 자원의 고갈에 대한 위협으로 다양한 에너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기반 에너지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측
- 향후 50년간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에 의한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이로 인한 화석연료의 고갈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로 풍력, 지열, 태양에너지, 바닷물 등 생물연료의 부각이 예상
- 화석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가속화와 BT 기반의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 식물이나 미생물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의 다양화 및 이를 활용한 수소 에너지 원천 확보 기술이 대표적이다.
 - 산업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BT/ET/융합기술의 진화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부상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



출처: 2016 신재생에너지백서

〈그림 2-14〉 최종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 ‘세계에너지전망 2015’에 따르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기준 전망에 해당하는 신규 정책 시나리오에서는 1차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013년 14%에서 2040년 19%로 증가할 전망

2025년 2DS 목표에 대한 상태		정책 제안
재생 에너지 전력	재생에너지 기술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COP21을 전후한 정책 변화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낙관적임. 육상풍력과 태양광은 2DS 목표를 달성하도록 착착 진행 중.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력이 충분히 2DS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기술들의 확대가 요구됨	· 투자자에게 분명하고 일관된 신호를 보내면서 경쟁을 향상하는 정책 지원과 적절한 시장 설계를 도입하거나 유지할 것 ·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어떤 정책적 불확실성(특히 퇴행적 변화)도 회피할 것 · 전체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총체적 접근을 취할 것 ·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기 시작한 나라들은 높은 비중의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시스템에 통합한 모범 사례를 참고해야 함
바이오 연료	기존 바이오연료 생산은 연 2% 성장세에 머물고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2DS에서 바이오연료의 기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화석연료 퇴출과 관련하여 야심차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 · 강화된 바이오연료 의무 혹은 수송 연료의 탄소 집약도 감소를 규정한 대안적 정책이 필요함 ·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위험 회피 수단이 필요함 · 바이오연료 정책은 지속가능성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적합한 거버넌스 틀과 함께 작동해야 함
태양열	태양열 온수 난방은 열 부문에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잠재력이 가 시고 있으나 부적합한 자원과 비경제적 장애요인이 지속된다면 보급은 2DS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치지 못할 것임	· 정부 노력은 모든 태양열 시장 부문을 통틀어 경제적 매력도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태양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표 설정, 의무 부과, 태양열 기술에 대한 대중적 인식 개선 등 성공적인 정책이 벤치마킹되어야 함
에너지 저장	급속한 비용 감소, 가속화된 보급 추세, 구체화된 정책 덕분에 잘 진행 중. 지속적인 보급과 정책을 통해 이런 추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저장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및 규제 틀을 도입할 것 · 리튬이온 화학을 넘어서 저장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다양화할 것 · 저장과 전력망 통합을 위한 교육 및 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전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연료 세제와 차별화된 자동차 세제 필요. 연구개발의 맥락에서 전기차는 내연기관을 대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다양한 운전 패턴을 가능하게 하면서 구매 가격도 내연기관 차에 견줄 수 있는 시점을 당기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 노력이 요구됨 · 정부는 소비자 선호에 초점을 맞춘 비교 정책 분석과 시장 연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구매 비용의 격차를 줄히도록 차별화된 자동차세와 높은 연료세가 자동차 소유의 사적 사회적 비용과 맞추어지도록 함

출처: 2016 신재생에너지백서

〈그림 2-15〉 IEA의 재생에너지 기술별 2025년 전망

(3) 미세먼지

- 우리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슈로 최근 미세먼지가 가장 큰 문제로 등장
- 세계보건기구(WHO)는 1987년부터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2013년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Group 1)로 지정
- PM2.5의 오염도는 선진 주요 도시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을 보이며 '16년 평균 농도(전국, 서울 모두 $26\mu\text{g}/\text{m}^3$)는 WHO 권고기준($10\mu\text{g}/\text{m}^3$), 선진 주요도시(도쿄 13.8, 런던 $11\mu\text{g}/\text{m}^3$, '15) 대비 2배 높음
- 전북, 경북, 충남·북의 나쁨일수(PM2.5)는 전국 평균 대비 약 2~3배 높은 수준



〈그림 2-16〉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

- 정부는 미세먼지 30%감축을 목표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4개 부문별로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 삭감량 산정
- 미세먼지는 생수와 차, 마스크,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 클린상품과 미세먼지로 인한 외출이 줄면서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등의 소비가 증가하는 등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있음

5) 정치적(Political) 환경

(1) 남북 평화와 경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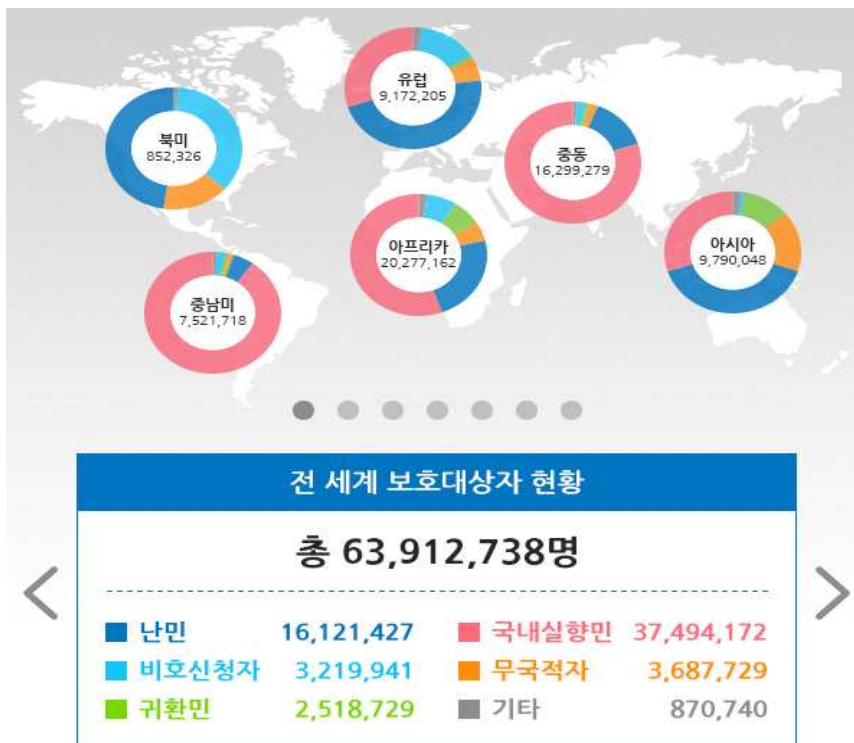
-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을 채택을 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 도래
- 두 정상은 남과 북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및 전쟁 위험의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합의하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이를 위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 행위들을 멈추기로 약속
- 문재인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 구상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최근 철도연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남북경제협력이 가시화단계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와 러시아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전력·가스·철도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해 협력약속
- 기존의 북핵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체제 구축과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 기대전망

(2) 이민과 난민

- 난민(難民, refugee) 또는 망명자(亡命者)는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위키백과)
- 유엔난민기구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전세계 난민은 63,912,738명에 이릅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UNHCR)

〈그림 2-17〉 전세계 난민현황

- 미국에서는 이민자 문제가 정치의 핵심적 쟁점으로 등장하여 트럼프대통령은 합법 이민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를 부모와 격리하는 무관용 이민정책이 세계적 이슈
- 이민과 난민에 포용적 입장을 가졌던 유럽연합도 최근에는 이주자 수용 중단 등에 의해 난민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등장
- 이민과 난민문제는 단순한 국경의 이동을 넘어 테러와 분쟁 등 폭력적 형태로 진행돼 특정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문제로 확산될 조짐

2. 지방분권 정책현황

- 지방분권 정책현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⁴⁾』의 내용을 요약·분석하고자 함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으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함
-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다섯 가지의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둘째,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넷째,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다섯째,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임

4) 행정안전부(2017), 자치분권 로드맵(안)

비 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 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핵심전략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추진기반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자료 : 행정안전부(2017), 자치분권 로드맵

〈그림 2-18〉 자치분권 비전 및 5대 핵심전략

1)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 중앙과 지방의 사무 구분 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신설하여 법령을 제개정 시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행정 및 조직, 재정권 등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협의함
- 두 번째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패 키지 이양을 추진하여 기능중심으로 포괄적 이양을 추진하고, 더불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및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를 추진함
- 세 번째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치안서비스의 요구에 적극 대응

〈표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구분	국가 경찰	자치 경찰
원칙	① 전국적 통일성 필요 ② 전국적 규모 ③ 고도의 전문성·재정 등 필요 사무	① 지역적 한정성 ② 주민생활 밀접성 ③ 지방행정 연계성 ④ 주민참여 가능성 ⑤ 지역적 차별성 ⑥ 국가안위와 낮은 관련성

자료 : 행정안전부(2017), 자치분권 로드맵

- 네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관광·환경·산업분야 정책결정권을 추가 이양하고, 자치분권과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이양을 추진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이양하고, 시도와 교육청 간의 인사교류, 예산 사전협의 등의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함으로써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자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8:2 비율을 단계적으로 6:4까지 개편하고자 함
 - 소비와 소득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 및 감면율을 15% 수준으로 관리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및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두 번째로 지방재정의 균형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교부세의 역할 강화와 국고보조사업등의 개편을 포함한 국가와 지방간의 이전재원 제도를 개편하고자 함
- 세 번째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대를 위해 지방재정제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재정통제 강화로 인해 지방의 지출 효율화를 제고함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 하는 것임
- 두 번째로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자치조직권의 확대인데, 이를 위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관리 자율화, 자치단체 유형에 맞는 맞춤형 조직으로의 재

설계를 추진하는 것임

- 세 번째는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임. 이를 위해 채용시스템을 개선하여 유능한 지역인재를 확보하고, 필수 보직기간 준수 강화 및 전문직위 활성화 추진, 공무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을 실시
-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행·재정 통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행·재정 운영의 투명한 공시와 '실시간 합동평가 시스템'의 구축으로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혁신 읍면동의 추진이며, 이를 위해 주민 대표기구가 실질적 주민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더불어 현장밀착형 보건복지 및 방문건강 서비스의 확대, 읍면동 청사공간의 혁신을 통한 주민자치공간으로의 재창조 등 읍면동의 행정혁신을 추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형을 발굴하여 마을자치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 및 소환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예산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지방재정법」개정을 추진, 주민 조례개폐청구제의 요건을 확대하여 주민발의 서명 수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완화하고, 온라인으로 조례개폐청구 서명을 가능하게 하여 주민편의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간의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행정구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약체결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으로 확산을 유도
- 두 번째로는 광역연합제도 도입으로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자치권을 획득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 도시 네트워크를 제도화 하고, 광연연합에서 종합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초 광역권 도시 행정 수행 역할을 부여

- 세 번째는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협업체계의 제도를 구축하여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분야별 통합 운영 모델을 마련
- 네 번째로는 자율적인 자치단체간의 행정구역 통합과 조정을 지원하여 자율통합 진행 시 행재정 특례 정비 및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자치단체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공공갈등 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공공부문의 갈등을 조정하고, 숙의기반 주민참여 활성화로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사회혁신적 갈등관리제도를 확산하고자 함

6)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 자치분권 로드맵의 추진기반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을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3〉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중점 검토과제

검토과제	주요내용
① 지방분권국가 선언	지방분권 원리를 헌법질서로 규정, 지방자치를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정립
②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확대 및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 완화 검토
③ 자치단체 사무범위 확대	자치사무권 보장 강화위한 중앙-지방사무 배분원칙 규정 검토 국가 및 지방사무 구체적 명시 검토
④ 과세자주권 확대	현행 헌법 상 엄격한 조세법률주의 완화 검토
⑤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재정·세제 수단을 활용한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 제고
⑥ 제2국무회의 신설	중앙-지방간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제2국무회의의 헌법적 근거 마련
⑦ 지방정부 명칭 변경	현행 헌법 상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추진

자료 : 행정안전부(2017), 자치분권 로드맵

3. 시사점

- 지방정부 민선7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회문화, 기술, 경제, 생태환경, 정치·정책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심화로 유소년층 감소 및 노년층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는 고령인구 부양 부담 증가와 국가경쟁력 악화를 야기
- 총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미래의 경제활동인구인 청년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인구 오너스시대 도래
- 임신가능여성과 고령자비율이 0.2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소멸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 한국의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2012년 기준)는 44.9%를 기록하며 미국(47.8%)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로 경제적 불평등 심화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의 자동화로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변화가 예상되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사회변화대응 필요
- 미래산업을 선도할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성장 토대마련
- 메이커운동은 팹랩, 시제품제작소 등 다양한 메이커 공간의 필요성과 창의성과 상상력에 기반 한 융합능력을 가진 인재양성 필요
- 기술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자동화와 무인화로 인해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돼 이에 따른 대응마련 필요
- 미국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향후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세계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음
-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차량, 숙박 등 기존의 규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상호거래에서 나타나는 윤리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
-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친환경 재료와 소재를 이용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환경시장의 대두가 예상되며, 청정생산 기술의 등장으로 산업구조가 친환경

으로 변환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자원고갈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대체 에너지원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기반 에너지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
- 미세먼지의 일상화로 생수와 차, 마스크,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 클린상품과 외출 자제로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등의 소비가 증가하는 등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있음
- 기존의 북핵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체제 구축과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 기대전망
- 이민과 난민문제는 단순한 국경의 이동을 넘어 테러와 분쟁 등 폭력적 형태로 진 행돼 특정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문제로 확산될 조짐
- 문재인 정부의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으로 자치분권 로드맵추진에 따라 지방분권 가속화



〈그림 2-19〉 전라북도 민선7기 메가트렌드분석

3

장

시·도별 민선7기 정책분석

Jeonbuk Institute

-
1. 주요공약 및 정책현황
 2. 핵심정책 분석(빅데이터 분석)
 3. 전라북도 10대 아젠다 설정 전문가 델파이조사

제3장 시·도별 민선7기 정책분석

1. 주요공약 및 정책현황

1. 주요정당 10대 공약

○ 민선7기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정당의 공약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정당의 공약은 주요 정당인 정당번호 1번 더불어민주당부터 5번 정의당까지로 범위를 설정 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정당별 10대 공약집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 각 정당의 10대 공약 세부내용은 부록을 참고

1)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은 청년일자리, 미세먼지문제 해결, 재해·재난·먹거리 등으로부터의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등의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였음

〈표 3-1〉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주요내용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1	노동 (중소벤처)	청년행복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2)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3) 청년이 일하고 싶은 혁신산업단지 조성 4) 청년의 해외취업 확대 지원 5) 청년고용의 공정한 출발 지원 6) 청년여성 '내 일 찾기 센터(가칭)' 운영 7) 청년일자리 고용안전망 강화 8)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 9) 고졸 인력 양성 및 고졸재직자의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10) 청년 맞춤형 주택정책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2	환경	미세먼지 해결	1)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기질 예보 정확성 제고 2)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 3) 건강취약계층(노인, 영유아 등) 보호 및 학교미세먼지 관리강화 4) 환경 조성 및 국제협력 강화
3	안전	국민생활안전	1)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 사전차단 2)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3)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감축 4) 재난사고 전담 신속대응센터 설치 등 재난 신속대응 5) 초고층건물 안전관리기준 및 다중이용업소 피난설치기준 강화 6)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7) 주민밀착형 치안강화를 통한 범죄 예방 8)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 절반감축 및 건설현장 안전강화 9) 원전 안전 기준과 원전 주변지역 주민보호 대책 강화
4	과학기술 정보통신 교육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1) 과학기술혁신 2) 혁신창업 3) 사람 혁신 4) 사회제도 혁신 5) 규제혁신 6)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 육성
5	외교통일 국방	한반도 평화	1)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으로 남북 공동 번영 달성 3) 남북 교류 다양화·활성화로 상생의 남북관계 형성 4)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 해결 5) 통일공감대 확산으로 평화·통일의지 고양 6) 신경제지도 추진을 통한 한반도의 동북아 평화경제협력허브로 발전 및 평화번영정책의 외연 확대 7) 책임국방 구현할 수 있는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 8)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 9) 보훈가족 위한 의료·요양시설 확충 및 국립묘지 안정능력 확충 10) 국민외교 구현, 영사서비스 확대로 글로벌 통상질서 확립에 기여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6	행정자치 건설교통 농림해양수산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1) 중앙의 권한·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현 2) 주민참여제도 확대 및 개선으로 주민권리 강화 3) 청정분권 실현 4) 혁신도시 시즌2(스마트시티)로 균형발전 완성 5) 도시재생뉴딜로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질 개선, 일자리창출 실현 6)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 육성 7)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대도시권 교통난 획기적으로 해소 8)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9) 미래농업의 핵심주체 육성하고 식품산업의 지역거점산업 육성 10) 어촌 살리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7	노동 경제 (중소벤처)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2)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및 소득 향상 3)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보장, 상가세입자의 권리보장 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충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확대 5) 지역맞춤형 일자리 위해 지자체에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6) 노동시간 단축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7)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으로 차별없는 일터 조성 8) 국민에게 편안한 쉼터, 좋은 일터로 농촌을 재생 9)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로 서민부담 경감 10) 노동존중 사회실현과 실직·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8	정치 산업 (중소벤처)	상생하는 공정경제	1) 재벌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 제도화 2)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3) 납품단가 적정가격 보장으로 공정한 시장 형성 4) 소비자 권익보호 확대, 공정거래 감시 역량 강화 5)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이익 보호 6) 공정과세 실현으로 정의사회 구현 7)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정책금융과 금융혁신을 통한 생산적 금융 실현 8) 소비자 우선의 포용적 금융 실현 9)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으로 경제의 허리 강화 10)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 집중 육성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9	보건복지 교육 문화관광 건설교통	보육, 교육, 복지, 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1) 유아교육 만족도 향상, 안심보육환경 조성, 초등돌봄 확대 2) 고교무상교육실현, 국가장학금 확대, 취약계층 교육복지 확대 3)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추진 지원 4)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및 종사자 처우 개선 5) 호도정책 시행 6)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강국 건설 7)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8) 계층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선순환 주거복지 구현
10	여성	성평등 사회와 가족 행복	1) 성평등 사회 완성 노력 2) 사회 각 분야의 여성참여 및 여성대표성 향상 3) 젠더폭력 근절, 여성 안전사회 구현 4) 인권·성평등 교육 강화,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5) 위기청소년의 새로운 출발과 건강한 성장 지원 6) 위생용품 바우처제도 도입 등으로 여성청소년 건강한 성장지원 7) 양육비 지원 강화 등 으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8)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 지원 9) 일과 삶의 균형위한 건강한 일자리 지원 강화

2) 자유한국당 10대 공약

- 자유한국당의 10대 공약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대상 정책, 재정정책을 통한 서민·중산층의 가계부담 완화, 기업지원을 통한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해결 등의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표 3-2〉 자유한국당 10대 공약 주요내용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1	노동 산업지원	자영업자·소상공 인 가살리기	1) 최저임금 합리화 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력 회복 3)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
2	재정경제	서민·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1) 서민 세금 줄이기 2) 가계부담·금융부담 줄이기 3) 강동전세피해 방지 위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 인하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3	재정경제 농림해양수산	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1) 법인세 인하로 기업살리기 2)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3)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통한 69만 일자리 창출 4) 4차산업 육성 5)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6)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기
4	환경 안전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1) 미세먼지 발생원인 줄이기 2) 미세먼지 제대로 측정하기 3)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지키기 4) 중국에 미세먼지 피해보상 촉구
5	통일외교 통상 국방	완전한 북핵폐기 위한 강한안보 당당한 외교	1)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로 북핵 대응 외교력 강화 2) 완전한 북핵 폐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 구축 3) 대북 퍼주기 막고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시대 개막
6	노동 보건복지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1) 일자리(고용) 안전망 구축 2) 자살이력 위기가정 보호 강화 3) 장애인과 함께 따뜻한 동행
7	여성 보건복지	저출산 극복,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만들기	1) 일가정양립 - 엄마·아빠 출산휴가 / 육아휴직 보상 2) 임신(난임)·출산·보육 국가가 함께 책임 3) 한부모도 마음껏 양육 -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8	보건복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1) 노인복지청 설립 2) 어르신 부담 완화 3) 홀로 어르신 지원 강화 4) 경로당국가지원 확대(식사도우미, 주치의제도, 양곡비, 냉난방비) 5)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6)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
9	기타(청년) 건설교통 문화관광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	1)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청년기본법 제정) 2) 청년 주거복지 확대 3)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4) 청년 대상 국내탐방 지원 '꿈찾아발굴단'
10	교육 안전 과학기술 정보통신	아이들의 교육, 돌봄,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1) 방과후 동지학교 설립으로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육 통합 운영 2)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부활 3) 학교에서 4차 산업 인재양성 교육 4) 정시확대로 대입제도 정상화 5)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조성 6)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3) 바른미래당 10대 공약

- 바른미래당은 1순위 공약으로 경제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수 있는 정책, 미세먼지해결정책,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표 3-3〉 바른미래당 10대 공약 주요내용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1	재정경제 산업자원	활력 넘치는 바른 경제, 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	1)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적용제도 법제화 2) 실패경험이 성공의 씨앗이 되는 '칠전팔기 플랫폼' 구축 3)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청년 취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4) 중소기업 재직 청년대상 국민주택 및 주택 특별공급 우선분양 5)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 최대 20% 할인 6) 소상공인 맞춤형 AI 상권분석시스템으로 생존율과 자생력 강화 7)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로 사회안전망 구축 8)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9) 중소기업에 피해가는 블랙프라이데이의 불공정 구조 개선 10) 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갑질 및 불공정 거래 근절
2	노동 보건복지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	1)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2)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동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4) 임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 5)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 접종 6) 미세먼지 없는 공공시설 실내놀이터 및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7) 학교환경 위해물질 사전 차단 종합점검체계 마련 및 학교내 위해물질 측정기 설치,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8) 학교 안전 보호지역 통합지정 및 통학로 학생 보행 안전 확보 9) 학교 안전사고 무상치료 실시 10) 주민자치센터 '초등돌봄 재능교실' 운영 11) 아이돌보미 임금보전제 실시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3	환경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친환경에너지 푸른 미래	1) 지역별 미세먼지 맞춤형 관리 2) 1억 그루의 미세먼지 정화숲 조성 3)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특별 대책 수립 4)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과학적 규명으로 근본대책 마련 5) 국내 미세먼지 감축위한 제도 개선 6) 폐지수거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7) 재활용품 공공기관 의무구매로 재활용 활성화 8) 청정에너지 · 에너지 복지 시대를 여는 에너지 분권 실현
4	보건복지 문화관광 건설교통 과학기술 정보통신	생활의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는 복지	1) 통신복지혜택 강화로 통신비 부담 완화 2) 영화관람료 · 음원사용료 소득공제 3) 알뜰하고 여유로운 결혼식 위한 공공기관 개방 4) 금연 실천시 건강보험료 50% 할인 5) 공공도서관 밤 10시까지 연장 개관 및 문화행사 활성화 6) 반려동물 관리체계 선진화 및 동물복지 강화 7) 저소득 청년 1인가구 · 신혼부부에 주거비 지원 8) 친육아주택인증제도 도입 9) 주거빈곤 차상위 고령자대상 주거 바우처 보조 확대 및 광열비 보조 10) 지자체별 장기공공임대 공급 할당제 실시 및 공공분양 확대 · 후분양제 활성화
5	교육	바른 나라를 이끄는 교육, 밝은 미래를 여는 교육	1) 학생·학부모 교육정책 참여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2) 초등돌봄 및 방과후수업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3) 고교무상교육 및 중고교 무상교복 실시 4) 공교육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 프로그램 확대 5) 학교 중심 보안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보안 강화 6) 마을번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제도 실시 7) 고교-대학 연계 창업 및 창직 교육 8)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단계 평생직업교육
6	안전 여성 사법윤리	일상이 안전한 걱정없는 안심 미래	1)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2) 성폭력피해자 2차 피해방지 및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3) 재난약자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4) 집단 거주시설에 야외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5) 지역별, 재난 유형별 맞춤형 안전체험관 신설 통한 안전교육 강화 6) 가정폭력 가해자 즉각 분리 및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7)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예방 강화 8)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7	보건복지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	1)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부여 2) 간호·간병 인력이 부족한 지역 공공병원의 간병비 한시적 무료화 3) IoT 기술 기반의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 4) 스마트한 어르신 지킴이,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 도입 5) '뺑다방'의 악덕 상술로부터 보호 6) 노인을 위한 문화일자리 확대 7) 장애인의 주거권, 이동권, 노동권 강화 8)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9) 장애인 가족 휴식권 보장 10)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지원
8	농림 해양 수산	황혼의 농어촌에서 해 뜨는 농어촌으로	1) 2018년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2) 소득 지원 및 월급제로 농어업인 복지 강화 3) 농어촌관광 활성화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4)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 고부가가치화로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5) 농수산물 소비자 및 안전·안심 농식품 공급 확대로 농어업 소득 건인 강화 6) 고령농, 여성농 등 특색에 따라 맞춤형 영농지원 7)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 바우처 지원 확대 8) 중국어선의 긴급 피난을 약용한 수산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강화
9	국방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이 대접받는 나라	1) 국가를 위해 헌산봉사하는 군 장병 창취업 지원 확대 2) 넓은 군대문화의 개선으로 선진 병영문화 조기 정착 3) 조국에 헌산봉사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4) 안보 희생지역, 군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 5) 직업 군인과 가족의 생활 여건 향상
10	행정자치 정치	주민이 행복한 지방 분권 지방을 살리는 바른 정치	1) 지방세 확충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동시 추진으로 지방 재정 강화 2) 사회복지비의 국비 전환 확대로 지방재정 확충 3) 강력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 강화 4) 주민소환 대상 확대를 통한 주민의 직접통제권 강화 및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 5) 모든 지방정부에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 및 규범 내용 강화 6) 14년째 동결된 아통장 수당 인상

4) 민주평화당 10대 공약

- 민주평화당은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강화 정책과 재정여건을 개선하기위한 정책을 1순위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일자리정책, 청년정책, 쌀 생산관련 정책, 지방교육발전정책 등을 주요정책으로 제시함

〈표 3-4〉 민주평화당 10대 공약 주요내용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1	재정 경제	더 많은 지역예산 지자체 복지급여 중앙정부 부담으로 지역사업 활성화	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현금급여 매칭 부담 면제 2) 지역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요소 가중치 상향 반영 3) 지방교부세율 현행 19.24% → 25%로 상향 조정
2	노동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 지역주민 의무고용, 지역인재 할당제	1)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사업에 지역 거주민 40% 이상 의무고용 2)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고용 50% 이상 의무화 3)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강제 및 책임부여 4) 모든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지역인재 의무고용할당제 확대 5)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역 내 거주민' 포함
3	기타 (청년)	청년이 미래다 소득·자산 부모자산별 청년기본소득 도입	1) 부모자산별 청년기본소득 도입 2) 5년(60개월분)을 개인의 생애설계에 따라 탄력적 지원 3) 청년기초생활보장 현금을 소득·자산·부모자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4) 현재 청년에게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 복지인 청년취업수당, 청년취업준비수당, 청년근로장려세제, 대학등록금지원 등을 청년기본소득으로 포괄하여 보편적 제도로 안착 5) 대학등록금 대출이자 무이자화
4	농림해양 수산업 자원	쌀 소비 확대 '쌀로 만드는' 식품·음료제조업 지원, 공공급식에 햅쌀 공급	1) 식품·음료 제조업에 쌀 소비 촉진 지원제도 도입 2) 공공급식에 '햅쌀'을 공급하여 이용자 복지 증진 및 쌀 소비량 제고 3) 북한에 쌀 연간 40만톤 지원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4) 남북간 물물교환 바터무역(Barter Trade) 방식을 통해 유전자 조작 논란에서 자유로운 북한의 옥수수, 콩 등과 교역
5	교육	명문 지방교육 부활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역별 4년제 산업대학 육성	1) 수도권과 일류대에 집중되고 있는 대학 재정자원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공평분배로 전환 2) 4년제 산업대학 20개 설립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6	보건복지 건설교통 여성	세입자가 웃는 주거복지 임대료 상한제, 여성안심주택, 청년공공기숙사 건립	1) 주택임대료 및 상가임대료의 제한(1년 5% 인상 → 2년 5% 인상) 2)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권 강화 3)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4)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성 안심주택 공급 확대 5) 청년 공공기숙사 권역별, 대학가, 산업 및 벤처단지 등에 확대 공급
7	보건복지	빈틈없는공공복지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장기요양시설 운영, 공공서비스센터단 설립 품격 있는 서비스	1) 산후조리를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 2)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 전국 200개소 이상 추가 설립 3) 지자체에 전문화된 '공공사회서비스센터'를 설립
8	정치	'민심 그대로' 선거제 국회의원·지방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2) 권력분권,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분권형 개헌 추진
9	통일외교통 상	평화가 강물처럼 평화체제에 걸맞은 남북교류 확대	1) 남북 대학생 교환학생 연 500명 규모로 교류 2) 남북 시군구 자매도시 100개 체결 및 상호방문 교류 3) 남북 우편 교류 4)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 기반 구축
10	건설교통 산업자원	지역균형발전 열악한 호남 SOC에 획기적 투자	1) 호남권 SOC사업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 2) 호남권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보 3) 새만금을 낙후된 전북의 미래발전 거점으로 개발

5) 정의당 10대 공약

○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청년정책을 당의 1순위 정책으로 제시하였고, 노동(근로) 정책, 여성과 아동돌봄정책, 노인과 장애인돌봄정책, 지역경제살리기 정책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움

〈표 3-5〉 정의당 10대 공약 주요내용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1	기타 (청년)	희망찬 청년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실시 2) 공공기관부터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기화균형채용제 도입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1	기타 (청년)	희망찬 청년의 미래를 만들어겠습니다	3) 시도립대 무상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4) 청년 아르바이트 대상 갑질 및 체불행위 근절 5) 지역형 청년실업부조 도입 6) 대학기숙사 확충 및 청년 1인 가구 주거 지원 7) 청년 참정권 확대와 청년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
2	노동	노동이 당당한 도시 노동이 존중되는 지방자치	1)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유로운 삶 2) 노동인권 보호 및 구제 3) 2020년까지 비정규직 제로화 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5) 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노동 존중 실현 6)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7) 최저임금 120% 이상 수준의 생활임금 보장 8) 노동행정의 지방분권 실현
3	여성 기타(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아동이 행복한 도시	1) 슈퍼우먼 방지 조례로 일·생활 균형 달성 2) 성별임금공시제 도입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3) 여성 안심도시 실현 4)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실시, 신종 3대 폭력 피해자 지원 5) 비혼·여성 1인가구 취약주거환경 개선 6)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등 여성건강권 보장 7)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8) 질 좋은 보육 환경 조성 및 아동 지원 강화
4	보건복지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	1) 주민 건강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2)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보장 3) 지역형 장애인 모델 구축
5	기타 (농업 중소상공인 지역경제)	농업·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1) 농민 기본 생활 보장, 안전한 먹거리·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보호 3) 공정하고 활기찬 지역경제
6	건설교통	서민 주거복지 확대 교통 공공성 강화	1)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부동산·주택시장 정상화 2)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과 환경을 생각하는 교통 정책 실시
7	교육 기타 (문화예술 방송통신언론)	풍족한 삶과 행복을 위한 교육문화예술	1) 사람의 미래를 우선하는 정의로운 교육 2) 예술가가 행복한 지역사회,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우리 동네 3) 지역언론 활성화, 주민의 정보 접근권 향상
8	환경 과학기술 정보통신	생태친화적인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나라	1)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국토 조성 2) 에너지 정의 실현 3) 풀뿌리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9	통일외교통상 기타 (인권, 소수자, 동물복지)	평화, 인권, 동물권 보장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	1)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 2) 인권존중 지방자치 시대 개막 3)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강화
10	행정자치 재정경제	자치분권 확대로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	1) 자치분권 확대 2) 지방행정 개혁 3) 지방의회 개혁 4) 제대로 일하는 지방의회 실현 5) 주민자치 실현 6) 지방재정 분권 실현

2. 전북도지사 및 광역시도지사후보 주요공약

-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라북도와 유사한 환경의 시도지사 후보의 주요공약은 매니페스토의 민선7기 시도지사 후보 공약 답변지의 내용 중 10개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내용을 중점으로 정리하였음

1)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송하진 후보를 비롯하여, 민주평화당 임정엽, 정의당 권태홍, 민중당 이광석 후보의 핵심공약을 정리함
- 전반적으로 농수산업 일자리 확대 농업생산력 증대, 새만금개발 및 활용방안 등의 전라북도의 특성이 반영된 공약과 4차산업혁명대응, 미세먼지문제 대응, 청년정책, 친환경에너지정책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음
- 각 후보별 10대 공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0대 공약의 세부내용은 부록에 따로 수록하였으니 참고 바람

〈표 3-6〉 전라북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전라북도지사 후보	공약순위	공약제목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1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2	전북산하 1000리길 조성
	3	4차산업혁명대응 Big3 대표사업육성
	4	친환경 전기차보급 및 경유차 저공해화로 미세먼지 저감
	5	우리아이 정밀검진 건강관리 책임제
	6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7	전라북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
	8	농산어촌 마당캠프 활성화
	9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
	10	사회적 가치활동 연계 청년기능수당 신설
임정엽 (민주평화당)	1	1조원 도민배당 고향펀드
	2	에너지 뉴딜
	3	익산, 전라북도 제2청사 건립
	4	로컬푸드 2.0
	5	청년배당제
	6	농림수산업(農·UP) 일자리
	7	출산이 행복한 전라북도 - 공공산후조리원/조산원
	8	'집'은 생존권, '주거 기본권' 확립
	9	지역중소상인을 위한 '같이 일해 봄 직職'
	10	건강한 도시 만들기 -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조성
권태홍 (정의당)	1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벨트 조성
	2	수소연료전지자동차상용화센터 유치
	3	마을자치경제와 농촌르네상스 시대
	4	4차산업혁명 인재양성센터 설립
	5	공공건강복지 허브 구축
	6	아동부터 무상으로 실시
	7	공공실버아파트, 실버임대료제 도입
	8	선진 장기요양서비스 구축
	9	산모·영유아 방문간호 실시
	10	지자체 공급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이광석 (민중당)	1	새만금통일농업전진기지 건설
	2	농민수당 연 240만원 지급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4	GM군산공장 국가매입, 미래형친환경자동차 연구/개발/생산단지조 조성
	5	GMO 없는 전북
	6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전북
	7	차등없는 기초노령연금 30만원 지급
	8	지방자치 적폐 청산
	9	청년월세 10만원 상한제
	10	무상교복! 무상생리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전북

자료 : 2018 제7회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공약 답변 재정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 경기도

- 경기도는 총 5명의 도지사 후보가 매니페스토의 공약 답변을 하였으며,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바른미래당 김영환, 정의당 이홍우, 민중당 홍성우 후보의 10대 공약내용을 정리하였음
- 각 후보별로 지역화폐로 지역상권 활성화,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북부권역의 평화공단 조성 등을 최우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 3-7〉 경기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순위	공약제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	지역화폐로 상권 활성화
	2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4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5	소방안전 특별점검단
	6	경기 청년배당 실시
	7	산후조리 지원
	8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9	어린이 치과주치의
	10	장애인 희망고속버스
남경필 (자유한국당)	1	혁신성장으로 반듯한 일자리 70만개 창출
	2	따복하우스 공급 확대 등 경기도형 주거복지를 강화
	3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
	4	경기도 전역 재난안전 골든타임을 확보
	5	도민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으로 건강한 경기도 조성
	6	전업주부의 제2의 인생 찾기와 사회참여 지원
	7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알프스프로젝트 추진
	8	따복어린이집 확대 등 경기도형 공보육을 강화
	9	중고생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으로 사교육 걱정 해소
	10	광역서울도와 규제혁신으로 경기도의 새천년 개막
김영환 (바른미래당)	1	경기북부권역 '평화공단' 조성
	2	'후불형 의료시스템' 도입
	3	미세먼지 잡는 도지사
	4	공공 와이파이 존(wifi-zone) 전면 확대
	5	아이 돌보미 '임금보전제' 도입
	6	문화예술 '10·10·10' 시행
	7	과학기술 및 R&D 수퍼 밸리 조성(한국의 실리콘밸리)
	8	'도시 농부' 10만명 육성
	9	진로중심 인재교육 지원
	10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아이 건강 챙기고, 부모님 걱정 덜어주고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순위	공약제목
이홍우 (정의당)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노조와 단체협상 의무화
	2	청년공정출발지원금 지급
	3	경기북부에 통일경제특구 유치
	4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
	5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상점가 1374개 확대
	6	육아휴직에 아바 의무할당제 실시
	7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이상 확대
	8	경기동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9	생태계보전보상제 도입
	10	동물복지시민위원회 설치로 동물복지 시민거버넌스 실현
홍성규 (민중당)	1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개정
	2	주한미군기지 사용료, 통행료 징수
	3	최저임금 1만원 경기도, 생활임금보장
	4	〈정규직전환 특별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5	공공부문 민간위탁 폐지, 직접고용실시
	6	청년월세 10만원 실현 조례제정
	7	청년도동인권담당관 신설
	8	도내 공무원, 공기업 채용 확대, 청년 쿼터제 도입
	9	경기도내 기초농산물 전량수매, 공공 직거래센터 운영
	10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자료 : 2018 제7회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공약 답변 재정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3) 강원도

- 강원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최문순 후보만 매니페스토실천공약을 제출하여 다른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음

〈표 3-8〉 강원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강원도지사 후보	공약순위	공약제목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1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착공
	2	아이 낳으시면 월 7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3	어르신 일자리 연 4만개 확보
	4	청년 일자리 수당 월 60만원씩 지급
	5	스마트 농장 · 빅데이터 시티 조성
	6	첨단 의료기기 산업단지 육성
	7	금강산 관광 재개
	8	평화지역을 올림픽 개최지처럼
	9	문화와 경관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폐광지역 발전 사업 완성
	10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정

자료 : 2018 제7회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공약 답변 재정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4) 충청북도

- 충청북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와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까지 총 세 후보의 10대 공약을 정리함
- 각 후보별로 충북선 철도의 고속화 추진, 꽃대궐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따른 소득과 인구증가, 30대 그룹 계열사 유치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제시함

〈표 3-9〉 충청북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충청북도지사 후보	공약순위	공약제목
이시종 (더불어민주당)	1	충북선 철도 고속화
	2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3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
	4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
	5	웰니스관광으로 충북의 백두대간 쉼터 조성
	6	단양군내 병원 건립 지원
	7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지원(어린이집·초·중·고·특수학교)
	8	청년·중장년 협업 '청년농업회사' 설립
	9	남부·북부출장소 기능 확대 방안
	10	미호천 중심 충북 수(水)살크로드
박경국 (자유한국당)	1	충북 꽃대궐 프로젝트
	2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
	3	공약명: 충북형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4	오송을 바이오(보건의료)산업 수도로 육성
	5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6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7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8	한반도평화고속도로 건설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9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 추진
	10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충북 실현
신용한 (바른미래당)	1	30대 그룹 계열사 유치
	2	충북 어르신 무료 목욕 및 이·미용 쿠폰 제도 도입
	3	버스-택시 환승할인제도 도입
	4	청주 야구장, 종합운동장 등 미호천변 이전
	5	충북 재기중소상공인기업원 설치
	6	실패스팩제도 도입
	7	충북형 청년 복지카드
	8	(충북형)분권형 도정운영 방안
	9	전국 최초 푸드트랙재단 설립
	10	진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자료 : 2018 제7회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공약 답변 재정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5) 충청남도

- 충청남도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의 10대 공약을 정리함
 - 코리아당 차국환 후보는 공약답변서를 제출하였지만 10대공약의 내용 미기재로 제외함
- 양승조 후보는 충남형 아동수당지급으로 저출산 및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공약을 우선순위로, 이인제 후보는 충남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순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표 3-10〉 충청남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충청남도지사 후보	공약순위	공약제목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1	충남 플러스 텐(10+10) 아동수당 지급
	2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석탄화력발전소 청정연료 대체 및 조기 폐쇄)
	3	수도권규제완화 정상화 및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강화
	4	고교무상교육 실현
	5	공공주택 20,000호 공급 및 충남형 사회주택 5,000호 건설
	6	'직장연합어린이집' 도입 지원 및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확대
	7	청년 지역인재 충원과 창업(Start-up)지원 강화
	8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9	농어민 지원 강화
	10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및 태안 연장,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추진
이인제 (자유한국당)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및 첨단벤처산업단지 조성
	2	성환중축장 이전부지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건설
	3	어르신 통합복지카드 발급
	4	시내버스와 수도권전철 환승 할인 추진
	5	지역별 산재된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 육성
	6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7	권역별 맞춤형 미래전략 수립
	8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9	충남 아레나 건립
	10	충남개발공사의 도시개발 역량 확대해 정주여건 개선

자료 : 2018 제7회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공약 답변 재정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6) 전라남도

- 전라남도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정의당 노형태 후보, 민중당 이성수 후보까지 총 세 후보의 10대 공약을 정리함
- 김영록 후보는 간척농지에 수산업을 활용한 에너지 융합복합단지 조성을 최우선 공약으로, 노형태 후보와 이성수 후보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제도, 농민수당지급 등의 공약을 우선과제로 제시함

〈표 3-11〉 전라남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전라남도지사 후보	공약순위	공약제목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1	간척농지를 활용한 수산양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2	나주혁신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에너지신산업) 조성
	3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구축
	4	미세먼지 안심학교 실현
	5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및 해양치유단지 조성
	6	해경 제2정비창 유지 및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7	EMU 고속철도차량정비단 유치
	8	전남 동부지역본부 확대 운영 및 제2 부지사 신설
	9	6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남관광공사 설립
	10	아이 좋아! 엄마 좋아! 맘(Mom)편한 전남 만들기
노형태 (정의당)	1	농민기본소득 시범도입
	2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3	노후어선수리 및 건조 지원사업 확대
	4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과 수산물 산지거점유통단지 확대
	5	어린이병원비 상한제
	6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트라이앵글 구축
	7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
	8	청년고용활당제와 지방공기업 지역대학 채용 할당제 실현
	9	마을 공동급식과 공동 숙소 마련
	10	내 삶을 바꾸는 전남 발전을 위한 행정 혁신
이성수 (민중당)	1	농민수당 연간 240만원 지급
	2	자주통일 새시대 선도
	3	노동부지사제 도입
	4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5	청년의무고용제 5% 실현
	6	국공립어린이집 50%확충
	7	혁신교육으로 농업, 해양, 공업, 우주항공 인재육성
	8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9	지진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10	프랜차이즈 가맹점본부의 책임 확대

자료 : 2018 제7회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공약 답변 재정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7) 경상북도

- 경상북도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 정의당 박창호 후보 까지 총 네 후보의 10대 공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
- 경북도지사후보의 우선순위 과제로는 도정계획수립에 도민의 참여로 민관협치를 통한 거버넌스형 도정구현, 문화관광공사설립,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함

〈표 3-12〉 경상북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경상북도지사 후보	공약순위	공약제목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1	도민주도의 도정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계획단' 운영
	2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 확보
	3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
	4	안전 분야 연구·교육·체험·산업 클러스터 구축
	5	경북 행복마을 생활도우미 '복지관리사'제도 운영
	6	농·산·어촌 지역에 365 생활권 선도적 추진
	7	행복1번지 경북, '행복두레' 마을가꾸기사업
	8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개조 프로젝트
	9	지역맞춤형 도시재생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개발
	10	경북 'MICE 산업 특구 지정 및 경북 마케팅 주식회사' 운영
이철우 (자유한국당)	1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2	경상북도유통공사 설립 - 농수축산물통합마케팅지원체계 구축
	3	경북형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4	권역별 4차 산업혁명 선도형 융합산업벨트 조성
	5	경북4대정신문화 관광자원화
	6	경상북도 동부청사 설립
	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성
	8	초중학교 의무급식 지원
	9	경북형 선도치매관리제 도입
	10	출산과 양육을 위한 온종일 돌봄시스템 구축
권오을 (바른미래당)	1	신혼부부 주택자금 1억원 무이자 지원
	2	어린이집 공립화 전면 추진 및 공사립간 격차 해소
	3	공장용지 무상임대 및 기업인 우대
	4	국가의무교육인 중학교 의무급식(무상급식) 전면시행
	5	농민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
	6	노인 의료비 지원 및 용돈 일자리 만들기
	7	안전 경북 25시
	8	도민 중심 온디맨드(on-demand) 행정서비스 확립
	9	환동해 시대 경제 중심지로 도약
	10	낙동강 수질 생태계 복원

경상북도지사 후보	공약순위	공약제목
박창호 (정의당)	1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화
	2	고교까지 전면무상급식
	3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4	청년농어민기본소득
	5	만19세 미만 무상의료 전면 실시
	6	청년수당 도입
	7	아동주치의 제도
	8	일자리노동부지사 임명·일자리노동위원회 구성
	9	모든 시·군청에 <노동조합설립 지원창구>설치
	10	(가칭)경북에너지공사 설립

자료 : 2018 제7회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공약 답변 재정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8) 경상남도

- 경상남도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의 10대 공약을 정리하였고, 김경수 후보는 제조업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우선과제로, 김태호 후보는 3개의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제시함

〈표 3-13〉 경상남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경상남도지사 후보	공약순위	공약제목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1	제조업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
	2	서부경남KTX 조속 추진 및 부울경 광역교통기구 설립
	3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4	로컬푸드 직거래를 통한 농축수산업 발전
	5	경남페이 도입으로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6	민간-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7	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확충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100% 설치
	8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9	맘 편한 출산·보육 환경 조성
	10	경남 청년터 신설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치를 통한 청년지원사업
김태호 (자유한국당)	1	3개 국가산단(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임기 내 조성 및 승인
	2	남부내륙철도 임기 내 착공
	3	핵심주력산업 체질 강화
	4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
	5	중·소상공인 신용보증공급 확대
	6	경남 도립의료원 부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7	청년스타트업 육성시설 스테이션G(경남형 스테이션F) 설립
	8	Jump 중년, 50+(플러스) 정책
	9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10	자연친화적 유럽형 치매생태마을 조성 시범사업 추진

9) 제주도

- 제주도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10대 공약을 정리함
- 문대림 후보는 환경과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정책의 기조 전환을 우선과제로, 원희룡 후보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의 투기성 투자의 제동과 관리체계 구축을 우선과제로 제시함

〈표 3-14〉 제주도지사 후보별 10대 공약

제주도지사 후보	공약순위	공약제목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1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제주 조성
	2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
	3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4	제주형 물류체계 구축
	5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6	(구) 탐라대 부지 활용 4차 산업혁명 메카 육성
	7	3대 포용 무상복지 실현(노인의료, 출산케어, 청소년·어린이 교통)
	8	환경총량제 실시
	9	공익형 소득직불제 강화
	10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벨트 구축
원희룡 (무소속)	1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및 관리체계 완비
	2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3	공무원·공기업 등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4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보육1등, 교육1등 제주 구현
	5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요양시설 대폭 확충으로 안정적 복지체계 구축
	6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7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주,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제주 구현
	8	4차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 및 카본프리 아일랜드 지속 추진
	9	도민과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10	특권과 반칙이 없는 청렴, 공정 제주사회 구현

2. 핵심정책 분석(빅데이터 분석)⁵⁾

1) 분석 개요

○ 민선 7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시도지사 후보의 선거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언론, SNS 등을 빅카인즈와 텍스트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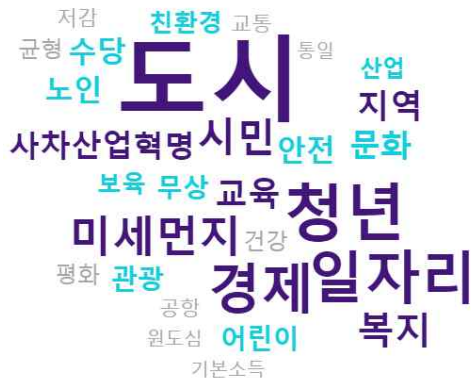
- 분석대상 : 국내 신문기사, 방송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니페스토운동본부 선거공약집
- 수집기간 : 2018년 3월 13일~6월 12일(지방선거 전일로부터 3개월), 선거공약집 등록기간
- 수집채널 : 조선일보, KBS, MBC, SBS,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 키워드 : 지방선거, 공약
- 수집 및 분석량 : 4495건
- 분석방법 : 텍스트를 이용한 빈도수와 매트릭스작성, UCINET 6.0 활용 네트워크 분석 등

2) 분석 결과

(1) 광역자치단체장후보 5대 공약 분석

○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도시, 청년, 일자리, 경제, 미세먼지, 시민, 복지, 교육, 지역 등이 주요 키워드로 분석되어짐

- 이를 보면 지역 경제 발전, 청년 일자리 창출, 복지 및 안전, 교육, 미세먼지 관련 대책 등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슈로 나타남



〈그림 3-1〉 전국 5대공약 핵심단어 워드클라우드

5) 전복연구원 이슈브리핑 제175호(2018), “빅데이터로 본 민선7기 지방선거의 의미” 재구성

(3) 기타 도지사 후보 5대 공약 분석

- 기타 도지사 후보의 5대 공약의 핵심단어는 경제, 일자리, 청년, 발전, 복지 등의 핵심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청년, 일자리, 경제, 복지 등의 핵심단어는 지역별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 강원도를 비롯한 기타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통이슈로 분석되어짐
-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의 공약과 기타 도지사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지역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안전 및 복지 등이 공통적인 이슈로 나타남

〈표 3-15〉 기타 시도지사 후보 5대 공약 핵심 단어

순번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1	수당	3	경제	4	일자리	3	무상	3	청년	5	무상	2	발전	3	도민	5
2	관광	3	복지	3	병원	3	자원	2	노인	3	수당	2	안전	2	반값	3
3	지역	3	평화	3	남해안	3	청년	2	공공 의료	2	어린이	2	균형	2	안정	2
4	일자리	2	청년	2	지리산	2	산업	2	관광객	2	고교	2	지역	2	공기업	2
5			통일	2	경제	2	일자리	2	농민	2	경제	2			공공	2
6			일자리	2	산업	2	기본 소득	2	통일	2	발전소	2			특별 자치	2
7			임금	2	관광	2	급식	2	공항	2	교육	2			복지	2
8			조례 제정	2	해양	2			노후	2						
9			공단	2	벨트	2			수당	2						
10					도시	2			보육	2						

자료 :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175호(2018)

(4) 소셜미디어 및 언론분석

- 유권자의 정책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분석을 실시하였고, 지방선거일 6월 13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분석
 - 소셜미디어의 분석결과 지역, 복지, 개발, 시민, 교육, 도시, 산업 등의 핵심단어가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고, 이는 지역경제, 복지, 개발, 산업, 균형, 부동산 등 삶과 밀접한 이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됨
- 언론분석은 선거직전 3개월 기간으로 한정하여 지방선거와 공약을 키워드로 중앙 일간지와 방송3사의 기사를 분석하였음
 - 언론분석결과 민선7기 선거의 특징은 공약보다는 당, 지역,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음
 - 남북과 평화가 핵심 단어로 나타나 지방선거의 정책이슈가 남북평화 등의 이슈에 비해 덜 부각되는 현상이 발생함
 - 이러한 가운데서도 경제, 도시, 청년, 미세먼지, 산업, 교육 등이 많이 나타나 지역별 핵심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됨

〈표 3-16〉 소셜미디어 및 언론분석 핵심 단어

소셜미디어 분석						언론 분석					
순번	핵심단어	빈도	순번	핵심단어	빈도	순번	핵심단어	빈도	순번	핵심단어	빈도
1	지역	582	16	학교	124	1	정책	1,359	16	산업	506
2	복지	321	17	아이	103	2	더불어민주당	1,354	17	평화	500
3	개발	276	18	민생	101	3	서울	1,145	18	대구	485
4	시민	269	19	환경	93	4	자유한국당	960	19	충북	476
5	교육	261	20	농업	90	5	경제	923	20	도민	456
6	도시	254	21	관광	85	6	도시	908	21	대통령	453
7	산업	243	22	희망	84	7	청년	877	22	교육	425
8	교통	220	23	삶	84	8	경기도	860	23	복지	420
9	부동산	203	24	대통령	83	9	시민	854	24	남북	419
10	여성	166	25	일자리	83	10	제주도	818	25	대전	401
11	균형	157	26	일	76	11	인천	638	26	문화	391
12	경제	156	27	안전	76	12	공항	637	27	문재인	373
13	행복	151	28	장애	73	13	부산	621	28	박원순	357
14	청년	138	29	미세먼지	71	14	경남	577	29	사회	333
15	발전	132	30	문화	70	15	미세먼지	538	30	관광	317

자료 :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175호(2018)

(5) 전북도지사 후보 공약분석

- 송하진 도지사의 101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 마을, 지역, 산업, 관광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 새만금 개발 사업이 전북의 가장 큰 이슈임을 알 수 있음
 - 관광, 길, 문화, 역사, 천년, 공유, 마을 등 문화와 공간, 관광과 자연을 접목한 경제 개발 정책이 주요 공약으로 보이며,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개발정책과 복지가 핵심 공약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유권자의 정책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분석은 지역, 군산, 완주, 경제, 교육, 도시, 전주 등의 이슈가 많이 등장함
 - 이를 보면 지역경제, 교육, 여행, 문화, 부동산, 청년 등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역 이슈로 새만금, 공장(군산GM), 농업 등의 관심도 또한 높게 나타남

〈표 3-17〉 소셜미디어 및 언론분석 핵심 단어

101대 공약 분석						도지사 공약 소셜미디어 분석					
순번	핵심단어	빈도	순번	핵심단어	빈도	순번	핵심단어	빈도	순번	핵심단어	빈도
1	새만금	104	16	농생명	24	1	지역	130	16	개발	24
2	지역	69	17	세계잡버리	23	2	군산	94	17	산업	24
3	마을	65	18	일자리	23	3	완주	77	18	자치	19
4	산업	64	19	노인	23	4	경제	73	19	농업	19
5	관광	47	20	기업	22	5	교육	51	20	학교	19
6	길	42	21	도민	21	6	도시	47	21	여성	19
7	문화	36	22	농촌	21	7	전주	47	22	환경	19
8	주민	35	23	전라도	20	8	전통	45	23	청년	17
9	탄소	32	24	건강	20	9	여행	43	24	상인	17
10	청년	30	25	역사	19	10	사업	33	25	기초	17
11	농업	30	26	천년	19	11	문화	29	26	청소년	16
12	스마트	29	27	지역경제	19	12	부동산	28	27	농정	16
13	농산어촌	26	28	장애인	19	13	새만금	25	28	동네	15
14	에너지	26	29	금융	16	14	일자리	25	29	학생	15
15	생태	26	30	태권도	16	15	공장	25	30	정읍	15

자료 :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175호(2018), 재구성

(6) 주요 정당 10대 공약분석

○ 주요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된 10대 공약을 분석함

- 청년, 교육, 일자리, 안전, 복지, 산업 등의 이슈들이 주요 정당의 공통적 이슈로 분석됨
- 정당별 이슈로 자유한국당은 육아, 난임, 출산, 휴직 등의 여성 관련 이슈가 많았고, 바른미래당은 장애 및 장애인 관련 이슈, 민주평화당은 쌀, 대학, 식품, 호남 등의 지역관련 이슈,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노동, 인권, 복지, 동물 등의 진보 이슈가 높게 나타남

〈표 3-18〉 주요정당 10대 공약 분석 핵심 단어

순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핵심단어	빈도	핵심단어	빈도	핵심단어	빈도	핵심단어	빈도	핵심단어	빈도
1	청년	33	교육	33	교육	37	지역	60	지방	40
2	교육	20	청년	28	지역	31	대학	33	교육	33
3	일자리	20	일자리	22	안전	26	쌀	28	지자체	31
4	안전	18	미세먼지	20	지방	22	청년	26	청년	28
5	도시	17	노인	18	문화	16	지방	23	노동	26
6	산업	16	학교	15	소득	13	산업	18	인권	23
7	창업	15	취업	13	지자체	12	복지	17	건강	23
8	환경	14	산업	13	미세먼지	12	남북	16	여성	22
9	기업	14	출산	12	주민	12	경제	12	동물	22
10	복지	14	기업	11	복지	12	소득	12	복지	19
11	여성	14	복지	11	주택	12	임대주택	11	자치	19
12	경제	14	전통시장	11	농어촌	11	지방자치	11	장애인	19
13	고용	14	규제	11	어르신	11	취업	11	주민	18
14	규제	14	안전	10	재난	11	식품	10	안전	16
15	투자	13	지역	10	학교	11	기본소득	9	문화	15
16	문화	13	가정	9	장애인	11	일자리	9	예술	13
17	기술	12	창업	8	주거	11	균형	9	임금	12
18	지방	12	육아	8	아이	10	고용	9	아동	12
19	공정	11	난임	8	창업	9	호남	9	환경	12
20	건강	11	휴직	8	육아	8	공공기관	8	공정	11

자료 :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175호(2018), 재구성

3) 시사점

- 17개 광역시도지사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청년, 도시, 일자리 등의 순으로 핵심단어가 나타났고, 이는 청년인구감소와 청년실업률 등에 따른 도시활력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지역 이슈로 파악하고 있음

〈표 3-19〉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결과

빈도	공약 (전국)	공약 (전북)	언론	소셜미디어 (전국)	소셜미디어 (전북)	송하진도지사 101대 공약
1	청년	새만금	도시	지역	지역	새만금
2	도시	(자동)차	청년	복지	군산	지역
3	일자리	청년	공항	개발	완주	마을
4	산업	미세먼지	미세먼지	시민	경제	산업
5	미세먼지	농업	산업	교육	교육	관광
6	지역	일자리	교육	도시	도시	(전라도천년)길
7	시민	친환경	복지	산업	전주	문화
8	안전	경제	문화	교통	전통	주민
9	어린이집	건강	관광	부동산	여행	탄소
10	복지	배당	공공	여성	사업	청년

자료 :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175호(2018)

- 전북도지사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보면 새만금, (자동)차, 청년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군산 GM공장 폐쇄에 따른 대안과 청년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활력에 집중하고 있음
- 17개 광역도지사후보들의 공약 중 후순위로 나타나는 핵심단어는 시민, 안전, 복지, 등의 삶의 질에 관련한 정책들로 이루어진 반면, 전북도지사 후보들의 후순위는 농업, 일자리, 경제 등의 산업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민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소셜미디어의 분석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지역, 복지, 개발, 교육, 여성 등의 삶과 밀접한 정책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전북도민들의 정책수요는 군산, 경제, 여행, 사업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수요가 많았음

- 송하진 도지사의 101대 공약과 전국 시도지사공약, 언론, 소셜미디어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1, 2순위인 청년관련 이슈가 송하진 도지사 101대 공약에선 10순위로 나타나 청년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또한, 미세먼지, 안전, 건강, 여성 등 삶의 질 관련 정책 키워드가 송하진 도지사 공약 우선순위 10위안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
-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이슈인 일자리, 지역산업, 4차산업혁명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후속대응 필요

3. 전라북도 10대 아젠다 설정 전문가 델파이조사

1) 조사 개요

- 전라북도 분야별 아젠다 설정을 위한 조사는 관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델파이조사로 진행함
- 1차 델파이조사는 빅데이터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라북도의 10대 분야별로 전문가가 인식하는 핵심아젠다를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개방문항으로 구성하여 질문하였고, 1차 조사에서는 총 24명의 전문가 중 13명이 응답함
-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조사결과를 분야별로 재분류하여 각 분야별로 1차 조사에서 분석된 응답값을 중심으로 분야별 우선순위와 각 분야별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조사함
- 1차와 2차 델파이조사의 조사대상자 및 응답자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20〉 델파이 조사 대상자 및 조사응답자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1차 회신	2차 회신
1	김00	전북연구원장	O	O
2	김00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	X	X
3	김00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O	O
4	김00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X	X
5	김00	군산대학교 통계컴퓨터학과 교수	O	O
6	김00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X	X
7	김00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장	X	X
8	송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X	X
9	송00	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O	O
10	안00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X	X
11	안00	전주대학교 물류무역학과 교수	O	O
12	오00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O	
13	이00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	O
14	홍00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X	X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1차 회신	2차 회신
15	황00	우석대학교 호텔항공관광학과 교수	X	X
16	김00	전북도청 기획관	O	O
17	이00	전북도청 기획팀장	O	O
18	신00	전북도청 정책관리팀장	O	O
19	이00	전북도청 경제정책팀장	X	X
20	김00	전북도청 성과관리팀장	O	O
21	이00	군산대학교 교수	O	O
22	이00	우석대학교 교수	O	X
23	신00	전북대학교 교수	X	X
24	이00	국민대학교 교수	X	X
전체			13명 응답	11명 응답

2) 델파이 조사내용

- 전국 시도지사의 공약, 전라북도지사의 공약, 당선된 송하진지사의 공약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분야 5개와 전라북도에서 이슈가 된 5개를 최종적으로 10개 이슈로 선정
- 전국적 이슈 중 전라북도의 이슈와 연계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청년, 일자리, 산업, 미세먼지, 안전, 복지이슈를 최종이슈에 포함

〈표 3-21〉 민선7기 아젠다 선정을 위한 10대 이슈

순위	공약 (전국)	공약 (전북)	송하진도지사 101대 공약	최종이슈
1	청년	새만금	새만금	산업경제
2	도시	(자동)차	지역	일자리
3	일자리	청년	마을	청년
4	산업	미세먼지	산업	산업경제
5	미세먼지	농업	관광	농생명
6	지역	일자리	(전라도천년)길	새만금
7	시민	친환경	문화	문화관광
8	안전	경제	주민	SOC
9	어린이집	건강	탄소	균형발전
10	복지	배당	청년	안전건강

- 10개 최종이슈에 해당하는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면 청년의 경우 청년행복, 청년특구, 청년수당 등이 일자리는 창업, 에너지뉴딜, 기본소득 등이 안전·건강은 미세먼지, 공공의료, 열대야 등이 산업경제는 4차산업혁명, 창업, 기업활성화 등이 SOC는 공항, 철도, 트램 등이 새만금은 새만금개발속도,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세계잼버리 등이 농생은 스마트농생명밸리, 농기계산업, 농생명산업 등이 문화관광은 ICT여행체험산업, 문화도시, 전라도천년 등이 복지는 의료, 노인, 가족, 어린이 등이 균형발전은 지역, 분권, 도시재생 등이 포함됨

〈표 3-22〉 분야별 주요 키워드

분야	주요 키워드
청년	청년행복,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고용장려금, 청년임금보조, 청년수당, 일자리창출, 인구, 사회상속제, 창업특구, 기본소득
일자리	창업, 에너지뉴딜 1만개 일자리창출, 소득, 기본소득, 투자, 맞춤, 경제특별시, 의무고용제
안전·건강	미세먼지, 유아정밀검진, 공공의료, 장애인복지, 친환경, 열대야
산업·경제	4차산업혁명, 규제완화, 창업, 기업활성화, 에너지산업, 군산공장폐쇄후속대응, 전기차, 상용차, 자율주행, 스마트혁신산업단지, 농생명 금융산업육성, 클러스터
SOC	공항, 철도, 교통망확충, 대중교통체계개편,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
새만금	새만금개발속도,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세계잼버리, 남북협력단지
농생명	스마트농생명밸리, 농기계산업, 스마트팜, 농생명산업, 농축산생명산업, 농산어촌
문화·관광	ICT여행체험산업, 문화도시, 스포츠산업메카, 문화예술, 생태관광지, 투어패스연계관광, 마을축제, 마을문화, 문화수도, 전통, 전라도천년
복지	의료, 노인, 가족, 여성, 청년, 어린이, 무상, 보장, 보육, 수당
균형발전	지역, 분권, 도시재생, 재개발, 지역격차 해소, 원도심

3)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 1차 델파이 조사 후 각 분야별 아젠다의 중복응답문항을 제거하고 분류된 청년, 일자리, 안전건강분야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청년분야의 경우 일자리 창출, 청년인재육성, 청년 놀자리 구축, 청년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공공임대주택, 청년과의 대화창구운영 등이 제시됨

- 일자리분야에서는 농촌6차 산업화 기업유치로 일자리 생성, 에너지뉴딜, 소상공인 창업지원, 기본소득, 투자, 새만금 등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됨
- 안전건강분야에서는 축산환경문제, 미세먼지, 공공의료, 장애인복지, 친환경, 이상 고온등에 따른 피해억제 등이 주요 아젠다로 제시됨
- 종합해 보면, 청년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임대주택, 고용장려금, 청소수당 등이 아젠다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되었고, 일자분야에서는 6차산업, 신재생에너지, 의무 고용, 소상공인, 기업유치 등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됨
- 안전건강분야는 주로 미세먼지, 이상고온, 친환경, 축산환경, 교통사고 등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됨

〈표 3-23〉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 1

청년	일자리	안전·건강
청년농업인육성	농촌6차산업화	축산환경문제 개선
맞춤형 청년인재 육성	기업유치로 일자리 생성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청년 일자리 창출	신재생 에너지관련 일자리 창출	암 예방 강화
청년 놀자리 구축	에너지뉴딜 1만개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인구	창업	열대야
기본소득	의무고용제	공공의료
청년수당	맞춤	장애인복지
일자리창출	지역산업생태계 고려한 기업유치 활성화	미세먼지 억제 및 대응
청년 공공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 서비스 강화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 억제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중견·중소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친환경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미세먼지원인규명과 대책마련
청년인구의 역외(수도권) 유출 억제	일자리창출	지진피해에 대비한 장기적인 안전대책 마련
청년행복	기본소득	
청년고용장려금	투자	
청년일자리	기업유치	
청년공공임대주택	새만금 지역의 해수유통을 통한 어업 및 관광업 활성화	
청년과의 대화창구 조성	새만금지역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활성화	
청년의정착지원		

- 산업경제분야에서는 금융산업, 에너지 신산업육성, 농생명 금융산업 육성, 군산 공장 폐쇄 후 후속대응, 전북형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에너지산업 등이 주요 아젠다로 제시됨

〈표 3-24〉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 2

산업경제	SOC	새만금
금융산업 육성	지역밀착형 SOC	세계챔버리 성공적 개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개발 속도
상용차	친환경교통수단 확충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클러스터	친환경교통수단	남북협력단지
농생명 금융산업육성	대중교통체계 개편	새만금기업도시 유치
군산공장폐쇄후속대응	공항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구축
전장부품산업육성과 삼성 유치방안 재검토	철도	세계챔버리 개최 및 파급효과 확산
전북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검토	새만금-전주 연계 트램건설	새만금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GM군산공장 등 폐쇄에 따른 후속대응 지역경제.산업의 혁신주도형 시스템으로 전환	새만금 국제공항 여타면제 및 조기 건설 역내 철도, 간선도로 등 교통망확충 및 개선	세계챔버리 새만금개발속도
기업활성화	교통망확충	개발속도
4차산업혁명	트램	신속한 매립
에너지산업	교통망확충	해수유통 및 경제적 효과 발생하는 개발정책으로 변화
규제완화	광역교통망	매립비용을 산업유치 및 지역관광활성화에 투자
미래 식량위기를 대비한 첨단기법활용한 농산업 활성화	새만금의 매립지역 활용 투자	
지역 자영업자 중심의 지속발전가능한 직업창출 필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에너지 위기 대처 투자	

- SOC분야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친환경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 확충, 교통망 확충 광역교통망 등이 주요 아젠다로 제시됨
- 새만금분에서는 세계챔버리의 성공적 개최, 새만금 개발속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남북협력단지, 새만금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해수유통 등이 주요아젠다로 제시됨
- 종합해 보면, 산업경제는 금융산업, 에너지, 상용차 기업, 4차 산업혁명, 군산공장 전장부품산업 등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되었고, SOC분야에서는 친환경교통수단, 국제공항, 철도, 트램, 광역 교통망, 새만금 등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됨

○ 새만금 분야에서는 잼버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한중경협단지 등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됨

○ 농생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기술 보급체계, 지역식품산업 활로, 농생명 및 농기계 산업 육성, 스마트농생명 벨리, 농업중심의 첨단산업화 등이 주요 아젠다로 제시됨

〈표 3-25〉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농생명	문화관광	복지	균형발전
스마트팜 기술 보급체계	대표관광지 개발	보육강화	지역격차해소
지역식품산업 활로	ICT여행체험 산업	청년정책 강화	농촌부 도시재생
농생명 산업	생태관광지	가족	분권
스마트팜	전통	어린이	원도심
농기계 산업	문화예술	노인	새만금-전주-동부권 연계 체류형 전북 문화관광벨트 구축
스마트농생명벨리	새만금 문화관광 테마파크 유치	보육	전주-완주-김제 통합 광역시 추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구축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조기 완공	동부권 균형발전과 연계한 기업형 실버타운 건설 확대	내생적 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농식품 첨단기업의 유치	관광투어패스 연계관광 활성화	자활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경 제 활성화	지방재정 자립화 등 실질적 분권 실현
혁신농정을 위한 스마트농생명 사업의 활성화	지역학 정립과 문화예술 진흥	노인복지 및 일자리 확대로 사 회참여 촉진	지역분권
농산어촌의 활력증진 및 인구 감소 억제위한 정주환경 조성	문화수도	여성일자리 확대 및 젊은 여성 정착여건 개선	도시재생
농산어촌	전라도천년	의료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으로 농어 촌과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농기계산업(종자)	문화도시	청년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부가가치 높은 농수산업, 관광 활성화
식량위기 대응 중심으로 개발	투어패스연계관광	효율적인 청년복지 강화	
농업중심의 첨단산업화	여행체험산업	협동적 복지정책 추진	
	호텔, 컨벤션		
	전북 국제관광 포스트 구축		
	세계적인 문화관광 프로그램 유치		
	스포츠산업메카		

○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대표관광지 개발, 생태관광지 개발, 전라감영 복원사업 조기 완공, 새만금 문화관광 테마파크 유치, 전라도 천년, 투어패스 연계관광 등이 주요 아젠다로 제시됨

- 복지분야에서는 보육강화, 청년정책강화, 동부권 균형발전과 기업형 실버타운 조성, 재화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노인복지 및 일자리 확대로 사회참여 촉진 등이 주요 아젠다로 제시됨
- 마지막으로 균형발전분야에서는 지역격차 해소, 농촌부 도시재생, 새만금-전주-동부권 연계체류형 문화관광벨트 구축, 내생적 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해소, 지역 분권 및 도시재생 등의 주요 아젠다로 제시됨

4) 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 전북의 미래정책 및 아젠다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는 전문가 대상 2차 델파이조사를 토대로 도출된 아젠다를 중심으로 각각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
- 청년 등 총 10개 분야별 우선순위조사에서는 청년은 4순위, 일자리는 1순위와 2순위, 안전건강은 9순위, 산업경제는 2순위와 3순위 등으로 높은 빈도값 형성
- 새만금은 3순위와 4순위, 농생명 1순위와 6순위 그리고 문화관광은 6순위, 복지와 균형발전은 대체로 7순위 이하에서 높은 빈도값 형성

〈표 3-26〉 분야별 정책우선순위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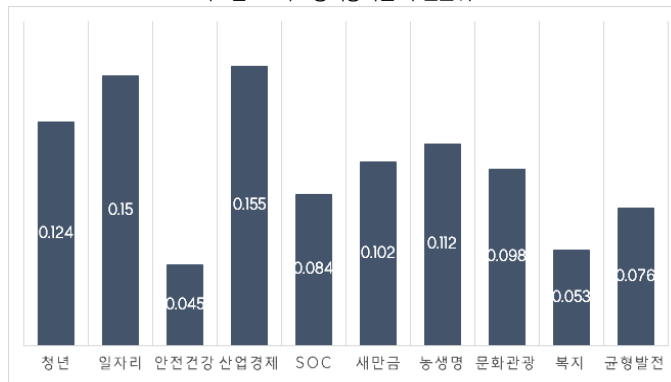
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청년	-	2	2	3	2	1	-	1	-	-
일자리	3	3	1	2	2	-	-	-	-	-
안전건강	-	-	-	1	-	-	1	2	3	4
산업경제	3	5	1	-	1	1	-	-	-	-
SOC	-	-	2	-	3	-	2	1	3	-
새만금	1	-	3	3	-	-	1	-	-	3
농생명	3	-	1	-	1	3	1	1	1	-
문화관광	-	1	1	1	1	4	2	-	-	1
복지	-	-	-	-	1	-	3	2	3	2
균형발전	1	-	-	1	-	2	1	4	1	1
전체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 순위별 가중값을 적용한 결과 전라북도의 분야별 우선순위에서는 산업경제가 0.155, 일자리 0.150, 청년 0.124, 농생명 0.11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7〉 순위별 가중치 계산

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합계	분석값
청년	0	18	16	21	12	5	0	3	0	0	75	0.124
일자리	30	27	8	14	12	0	0	0	0	0	91	0.150
안전건강	0	0	0	7	0	0	4	6	6	4	27	0.045
산업경제	30	45	8	0	6	5	0	0	0	0	94	0.155
SOC	0	0	16	0	18	0	8	3	6	0	51	0.084
새만금	10	0	24	21	0	0	4	0	0	3	62	0.102
농생명	30	0	8	0	6	15	4	3	2	0	68	0.112
문화관광	0	9	8	7	6	20	8	0	0	1	59	0.098
복지	0	0	0	0	6	0	12	6	6	2	32	0.053
균형발전	10	0	0	7	0	10	4	12	2	1	46	0.076

〈그림 3-5〉 정책영역별 우선순위



○ 안전과 건강(0.045), 복지(0.053), 균형발전(0.076), SOC(0.084)는 다른 영역에서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3-28〉 분야별 아젠다 우선순위

분야	아젠다	빈도			가중값			계	분석값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3	2순위 2	3순위 1			
청년	청년일자리 창출	8	2	1	24	4	1	29	0.439	1
	청년유출 방지	2	9	-	6	18	0	24	0.364	2
	청년행복	1	-	10	3	0	10	13	0.197	3
일자리	창업활성화	2	3	6	6	6	6	18	0.273	3
	맞춤형 일자리 창출	6	4	1	18	8	1	27	0.409	1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4	4	9	8	4	21	0.318	2
안전 건강	미세먼지대책	5	3	3	15	6	3	24	0.364	2
	친환경 관리체계 강화	5	4	2	15	8	2	25	0.379	1
	기후환경 변화대응	1	4	6	3	8	6	17	0.258	3

분야	아젠다	빈도			가중값			계	분석값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3	2순위 2	3순위 1			
산업 경제	군산공장폐쇄 후 후속대응	9		2	27	0	2	29	0.439	1
	4차 산업혁명 대응	1	4	6	3	8	6	17	0.258	3
	농생명 금융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1	7	3	3	14	3	20	0.303	2
SOC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8	1	2	24	2	2	28	0.424	1
	교통망 확충	1	9	1	3	18	1	22	0.333	2
	대중교통체계 개편	2	1	8	6	2	8	16	0.242	3
새만금	새만금 개발속도 가속화	8	1	2	24	2	2	28	0.424	1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3	5	3	9	10	3	22	0.333	2
	세계잡버리 개최 및 파급효과 확산		5	6	0	10	6	16	0.242	3
농생명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7	1	3	21	2	3	26	0.394	1
	농생명산업 발전	2	7	2	6	14	2	22	0.333	2
	농산어촌 활성화	2	3	6	6	6	6	18	0.273	3
문화 관광	ICT여행체험산업	3	2	6	9	4	6	19	0.288	3
	투어패스연계관광 활성화	2	6	3	6	12	3	21	0.318	2
	전통자원보존 및 생태관광지 개발	6	3	2	18	6	2	26	0.394	1
복지	보육제도 개선 및 강화	5	4	2	15	8	2	25	0.379	1
	노인복지정책 개선 및 강화	1	4	6	3	8	6	17	0.258	3
	청년지원정책 강화	5	3	3	15	6	3	24	0.364	2
균형 발전	지역격차 해소	9	2		27	4	0	31	0.470	1
	분권체계 구축		5	6	0	10	6	16	0.242	3
	도시재생	2	4	5	6	8	5	19	0.288	2

- 분야별 우선순위에서는 청년의 경우 일자리 창출(0.439), 일자리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0.409), 산업경제에서는 군산공장폐쇄 이후 후속대응(0.43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책분야와 분야별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종합해 보면, 1순위는 군산공장폐쇄이후 후속대응(0.06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0.062), 청년일자리 창출(0.054)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0.0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미래비전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군산의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 등에 대한 대응이 높은 순위에 위치

〈표 3-29〉 아젠다 전체 우선순위

분야	분석값	아젠다	분석값	분석값	전체순위
청년	0.124	청년일자리 창출	0.439	0.054	3
		청년유출 방지	0.364	0.045	6
		청년행복	0.197	0.024	21
일자리	0.150	창업활성화	0.273	0.041	9
		맞춤형 일자리 창출	0.409	0.062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0.318	0.048	4
안전건강	0.045	미세먼지대책	0.364	0.016	28
		친환경 관리체계 강화	0.379	0.017	27
		기후환경 변화대응	0.258	0.011	30
산업경제	0.155	군산공장폐쇄 후 후속대응	0.439	0.068	1
		4차 산업혁명 대응	0.258	0.040	10
		농생명 금융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0.303	0.047	5
SOC	0.084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0.424	0.036	13
		교통망 확충	0.333	0.028	18
		대중교통체계 개편	0.242	0.020	23
새만금	0.102	새만금 개발속도 가속화	0.424	0.043	8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0.333	0.034	15
		세계잼버리 개최 및 파급효과 확산	0.242	0.025	20
농생명	0.112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0.394	0.044	7
		농생명산업 발전	0.333	0.037	12
		농산여촌 활성화	0.273	0.031	17
문화관광	0.098	ICT여행체험산업	0.288	0.028	19
		투어패스연계관광 활성화	0.318	0.031	16
		전통자원보존 및 생태관광지 개발	0.394	0.038	11
복지	0.053	보육제도 개선 및 강화	0.379	0.020	24
		노인복지정책 개선 및 강화	0.258	0.014	29
		청년지원정책 강화	0.364	0.019	25
균형발전	0.076	지역격차 해소	0.470	0.036	14
		분권체계 구축	0.242	0.018	26
		도시재생	0.288	0.022	22

5) 전문가 간담회 조사결과

- 2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의 10대 아젠다를 설정하기 위해 학계, 언론분야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간담회를 실시함
- 전문가간담회에서는 2차례의 델파이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인 핵심아젠다를 중심으로 아젠다별 유사성 그리고 각 분야별 아젠다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10개 아젠다를 설정함
- 10개 아젠다는 2차 델파이조사의 가중값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기 선정된 아젠다와 중복성 있는 아젠다는 제외하고 차순위 아젠다를 중심으로 선정함
- 또한, 비록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후순위로 제시되었지만 델파이조사의 기초가 된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 키워드에서 누락된 아젠다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의 논의를 거쳐 10대 아젠다에 포함함

〈표 3-30〉 최종 선정 10대 아젠다

분야	10대 아젠다
산업경제	군산공장 폐쇄 후 후속대응
일자리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유출 방지
산업경제	농생명 금융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농생명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새만금	새만금 개발속도 가속화
문화관광	전통문화보존 및 생태관광지 개발
SOC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균형발전	지역격차 해소
안전건강	미세먼지 대책 등 기후변화 대응

4

장

전라북도 민선7기 정책방향

Jeonbuk Institute

-
1. 전라북도 민선7기 추진전략
 2. 전라북도 민선7기 10대 아젠다

제4장 전라북도 민선7기 정책방향

1. 전라북도 민선7기 추진전략

1) 101대 정책공약

- 전라북도의 민선7기 공약은 도민체감 성장동력, 활력있는 농산어촌, 문화ICT여행 산업 등의 10개 핵심전략과 그에 따른 분야별로 10개의 세부공약을 제시함

〈표 4-1〉 전라북도 민선7기 101대 공약

핵심전략	세부공약
도민체감 성장동력	“4차산업혁명대응 성장동력” ①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② 4차산업혁명대응 Big3 대표사업육성 ③ 농생명산업 생태계조성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④ 탄소융복합산업 성장기반 확충 ⑤ 전북연구개발특구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강화 ⑥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본격육성 ⑦ 전북형 벤처창업허브 구축 ⑧ 전북금융타운 본격조성 ⑨ 농업·문화·체육·건설 등 복합과 교류협력 추진 ⑩ 바이오 융·복합 창조산업 기반확충
활력있는 농산어촌	“사람 찾고 보람 찾는 활력 농산어촌” 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②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 ③ 국가식품클러스터 물류센터 구축 ④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⑤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⑥ 전라북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 ⑦ 친환경 스마트 농장 리모델링 지원 ⑧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 센터 운영 ⑨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확대 ⑩ 농산어촌 마을 청년리더 육성

핵심전략	세부공약
문화ICT 여행산업	“문화ICT융합 여행체험산업” ①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경쟁력 강화 ② 고군산군도 명품 섬 만들기 ③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설립 ④ 전라북도 관광벤처 육성 ⑤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⑥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 ⑦ 전북지역 컬링장 건립 ⑧ 전북 가야 연구발굴 및 종합정비 ⑨ 농산어촌 마당캠프 활성화 ⑩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
동반성장 상생경제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경제” 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 ② 지역통화 ‘전북코인’ 발행 및 운영 ③ 중소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④ 청년 직무인턴 운영 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⑥ 전라북도 백년가업 육성 ⑦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⑧ 자영업·골목상권 민생현장 솔루션팀 운영 ⑨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三樂)캠프 운영 ⑩ 공유경제 시범 ‘공유마을’ 조성
새만금 세계잼버리	“꿈과 희망의 전북미래 새만금세계잼버리” ①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준비 ② 새만금 카본타워 건립 ③ 스마트 해양무인 통합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④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⑤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전환 ⑥ 새만금 박물관 건립 ⑦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⑧ 새만금 신항만 조기완공 및 확장 ⑨ 새만금 ~ 대야 간 철도건설 ⑩ 서부내륙 고속도로 부여~익산구간 동시착공

핵심전략	세부공약
우리마을 알찬문화	“작은마을까지 알찬주민문화” ①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성공수행 ②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③ 전북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④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⑥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 ⑦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⑧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 ⑨ 작지만 특색있는 문화·체육시설 조성 ⑩ 유네스코세계유산 추가등재 추진
안전건강 제일전북	“스마트한 사람중심 안전건강” ① 4차산업기반 소규모 하수처리장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② 친환경 전기차 보급 및 경유차 저공해화로 미세먼지 저감 ③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비용 지원 ④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⑤ 탄소섬유 활용 겨울철 노면 결빙 예방사업 ⑥ 교통안심 행복 콜버스·택시 서비스 확대 ⑦ 다중이용시설 재난위기관리 안심시스템 구축 ⑧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확대 ⑨ 청년건강검진비 지원 ⑩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전북형 맞춤복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① 기초생활수급탈락자 빈곤층 생활보장제 실시 ② 우리아이 정밀검진 건강관리 책임제 ③ 사회적 가치활동 연계 청년기능수당 신설 ④ 일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워라밸 문화 확산, 아이돌봄 지원 ⑤ 빈곤아동 교육올타리 사업 ⑥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⑦ 반려동물 교육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⑧ 사회적 약자 행복정책 개발팀 운영 ⑨ 보건복지통합 경로당 운영 ⑩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핵심전략	세부공약
아름다운 산들바다	“인간과 공존하는 아름다운 산들바다” ① 전복산하 1000리길 조성 ②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호남권 메카 조성 ③ 해양형 새만금 수목원 조성 ④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⑤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본격육성 ⑥ 숲속의 작은문화·복지시설 조성 ⑦ 생태 덩굴식물 그늘터널 시범조성 ⑧ 전라북도 생태관광 페스티벌 개최 ⑨ 도시 청량 바람길숲 조성 ⑩ 전복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차별화된 균형발전	“다르지만 고르게 발전하는 전북” ① 주민참여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활성화 ② 전라북도 인구증가 및 인구유입 종합대책 추진 ③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확대 ④ 지·덕·섬 휴양벨트 구축 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연구여건 조성 ⑥ 평생교육 행복학습센터 운영 ⑦ 출산·분만 의료격차 해소 ⑧ 지역수요맞춤 경관조성사업 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GM군산공장 신성장 동력화 ⑩ 서남대폐교에 따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확대노력
전북대도약 미래구상	“전북대도약을 위한 미래발전구상” ① 전북대도약을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

자료 : 전라북도 민선7기 공약집

2) 민선7기 도정운영방향

○ 전라북도는 민선7기 도정운영의 방향으로 ①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② 융복합 미래신산업, ③ 여행체험 1번지, ④ 새만금시대 세계잼버리, ⑤ 안전복지·환경·균형의 5대 도정목표를 수립하였고,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16대 핵심전략을 설정하였음

5대 도정목표	삼각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시대 세계잼버리	안전·복지 환경·균형
16대 핵심 전략	1. 제값받는 농업 보람찬 농민 2. 스마트 농생명산업 3. 사람찾는 농산어촌	1. 지능형 신산업 2. 융복합 부품소재산업 3. 금융·혁신·공유 창업 생태계	1. 여행·체험 산업 2. 문화CT 콘텐츠 3. 한국적인 생태·힐링 4. 알찬 주민문화	1. 새만금 연계 SOC 대동맥 2. 세계잼버리 준비 3. 친환경산업 전진기지	1. 사람중심 안전건강 2. 포용적 맞춤 복지 3. 차별화된 균형발전
90개 실행과제	15개 과제	15개 과제	24개 과제	13개 과제	23개 과제

〈그림 4-1〉 전라북도 5대 도정목표 및 16대 핵심전략

- 16대 핵심전략의 실행을 위해 90개의 실행과제로 세분류하였으며 실행과제별로 연차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함

〈표 4-2〉 전라북도 5대 도정목표에 따른 세부 실행과제

목표	실행과제	비고
삼각농정 농생명산업	전략 1. 제값받는 농업, 보람찬 농민 ① 수요자 중심 삼각농정 구현 ② 체감형 농어업인 복지 확대 ③ 전라북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 ④ 최저가격보장제 품목 확대 ⑤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공약 공약
	전략 2. 스마트 농생명 산업 ①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 공급센터 구축 ② 종자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③ 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④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⑤ 스마트한 농어업 환경 조성 ⑥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예타프로세스 수행	공약 공약 공약 공약 공약 공약
	전략 3. 사람찾는 농산어촌 ① 2단계 생생마을 만들기 추진 ② 수요자 중심의 농어촌관광 시스템 구축 ③ 농식품 6차산업 활성화 ④ 농어업·농어촌 활력화를 위한 창업시스템 구축	

목표	실행과제	비고
융복합 미래신산업	전략 4. 지능형 신산업 ①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②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 ③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공약
	전략 5. 4차융복합부품소재산업 ① 전라북도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 ② 탄소융복합산업 성장기반 확충 ③ 안전보호 융복합섬유산업 육성 사업 ④ 중재의료기기, 천연화장품, 바이오 콤비나트 기반구축	공약 공약 공약
	전략 6 : 금융·혁신·공유·창업 생태계 ① 지속가능한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② 전북형 청년종합정책 추진 ③ 소상공인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자생력 강화 ④ 특색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⑤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 확대 ⑥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⑦ 자생적 금융타운 조성 및 활성화 ⑧ 전북형 벤처창업 허브 구축	공약 공약 공약
여행체험 1번지	전략 7 : 여행·체험 산업 ①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 ②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③ 핵심관광지(테마여행 10선) 육성 ④ 전북 관광벤처 기업 육성 ⑤ 시군 대표축제 육성 ⑥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 ⑦ 새만금 관광 활성화 추진 ⑧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추진	공약 공약 공약 공약
	전략 8 : 문화CT 콘텐츠 ①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운영 ② 전라유학진흥원 설립·운영 ③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 ④ 전라도 천년사 편찬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가등재 추진 ⑥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설립 ⑦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공약 공약 공약 공약 공약 공약 공약

목표	실행과제	비고
여행체험 1번지	전략 9 : 한국적인 생태·힐링 ①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 ②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 ③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본격 육성 ④ 아름다운 전북 산하, 한국 힐링 1번지 가꾸기	공약 공약 공약
	전략 10 : 알찬 주민문화 ①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②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 ③ 전북지역 컬링장 건립 ④ 작지만 특색있는 체육시설 조성 ⑤ 예술인 복지증진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약 공약 공약 공약
새만금시대 세계잼버리	전략 11 : 새만금 연계 SOC 대동맥 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립 ② 새만금 신항만(1단계) 적기 완공 ③ 새만금 SOC 구축(4개사업) ④ 서부내륙 고속도로 부여~익산구간 조기 착공 ⑤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스마트 수변도시」 조기 조성 ⑥ 새만금 카본타워 건립구상 ⑦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공약 공약 공약 공약 공약 공약
	전략 12 : 세계잼버리 준비 ①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②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③ 새만금 환경생태용지(1단계) 조기 구축 ④ 생태 덩굴식물 그늘터널 시범 조성	공약 공약
	전략 13 : 친환경산업 전진기지 ①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②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공약
안전·복지 환경균형	전략 14 : 사람중심 안전건강 ①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 강화 ② 민간다중이용시설 재난위기관리 안심시스템 구축 ③ 자연재해 최소화 ④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생활환경 개선 ⑤ 친환경 전기차 보급 및 경유차 저공해화로 미세먼지 저감 ⑥ 도민 체감형 물 복지 실현 ⑦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바람길 숲 조성 ⑧ 화재안전 100년 大計 기반 조성	공약 공약 공약

목표	실행과제	비고
안전·복지 환경·균형	전략 15 : 포용적 맞춤형복지 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②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③ 여성·청소년 역량강화를 통한 권익증진 ④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⑤ 장애인 자립을 위한 환경 조성 ⑥ 도민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	
	전략 16 : 차별화된 균형발전 ① 전라북도 균형발전 추진 ② 동부권 발전사업 지원 확대 ③ 낙후지역 개발 사업 ④ 중소형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 ⑤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생태계 구축 ⑥ 조선산업 기자재 부품기업 위기극복 R&BD 지원 ⑦ 전북의 특화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⑧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⑨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공약 공약 공약 공약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8)

2. 전라북도 민선7기 10대 아젠다

- 10대 분야와 델파이조사를 기초로 자문회의를 통해 10대 아젠다의 구체적 아젠다 명을 선정
- 10대 아젠다 선정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연구진 회의를 통해 각각 3개씩 총 30대 추진과제 제시

〈표 4-3〉 10대 아젠다 및 추진전략

아젠다	추진과제
군산공장 폐쇄후 후속대응	① 자율주행 전기상용차로 군산 산업구조 개편 ② 관광레저 메가프로젝트 발굴 ③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순환시스템 구축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①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 ②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연계 일자리창출 ③ 중장년&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유출 방지	① 로컬소셜벤처 청년혁신가 육성 ② 스마트 슬로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③ 전북형 청년 일자리 뉴딜사업
농생명 금융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① 금융관련 공공기관 2차 전북이전 ② 농생명 투자 플랫폼 구축 ③ 농생명금융 특화 블록체인실증센터 설립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①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② 스마트팜 혁신밸리 성공적 추진 ③ 농민 소득주도 성장전략
새만금 개발속도 가속화	① 새만금 마스터플랜 수정계획 수립 ② 무규제 시범도시 조성 ③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전통문화보존 및 생태관광지 개발	① 여행체험산업 활성화로 관광일자리 창출 ② 장소기반 전통문화산업 육성 ③ 생태적 자연환경 경쟁력 강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①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글로벌 SOC구축 당위성 확보 ② 전북권 광역순환교통망(Tram-Train)구축 ③ MICE산업 기반구축
지역격차 해소	① 전라북도 5권5축 균형발전 ② 동서내륙경제벨트 구축 ③ 인구댐 중핵도시 조성
미세먼지 대책 등 기후변화 대응	① 미세먼지·악취 등 생활안전 대책마련 ②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예방 ③ 농촌 안전 스마트시티 구현

1) 군산공장 폐쇄 후 후속대응

- 2009년 8월 첫 가동을 시작으로 전북의 조선산업 시작을 알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17년 6월 선박물량 수주부족으로 가동중단
 - 1조 4천600억원의 투자로 축구장 4배 크기인 180만㎡부지에 5,000여명이 일하던 군산조선소는 현재 전면중단으로 거의 모든 인력이 군산을 떠난 상황
- 2001년 대우차를 인수한 한국GM은 2018년 2월 공장폐쇄를 결정한 이후 2018년 5월 31일 22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쇄
 - 2011년 26만대 생산과 전북 수출의 30%, 군산 수출의 50%를 차지하던 GM은 2016년 군산수출비중 20%로 급락하고 공장폐쇄이후 2000명의 직원이 부평이나 창원공장으로 전환배치 되거나 퇴사
- 전북과 군산경제의 두 축이었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가동중단과 폐쇄에 따른 전북경제 희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

(1) 자율주행 전기상용차로 군산 산업구조 개편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전라북도의 강점인 상용차와 관련 인프라 그리고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육성으로 군산경제 체질 강화

- 전라북도는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 등 전국 상용차 생산의 93%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동차융합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상용차 부품 주행 시험장 등 관련 인프라 우수



〈그림 4-2〉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구성(안)

-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를 꿈꾸고 있는 전북은 2015년 100조원 규모의 세계 전장산업의 선도를 위해 삼성의 군산투자유치 필요
 - 삼성은 지난 8월 전장부품, 인공지능, 5G, 바이오를 4대 성장성장산업으로 지목하고 3년간 180조원의 투자계획 발표

- 삼성은 2016년 약 8조 9천억원을 들여 미국 전장전문기업 하만을 인수해 전장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새만금 투자유치 철회에 대한 신뢰회복과 전장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된 전북투자를 통해 미래산업 선도와 지역상생협력 도모 가능

(2) 관광레저 메가프로젝트 발굴

- 타산업에 비해 경제효과와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관광산업을 군산의 새로운 경제활성화의 기반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수부 추진이 결정됐지만 서천군과의 갈등으로 중단된 금란도(19,000㎡, 여의도의 2/3)의 생태예술테마파크 조성추진
- 천혜의 자연경관과 63개 섬으로 이루어진 고군산군도의 연결도로개통(17), 신항만 완공(23)에 따른 새만금 관광의 마중물로서 고군산군도를 개발하기 위해 서공항로 해양문물교류 거점구축, 해양레저 스포츠메카조성, 국제 마리나항건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조성 등 관광개발 추진
- 근대역사지구조성이후 관광객이 급증한 군산의 근대역사를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간여행 트램-트레인벨트조성, 아시아근대 기억공원조성, 근대역사문화 실감 콘텐츠 개발 등 근대역사기반 관광사업 추진

(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순환시스템 구축

- 최근 메이커운동, 리빙랩, 공유경제 등은 사회적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또한 같은 범주에 있음
- 한국GM공장 폐쇄 후속대응으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조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 발굴 필요



자료: 전북연구원, 2017

〈그림 4-3〉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구성요소

- 사회적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실질적 경제효과 활성화를 위해 혁신기술의 결합 및 금융지원, 창업과 전문인력양성 등 지역내 순환시스템 구축

2)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 한국GM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시 실업률이 2017년 상반기 1.6%, 하반기 2.5%에서 2018년 상반기 4.1%로 급증함에 따라 전라북도 실업률 및 고용률 하락
- 호남통계청(2018)에 의하면 2018년 6월 기준 전북의 고용률은 59.2%로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고 취업자는 93만9천명으로 6천명 감소
- 전라북도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북의 강점을 살린 산업화와 일자리창출, 그리고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필요
- 스마트농생명, 신재생에너지, 상용차 자율주행 등 전라북도 산업재편과 연계된 일자리와 중년과 시니어 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필요

(1)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도시 시즌2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인근 20km 이내 혁신도시와 기존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은 부지매입액 최대 40%, 설비투자비 최대 24% 지원, 규제자유특례 샌드박스 적용, 혁신프로젝트 재정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

- 전라북도는 스마트농생명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신규 기업 61개, 신규고용 290명, 매출액 1000억원을 목표로 스마트농생명 융복합 산업을 통한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 추진

비전	스마트 농생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스마트 전북」 구현		
목표	1단계('18 ~' 20)	2단계('21~' 23)	3단계('24~' 27)
	혁신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혁신클러스터 생태계 고도화	혁신클러스터 글로벌 거점화
	- 대표산업 기술상용화 - 인력양성 및 협업네트워크 구축	- 국내 신흥고도화 - 기술사업화지원 및 투자연계	- 국내외 신흥 혁신 - 해외 투자·유치 연계
육성방향	매출액 260억원 신규고용 80명 신규기업(관) 수 10개	매출액 320억원 신규고용 90명 신규기업(관) 수 17개	매출액 420억원 신규고용 120명 신규기업(관) 수 34개
	◇ 스마트 농생명 융복합 산업을 통한 신산업 비즈니스모델 창출 ◇ 지역주력산업인 농업·농촌 스마트농생명 밸리사업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 대표산업 생태계 조성 및 고도화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		

자료: 전북TP, 2018

〈그림 4-4〉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비전 및 목표

- 혁신도시를 지역의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하여 혁신도시의 혁신역량을 전라북도로 확산하는 전략 필요

(2)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연계 일자리창출

- 전라북도는 2019년 일자리사업으로 농생명, 신재생, 상용차 중심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
- 문재인대통령은 2022년까지 10조 569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 일대에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여 10년간 일자리 10만개, 최대 200만개 일자리창출과 25조 경제효과 창출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추진 발표
- 문재인정부의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3020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전북을 단순 발전단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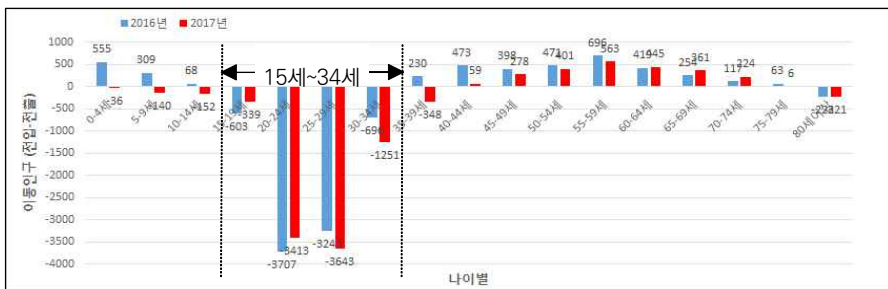
〈그림 4-5〉 새만금 태양광·풍력단지 구축계획

(3) 중장년&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상당한 학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약 710만명이 대량 은퇴를 앞두고 있어 이들의 전직 경험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창출 필요
- 중장년층의 퇴직연령은 평균 49세로 공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인 65세까지는 경제 활동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층의 전직경험을 활용한 노동시장 진입 전략 마련 필요
- 전라북도의 산업수요에 맞는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연계 그리고 사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장년 고용인프라 구축 필요

3)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유출 방지

- 전라북도 인구감소는 출생아수 감소와 사망자수 증가로 인한 자연인구감소(16년 1,063명, 17년 2,929명)와 타 시도로의 순유출(16년 4,419명, 17년 7,206명)에 의해 발생
- 시도간 인구 이동에서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의 타시도로의 전출이 전라북도 인구감소의 결정적 요인
- 청년 전출사유는 취업·고용(48.4%), 교육(17.6%), 여가·문화(16.8%), 주거(5.3%) 등의 순(전북연구원,2017)으로 일자리에 의한 인구유출이 가장 큰 요인으로 청년 일자리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출방지가 전라북도 인구감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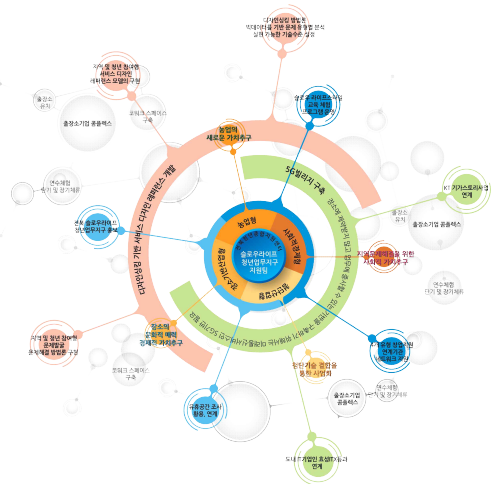
〈그림 4-6〉 전라북도 전입·전출 현황

(1) 로컬소셜벤처 청년혁신가 육성

- 지역 고유의 일상문화, 라이프스타일 및 전통문화자산활용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기술 및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서비스로 창출
 -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무형의 가치와 일상의 생활모습, 의식주를 포함하여 이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 자연환경, 문화자산, 유형의 가치도 포함할 수 있음
- 지역의 무한한 가치와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시 청년이 지역을 지켜나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기여
- 청년의 시각에서 전북지역만의 특색 있는 지역 및 문화 ICT융합의 新산업 비즈니스 모델개발

(2)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⁶⁾

- 전북의 전통문화와 자연자원을 연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새로운 유형의 슬로우라이프가 결합된 일하는 모델 조성
- 다른 지역과 달리 업무의 장소 제약을 없애기 위한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첨단기술, 미래형 인재 등이 집적한 스마트한 업무환경과 유연한 근무시간, 자연친화적 생활, 지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등의 슬로우라이프 여가환경이 결합된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그림 4-7〉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개념도

- 스마트 슬로우라이프를 추구하는 기업 및 청년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구축, 스마트 업무환경을 위한 5G빌리지 조성, 빈집 및 빈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주거 및 창업공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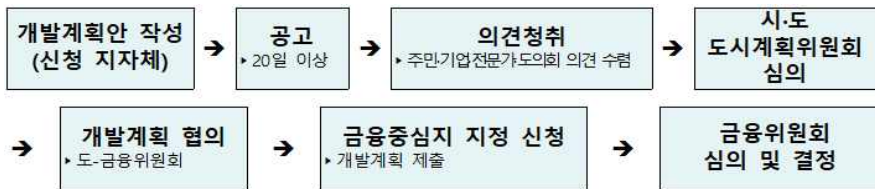
(3) 전북형 청년 일자리 뉴딜사업

- 전라북도가 청년실업 및 일자리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업그레이드하여 공공기관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기업에 취업지원
- 취업이 가능한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이 원하는 일경험과 취업 역량을 쌓은 후 민간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민간기업의 심사와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일자리 뉴딜사업 추진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기업에서 원하는 업무능력을 공공기관에서 훈련하여 인증함으로써 기업과 청년취업자간의 업무능력에 대한 갭을 메꿔주고 인력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기여

6) 전북연구원(2018) 이슈브리핑(183호) 참조

4) 농생명 금융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더불어 부산의 금융중심지 사업과 연계한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전북은 민선7기 중점사업으로 금융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시작으로 금융타운조성, 금융관련 공공기관 추가이전, 금융인력육성, 금융기업 유치 등 추가사업 추진 필요



〈그림 4-8〉 금융중심지 지정절차

(1) 금융관련 공공기관 2차 전북이전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대상 122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당정간 협의 발표(9.4.)
 - '17년 하반기 추가이전 요구 있었으나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에는 제외
- '07년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 선정 시 감안되지 않은 이전기관 특성(규모, 기관성격, 기관 전체 인원 대비 본사 근무인원 등), 효과(지역인재채용규모, 이전 기관 지방세 납부실적) 등 전북의 불리한 상황을 상쇄할 기관을 선제적으로 제시
- 특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금융타운조성 등의 타당성확보 및 향후 금융산업을 전북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금융관련 기관 전북이전 추진

〈표 4-4〉 농생명 금융관련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상

연번	기관명	주무기관	기관유형	지정 연도	정원 (명)	현재 소재지
1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2007	723	서울
2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타공공기관	2007	28	서울
3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2007	717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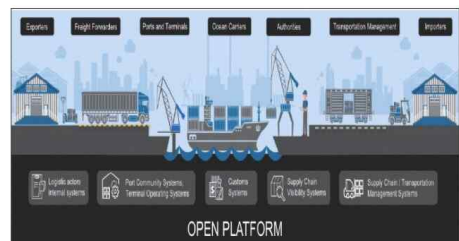
연번	기관명	주무기관	기관유형	지정연도	정원(명)	현재소재지
4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타공공기관	2007	12,526	서울
5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타공공기관	2007	3,286	서울
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타공공기관	2014	67	서울
7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	2007	984	서울
8	한국재정정보원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	2017	160	서울
9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2013	64	서울

(2) 농생명 투자 플랫폼 구축

- 농생명 금융산업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옥수수 콩 등의 곡물을 물론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류 등에 관한 선물거래소가 활발히 운영 중
 - 연기금중심인 전북에 농업금융 특화를 위해서는 농생명·바이오 거래소 설립 필요
- 전북이 농생명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첨단농업 진출기업의 자본조달이 가능한 농생명 특화 증권거래소, 농생명 모태펀드 등 농생명 관련 전문 자본시장 형성 필요
- 농산물을 대체산업군으로 포함시켜 연기금이 농생명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농생명금융 자본시장과 연계하는 전략 필요

(3) 농생명금융 특화 블록체인실증센터 설립

- 생산-소비자 신뢰성이 중요한 농생명, 금융 등에 있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블록체인과 연계 발전시켜 신산업을 도모 할 수 있는 거점기관으로 블록체인 실증센터 설립(호남권 블록체인 거점센터 기반 활용)
- 전북 농업진흥청, 연기금 등과 연계하여 농산물 디지털 안전망, 농산물 사이버 직거래, 농산물 이력제, 금융 P2P (peer-to-peer), 디지털통화(가상화폐), 클라우드 펀딩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관련 스타트업 지원육성
- 호남권 거점 블록체인거점센터의 농생명 특화를 시작으로 출판문화, 금융 등을 확장



자료: <http://www.klnews.co.kr>

〈그림 4-9〉 블록체인활용 국제무역 플랫폼

5)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 전북은 새만금 농생명용지가 완료되는 2020년경 아시아 최대 농생명산업 거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최대의 농생명 연구기관들과 협력·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가치사슬이 미흡한 부문을 보완하고, 연계성을 제고하여 경쟁우위 확보 필요
 - 농진청 이전완료(2015), 새만금농생명 5공구 준공(2017), 국가식품클러스터 준공(2017), 민간육종단지 준공(2016), 김제 농기계클러스터(2015), 정읍 첨단과학연구산업단지(2013)
- 세계 농식품시장은 2020년에 6조3,530억달러로 성장 전망되고, 약 40%는 아시아
 - 태평양이 차지함에 따라 공격형 수출 농생명산업 육성 필요
-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적용, 푸드 3D프린터 개발, 첨단종자 경쟁, 지능형·기능성·맞춤형 식품수요 등으로 농생명 4차산업혁명 기술경쟁시대 선도
 - 스마트관개, 식품데이터분석, 센서, 로봇, 드론, 거래플랫폼, 정밀농업, 예측분석, 영농소프트웨어, 차세대생명공학, 동물데이터 등

(1)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민간육종단지, 김제스마트농기계실증단지, 정읍미생물 생명공학, 새만금 농생명용지, 혁신도시 농생명기관의 R&D역량과 성과를 전북 농생명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사업 추진 중

클러스터	농생명 혁신도시 (10개)	새만금 농생명용지 (6개)	국가식품 클러스터 (7개)	농자재 클러스터 (6개)	미생물 클러스터 (5개)
공간확대 사업	스마트농생명혁신도시조성	스마트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농자재유통단지 조성	국가동물의약품 글로벌복합단지
사업명	농업안전 클러스터 조성 농생명 정보산업 육성 농생명 사물인터넷 보급센터 신진 농생명 명문대학 유치 농생명금융 거점 조성 FAO미래식품연구소 설립/개원 유치 농생명대학 이전 농생명혁신네트워크센터 농생명 청년 창업 특구	스마트팜실증단지 국가정밀농업센터 농식품진흥청 및 배후생산단지 새만금배후식품가공단지 간헐지농업연구소 설립	스마트공동물류센터 푸드테크진흥원 국제농식품비즈니스센터 조성 글로벌 식생활·영양 소비자 연구 소 글로벌 식품디자인센터 국가식품연합대학 설립	시설농자재산업 육성 민간육종단지 확정사업 스마트공정육묘단지 종자기공센터 건립 토종종자식물원 조성	장내 유용 미생물은행 육성 참돈미생물 발효소재 고도화 7년 구축 사업 친환경농자재산업 육성 미생물 기반 펄스료 생산단지 구축

〈그림 4-10〉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추진사업

-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는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선7기 송하진 도지사의 대표공약으로 추진 중
 - 송하진 지사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공약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 공급센터 구축, 종자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민선7기 전라북도 공약사업 외에도 바이오첨가물 산업화, 농생명정보기반 솔루션 개발, 국가 동물케어 복합단지 조성, 새만금 첨단농업연구소 건립 등 농생명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가사업 추진 필요

(2) 스마트팜 혁신밸리 성공적 추진

- 전라북도가 제안한 농생명 청년창업 특구사업의 대통령공약화 이후 농림부는 청년 스마트팜 창업생태계구축을 목표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공모하여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가 선정
- 전라북도는 스마트팜 교육과 창업, 스마트시설 도입,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조성, 신소득 작물 실증단지 조성, 배후마을 조성 등 청년의 스마트팜 진입을 위한 교육과 주거, 창업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구축을 계획하고 있어 성공적 추진동력 확보 필요



자료: 전라북도, 2018

〈그림 4-11〉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비전체계도

(3) 농민 소득주도 성장전략

-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전북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농업경영비절감, 농식품부가가치제고, 농외소득원발굴 등 삼락농정사업의 확대필요
- 로컬푸드시스템의 확산과 더불어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의 지역먹거리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북푸드플랜 종합정책 추진으로 농촌활력과 도시의 농식품 소비안전성 확보
- 도시와 농촌 삼락캠프 및 농촌마을 마당캠프 등 농촌의 매력물을 활용한 체류인구 유입으로 농촌활력 증대

6) 새만금 개발속도 가속화

- 민선6기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새만금 공공주도매립 계획이 2018년 10월 새만금 개발공사 출범으로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향후 실질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 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
 - 2018년 3월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공공주도의 선도적 매립사업을 위한 새만금개발 공사 설립이 명문화되고 스마트 수변도시, 용지매각 수익을 통한 후속 매립, 인센티브 지원 등이 가능
- 전 세계에서 5만여명이 참가하고 세계지도자 30여명이 참여하는 세계잼버리대회가 2023년에 새만금에서 개최되고 이에 앞서 2020년 한국잼버리, 2021년 아태 잼버리, 2022년 한국스카우트 100주년 기념 내셔널잼버리 등이 잇따라 개최되는 등 글로벌 교류 거점으로써 필요한 인프라 시설 구축이 시급한 상황
 - 약300만평에 이르는 잼버리 야영장 조성을 위한 기초인프라와 도로, 항만, 공항 등의 국제행사를 위한 SOC구축 등을 통해 국가적 위상과 새만금 브랜드 가치 상승

(1) 새만금 마스터플랜 수정계획 수립

- 현재의 새만금 마스터플랜(MP)은 2014년 9월에 변경된 것으로 새만금개발공사설 립, 재생에너지클러스터 등의 변화된 정책환경이 반영되지 않음
 - 내부개발의 주체가 민간에서 새만금개발공사 라는 공공으로 변했고, 최근 발표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조성에 의해 국제협력용지와 산업용지 등의 변화를 반영한 시기별 선도사업 및 선도과제의 변화 필요



〈그림 4-12〉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 새만금잼버리대회 개최에 따른 개발의 속도와 MP에서 제시한 2017년까지 1단계 선도사업 45%, 2단계 2020년까지 73%개발완료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2018년 상반기까지 36%에 그치고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새만금개발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명문화 필요
-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MP보강을 위한 용역연구비 10억을 신청했으나 책정되지 않아 새만금추진지원단과 새만금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2) 무규제 시범도시 조성

- 정부는 규제완화를 위해 지역특구법과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법안들을 지난 9월 통과시켰지만 이를 새만금 전체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
 - 실제로 새만금에 탄소산업이나 농생명산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특구법의 특례는 적용가능하지만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등은 불가

- 새만금을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경제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노동, 신산업투자, 금융 등에 관한 각종 규제시스템을 혁신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무규제 지역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 새만금 개발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됨에도 특별한 특례제도가 없어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의 타 특구의 특례는 물론 고용효과, 투자효과 등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무규제지역으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필요



〈그림 4-13〉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안)

- 새만금 사업은 전체가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항만, 공항, 새만금수목원 등 개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돼있어 포괄적 예타면제 필요

(3)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 새만금 개발공사설립으로 높은 조성원가로 경쟁력이 낮았던 문제가 해소 가능한 상황에서 국내외 투자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필요
- 공공부문에서 스마트농생명부지개발, 해안형수목원조성, 국제용지배후마을조성 등을 통해 민간에 신뢰를 제고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별 전략 필요
-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활성화사업을 전세계로 확대하여 관광레저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에 대한 성공가능성 확보

7) 전통문화보존 및 생태관광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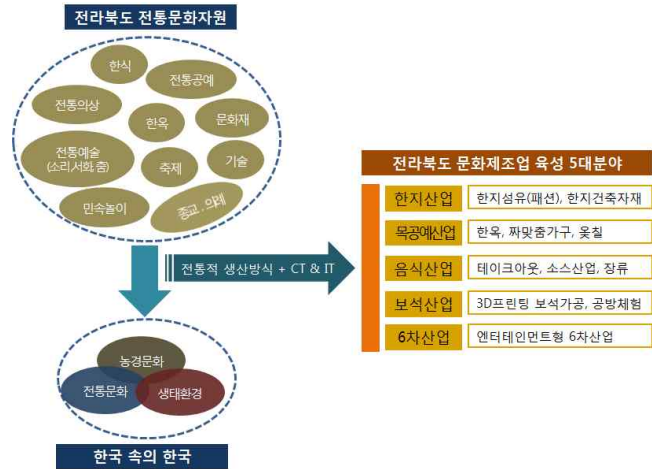
- 지역문화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성에 기반 한 매력물을 직접 느끼기 위해 찾아오고 거기서 파생된 다양한 체험서비스가 새로운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연계하는 전략 필요
 - 세계화로 인해 의식주의 생활양식이 모두 비슷비슷해 지는 글로벌스탠다드화가 강화됐지만, 세계화의 역설로 독창성과 고유성이 지역발전의 주요한 매력물로 작동하기 시작
 - 여행이야말로 그 장소에 가야만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장소기반 문화상품
- 전라북도의 가장 큰 강점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파괴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현재까지 보존된 전통문화와 천혜의 생태자원으로 이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 필요
- 한국체험 1번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전라북도 민선7기의 관광전략 성공을 위해서는 ICT기술과 전통문화와 생태자원을 연계하는 새로운 여행체험산업으로의 2단계 관광전략 필요

(1) 여행체험산업 활성화로 관광일자리 창출

- 관광객의 소비액을 정주인구로 환산하면 정주인구 1인당 국내 숙박관광객 60명, 국내 당일 관광객 166명, 방한 외국인 8명에 달해 전북 관광객은 451,620명의 정주인구와 맞먹는 소비(전북연구원, 2018)
 - 정주인구 1인당 연간소비액은 1545만원, 내국인 숙박여행객 1인당 연간소비액은 26만원, 내국인 당일여행객은 9만원, 방한외국인인 189만원에 달함
-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전북의 관광객을 직접적인 지역경제활성화로 인계하기 위해서는 여행체험을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 필요
- 자동차, 교육, 문화, 유통 등 타산업 프리미엄화와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ICT 산업 내 미래형 고부가가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을 통해 여행체험산업과 홀로그램 연계
- 전라북도 4천만 관광객시대 도약 및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전북투어패스의 관광산업 연계 선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어패스를 연계한 혁신적 관광벤처 육성

(2) 장소기반 전통문화산업 육성

-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분야에서 전라북도의 전통문화산업은 기존의 전통적 생산방식과 첨단기술이 접목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



〈그림 4-14〉 전라북도 장소기반 전통문화산업 육성전략

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가 육성해야할 문화제조업분야를 선정하면 한지산업, 목공예산업, 음식산업, 보석산업, 6차산업 등 5대분야로 압축가능(전북연구원, 2016)

- 장소기반 전통문화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립 전통문화기술은행 설립, 전통 문화창조센터의 기능확대, 첨단문화제조업벨트조성, 전통문화산업 기업유치 및 지원시설 집적을 통한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융합산업 단지조성

(3) 생태적 자연환경 경쟁력 강화

- 자연과 생태가 보존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생태자원이 가장 멋진 경쟁력이 되는 시대 도래
- 전라북도는 2015년 전라북도 시군별 생태관광지 선정 및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까지 230억원을 투자하여 시군 생태관광 마스터플랜수립, 에코매니저 양성교육, 생물자원 조사 등을 추진하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본격육성
- 전라북도 생태적 자연환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지질공원 등록, 세계유네스코자연유산 등재, 천리길 박물관조성 등 생태마케팅 추진 필요

8)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 도시와 지역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항, 항만, 철도, 마이스시설 등 글로벌SOC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



〈그림 4-15〉 전북대도약 하드웨어 주요아젠다

- 전라북도 대도약을 위해서는 국제공항, 트램-트레인 광역순환교통망, 마이스산업 기반구축 등의 하드웨어 구축 필요

(1)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글로벌 SOC구축 당위성 확보

- 전라북도는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를 시작으로 2018년 전국체전, 2019년 소년체전, 2020년 생활체육축전, 2021년 프레젠퍼리대회,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중),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등 7년연속 국제행사 유치
- 세계잼버리대회 기간동안 경제적 파급효과는 1,198억원의 생산, 1,098명의 고용, 406억원의 부가가치 발생효과(전북연구원, 2018)가 있으며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제공항 및 고속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기구축 필요
- 김제공항의 지속사업으로써 예타면제뿐만 아니라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공항건설을 위해 패스트트랙 조성 필요

(2) 전북권 광역순환교통망(Tram-Train) 구축

- 기존 전라선 및 호남선 복선전철화 노선을 활용하여 KTX에 의한 고속화시대 편익을 전북권 내에 확대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 사업필요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국가정책과 부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교통비용(시간비용 포함) 및 환경비용(이산화탄소 저감 등)을 저감하는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으로 트램-트레인 국가시범사업 추진

- 현재 트램, 경량전철 및 지하철 도입을 검토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트램-트레인 검토를 수

행한 결과 전북광역권의 편익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전북 광역권에 트램-트레인을 도입할 시 매년 18,662.6백만원의 편익 발생(전북연구원, 2016)



〈그림 4-16〉 전북권 트램-트레인 실용화 및 신설노선

(3) MICE산업 기반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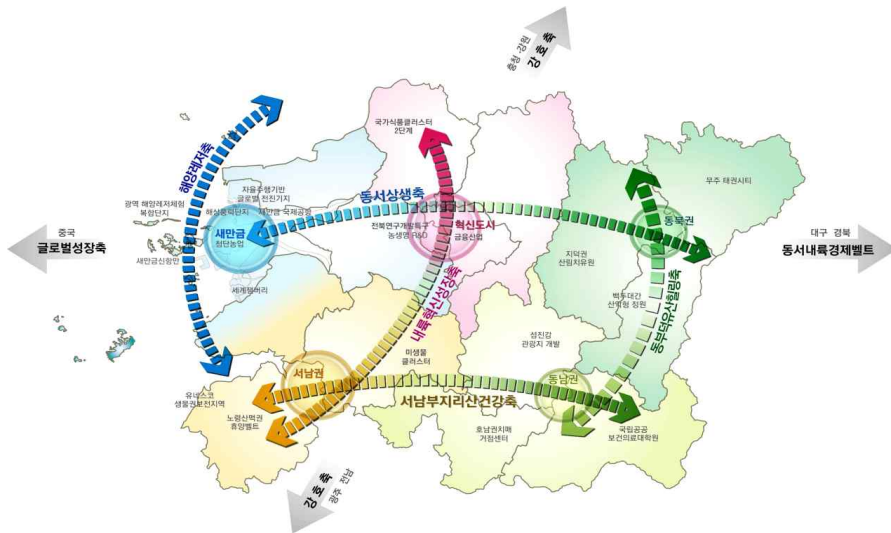
- 전북의 문화적, 지역적 강점을 활용하여 문화체험, 예술향유, 금융, 교육, 농업, 환경 등과 관련된 전시회, 국제회의의 정기적, 지속적 유치·개최로 체류형 컨벤션 목적지 조성
- MICE행사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어촌·산촌의 협력강화 및 문화·예술·금융·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
- 전국대비 3%수준의 컨벤션시장을 전국대비 5%(2023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아래 나형 복합컨벤션센터 및 컨벤션뷰로 설치

9) 지역격차 해소

- 전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 국내 1,000대 기업의 본사 73.6%, 종합부동산세 비중 79.1%, 공연예술 횟수 65.4%의 인구와 경제 그리고 문화의 수도권 집중을 해체하고 지역이 강한 나라 육성필요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성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관계 전환, 재정분권 등의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
- 국가차원의 지역격차해소와 균형발전 정책과 더불어 전라북도 또한 동서,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된 지역발전전략 필요

(1) 전라북도 5권5축 균형발전

- 농생명, 생태자연, 역사문화, 융복합산업 등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의 혁신역량을 갖춘 새만금, 혁신도시, 동부권, 동남권, 서남권 5개의 거점을 해양레저축, 동서상생축, 서남부지리산건강축, 동부덕유산힐링축, 내륙혁신성장축 5개 성장축으로 연결하는 전북발전 5권5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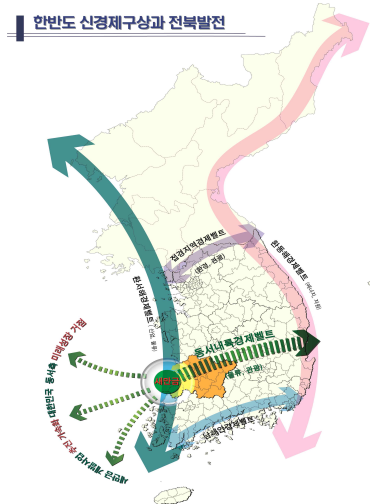


〈그림 4-17〉 전라북도 5권5축 공간발전구상

- 새만금혁신도시동부권축은 국제공항, 자율주행, 농생명산업을 내륙혁신도시중심축은 연구개발특구혁신성장, 탄소복합재, 금융산업을 동부덕유산권축은 헬스관광벨트, 지덕섬 휴양벨트, 가야역사문화권사업을 서남부지리산권축은 공공의료와 장내 유용미생물, 노령산맥권 등의 휴양치유벨트사업 추진

(2) 동서내륙경제벨트 구축

- 헌법에 명시된 균형있는 국토의 개발과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에서 소외된 동서내륙경제벨트구축을 통해 동서의 균형있는 국토개발 추진이 필요
-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7기 정책에서 최근 남북평화시대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반드시 동서내륙경제벨트가 포함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의 가속화와 대한민국 동서축 미래성장 거점을 육성해야한다고 강조
- 홀로그램, 항노화 연계 산업벨트, 가야, 동학농민혁명 연계 역사문화벨트, 백두대간 생태벨리, 전주-김천철도, 새만금-포항고속도로 등 동서SOC구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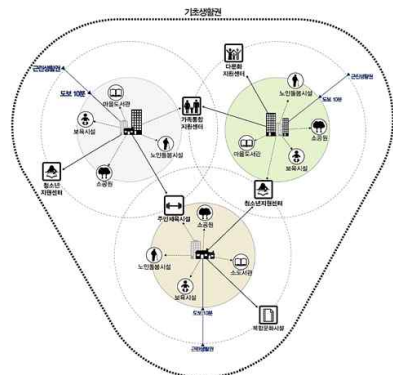


〈그림 4-18〉 한반도신경제구상과 전북발전



자료: 전북연구원, 2018

〈그림 4-19〉 동서내륙경제벨트 구상(안)



〈그림 4-20〉 인구담 거점조성

(3) 인구담 중핵도시 조성

- 지방소멸위험에 처한 전라북도 읍면동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거점마을, 중핵도시 조성 필요
- 거점마을이나 중핵도시에 문화, 복지, 생활 서비스를 집적하여 기초적인 생활권확보와 삶의 질 강화
-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 수립시 거점마을 및 중핵도시 개념 도입

10) 미세먼지 대책 등 기후변화 대응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가슴기 살균제로 시작된 화학물질포비아가 살충제 달걀과 치약으로 이어지면서 생활 속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중국발 스모그로부터 시작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3한4온이 아니라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많다는 3한4미가 일상화
- 복잡해지고 더욱더 생활 속으로 들어온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하며, 과학기술과 첨단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한 안전건강 시스템구축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차단 필요

(1) 미세먼지·악취 등 생활안전 대책마련

-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이동오염원 관리, 대기오염측정소 확대, 발생원인 실태조사, 사업장 배출원 관리 등 5개분야 12개 사업에 157억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 중

-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2159대 조기 폐차, 전기자동차 390대 보급, 통학차량 LPG전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점검, 대기오염측정소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군별 세분화

- (초)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 확대, 내부 생성물질 및 오염원 직접배출 관리, 외부유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관리 지원 등 추진 필요(전북연구원, 2018)

-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또는 이동측정소 운영을 통한 원인 파악과 원인별 대책마련으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이 필요하고 악취, 대기질 오염 등 생활밀착형 안전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제시 필요



〈그림 4-21〉 전라북도 미세먼지 추진대책

(2)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예방

- 기후변화와 이상상에 따른 피해 등을 감소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어 전라북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 기후변화대응은 폭염, 폭우, 폭설, 가뭄 등에 따른 건강, 재난재해, 환경, 농업 등 일상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유기적인 유관부서 협업시스템 구축필요
- 농도인 전라북도의 특성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 신 농업기술 보급,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 농업기반 마련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대응마련 필요

(3) 농촌 안전 스마트시티 구현

- 안전관련 민선7기 정책공약으로 민간다중이용시설 재난위기관리 안심시스템 구축,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바람길 숲 조성을 제시했으며 도정운영방향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 강화, 자연재해 최소화,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생활환경 개선, 도민체감형 물 복지 실현을 제시

-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전라북도는 빅데이터, 공간 정보 등을 활용한 안전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스마트폰과 IoT를 융합한 첨단 재난경보망 및 안전사고 사후처리 시스템 구축필요



〈그림 4-22〉 농업안전스마트시티 개념도

- 전북 농업지역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융합한 농작업재해 예방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재해 긴급대응 및 의료 정보를 연계한 서비스를 개발지원
- 정부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5

장

결론

제5장 결 론

- 민선7기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쟁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민선7기 10대 분야와 우선순위 선정

〈표 5-1〉 전라북도 민선7기 정책분야 우선순위

빈도	빅데이터분석				델파이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언론	시도지사 공약	공약 (전북)	송하진도지사 101대 공약		
1	도시	청년	새만금	새만금	산업경제	산업경제
2	청년	도시	(자동)차	지역	일자리	일자리
3	공항	일자리	청년	마을	청년	청년
4	미세먼지	산업	미세먼지	산업	농생명	금융
5	산업	미세먼지	농업	관광	새만금	농생명
6	교육	지역	일자리	(전라도천년)길	문화관광	새만금
7	복지	시민	친환경	문화	SOC	문화관광
8	문화	안전	경제	주민	균형발전	SOC
9	관광	어린이집	건강	탄소	복지	균형발전
10	공공	복지	배당	청년	안전건강	안전건강

자료 :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175호(2018) 참조 재구성

- 전국적인 이슈에서 청년, 도시, 공항(SOC), 미세먼지 등이 정책적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은 새만금, 지역, 마을, 산업, 관광 순으로 청년과 미세먼지 등의 전국적 이슈가 부각되지 못함
- 델파이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전라북도 민선7기 10대 분야는 비록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후순위로 제시되었지만 델파이조사의 기초가 된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 키워드에서는 누락된 미세먼지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
- 특히, 새만금 이슈의 경우 전북지역 도지사후보들은 1순위로 중요도를 선정했지만 델파이분석에서는 5순위, 자문회의에서는 6순위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산업경제, 일자리, 청년 등의 이슈를 도정의 주요정책으로 선정

○ 결국 전라북도 10대 추진분야는 전국 시도지사 공약의 우선순위와는 다르게 산업 경제와 일자리가 1순위와 2순위로 선정되었고 청년, 금융, 농생명, 새만금, 문화관광, SOC, 균형발전, 안전건강 순으로 선정

○ 전라북도가 공약과 기존 추진사업을 고려하여 선정한 민선7기 도정운영방향과 연구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5-2〉 전라북도 민선7기 추진분야와 연구결과 비교

우선 순위	전라북도		연구결과	
	5대목표	16대 핵심전략	아젠다	추진전략
1	삼각농정 농생명산업	제값받는 농업, 보람찬 농민 스마트 농생명 산업 사람찾는 농산어촌	군산공장 폐쇄후 후속대응	자율주행 전기상용차로 군산 산업구조 개편 관광레저 메가프로젝트 발굴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순환시스템 구축
2	융복합 미래신산업	지능형 신산업 4차융복합부품소재산업 금융·혁신·공유·창업 생태계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국가혁신클러스터 성공적 추진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연계 일자리창출 중장년&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창출
3	여행체험 1번지	여행체험산업 문화CT 콘텐츠 한국적인 생태힐링 알찬 주민문화	청년일자리창출로 청년유출 방지	로컬소셜벤처 청년혁신가 육성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전북형 청년일자리 뉴딜사업
4	새만금시대 세계잼버리	새만금 연계 SOC 대동맥 세계잼버리 준비 친환경산업 전진기지	농생명 금융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금융관련 공공기관 2차 전복이전 농생명 투자 플랫폼 구축 농생명금융 특화 블록체인실증센터 설립
5	안전·복지 환경·균형	사람중심 안전건강 포용적 맞춤형복지 차별화된 균형발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성공적 추진 농민소득주도 성장전략
6			새만금 개발속도 가속화	새만금 마스터플랜 수정계획 수립 무규제 시범도시 조성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7			전통문화보존 및 생태관광지 개발	여행체험산업 활성화로 관광일자리 창출 장소기반 전통문화산업 육성 생태적 자연환경 경쟁력 강화
8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글로벌SOC구축 당위성 확보 전북권 광역순환교통망(Tram-Train)구축 MICE산업 기반구축
9			지역격차 해소	전라북도 5권5축 균형발전 동서내륙경제벨트 구축 인구담 중핵도시 조성
10			미세먼지 대책등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악취 등 생활안전 대책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예방 농촌 안전 스마트시티 구현

- 전라북도는 민선7기 도정운영방향은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시대 세계잼버리, 안전·복지·환경·균형 5대 목표를 중심으로 16개 핵심전략을 설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아젠다는 도정운영방향의 5대목표와 16대 핵심전략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와 전략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있음
-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청년, 일자리, 미세먼지 등의 주요이슈와 전문가 조사에서 나타난 산업경제, 일자리, 청년 등의 주요정책분야를 고려하여 전라북도가 민선7기 주요하게 추진할 사업으로 10대 아젠다 제시
- 전라북도 민선7기 가장 중요하게 추진될 아젠다는 군산공장 폐쇄후 후속대응으로 현재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경제의 체질개선
 - 군산공장 폐쇄후 후속대응으로 자율주행 전기상용차로 군산 산업구조 개편, 금란도, 고군군군도, 근대역사지구를 활용한 관광레저 메가프로젝트 발굴,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순환시스템 구축을 제안
- 군산공장 폐쇄후 후속대응을 포함한 민선7기 10대 아젠다로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유출 방지, 농생명 금융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새만금 개발속도 가속화, 전통문화보존 및 생태관광지 개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지역격차 해소, 미세먼지 대책 등 기후변화 대응 순
- 특히 새만금사업의 경우 민선7기 선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현재 민선7기의 도정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델파이조사결과 전문가들은 새만금보다는 일자리와 경제의 중요성을 더욱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선정
- 10대 아젠다는 도정의 사업분야와 추진전략이 아닌 사업추진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감안하였으며, 도민의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사업발굴로 도민정책 만족도를 위한 세부적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전라북도 도정의 다양한 정책 중 민선7기의 중점추진전략을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전략 마련 필요

부 록

-
- 부록 1. 주요 정당 10대 공약 세부내용
 - 부록 2. 빅데이터 분석자료
 - 부록 3.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지

[부록 1] 주요 정당 10대 공약 세부내용

1. 주요 정당 10대 공약

1)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세부내용

〈표-1〉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주요내용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1	노동 (중소벤처)	청년행복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 현행 성장유망업종 → 전체 업종(5인 이상) 확대 - 현행 3인 고용시 1명 지원 →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 ▶ 30인 미만 기업 : 1인 고용 시부터 지원 확대 ▶ 30~99인 기업 : 2인 고용 시부터 지원 확대 ▶ 지원금액 : 1인당 667만원 → 900만원으로 확대 2)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 생애최초취업자 3년형(3천만원 자산형성) 신설 - 기존취업재직자 대상 5년형에 정부지원 신설(최대 3천만원 자산형성) 3) 청년이 일하고 싶은 혁신산업단지 조성 -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벤처·창업기업, 문화편의시설 등) - 스마트공장 집중 보급(작업환경 개선, 생산기반 혁신 지원) 4) 청년의 해외취업 확대 지원 - 해외취업지원(K-Move) 내실화(국내·현지 연계 맞춤형 교육 등) - 해외봉사단원을 지역전문가,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문가로 성장지원 5) 청년고용의 공정한 출발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현행 3개월 30만원 → '19년 6개월 50만원 - 투명채용 확산, 공공부문 채용비리 엄단, 채용비리 제제 규정 신설 6) 청년여성 '내 일 찾기 센터(가칭)' 운영 7) 청년일자리 고용안전망 강화 -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령별(청년층) 차등화 폐지 ▶ 현 30세 미만 90~180일, 30~50세 미만 90~210일 → 50세 미만 120~240일로 일원화 8)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 - 복합영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 :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의 연계 -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확대 : 18년 10곳 → 22년 40곳 - 가업승계 청년상인 대상 컨설팅 및 신메뉴(신제품) 개발 등 지원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1	노동 (중소벤처)	청년행복	9) 고졸 인력 양성 및 고졸재직자의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 특성화고에 스마트제조 등 4개 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 지원 - 후진학자 학자금(희망사다리장학금 II 유형) 신설 및 지원 10) 청년 맞춤형 주택정책 - 공적임대주택 25만실 공급 및 기숙사 5만명 지원 - 공공 쉼어하우스 공급 확대 - 청년위한 금융지원 및 주거정보제공 강화 - 1~2인 가구 맞춤형 주거공급 확대
2	환경	미세먼지 해결	1)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기질 예보 정확성 제고 - 빅데이터·인공지능활용 대기질 예보시스템 구축 ▶ 고농도 시 정확한 예보 실현 ▶ 다목적 관측 환경위성 운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 2)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 - 발전·산업부문 배출량 획기적 감축 ▶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 불허 ▶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대기배출기준 대폭 강화 ▶ 시멘트 철강 등 다량배출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 - 경유차·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강화 ▶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촉진을 통해 경유차 적극 감축 ▶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 LPG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 ▶ 주택가 운행중인 생활형 노후 경유화물차 LPG 전환 추진 3) 건강취약계층(노인,영유아 등) 보호 및 학교미세먼지 관리강화 -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환기·공기정화 시설장비 설치 단계적 지원 ▶ 보호가 필요한 노인 및 아동 우선 지원 -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에 마스크 지급, 저소득계층 자녀 대상 마스크 지급으로 가계부담 경감 -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코환경 조성으로 교실 미세먼지 걱정 해소 - 실내체육공간 확충, 유흥공간 활용한 체육수업 운영 -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추가로 조기진단체계 구축 4) 환경 조성 및 국제협력 강화 - 미세먼지 저감 위한 도시숲 조성 및 산림관리 강화 ▶ 오염원 발생 및 대기 정체구역에 미세먼지 저감숲, 바람길숲 조성 ▶ 실내공기질관리대상기관에 미세먼지 저감효과 식물 보급사업 추진 - 한중(동북아) 협력 강화 ▶ 미세먼지 이동관련 정보 공유, 공동연구 강화 ▶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출범 추진 ▶ 중국 북부지역 대기질 연구, 한중 공동관측 '청천 프로젝트' 수행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3	안전	국민생활안전	1)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 사전차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전과정 안전관리체계 구축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의무화 및 관리기반 강화 - 발암물질 배출량 저감 추진 2)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 생산·유통·소비·환경·안전 전 과정을 지역 내에서 선순환 하는 구조 -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여부 알 수 있도록 표시제 개편 -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 ▶ 생산에서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정보를 기록 및 관리 3)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감축 - 대형교통사고 예방 로드맵 구축 ▶ 사고다발지점, 위험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부분 집중개선 ▶ 보행자 중심으로 속도 관리체계 전환 - 운수 노동자 휴식 모장 및 처우개선, 버스준공영제 확대 4) 재난사고 전담 신속대응센터 설치 등 재난 신속대응 - 지자체에 '재난사고 전담대응센터' 설치 ▶ 지자체 컨트롤타워-중앙정부 지원의 체계화 - 대국민 재난정보체계 개선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진해일분석·예측·전달체계 고도화 5) 초고층건물 안전관리기준 및 다중이용업소 피난설치기준 강화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적극 추진, 기존 건축물의 보강 촉진 -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설치기준 강화 - 필로티 화재안전기준 강화, 가연성 자재사용 억제 - 화재피난시설 의무설치 건축물 확대 및 소방시설기준 강화 6)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긴급신고전화 접수기능을 지방해경청으로 통합 - 공청시스템 도입·운영으로 상황관리체계 및 즉시출동태세 강화 - 구조거점 파출소 지정(12개소)하여 즉시 대응 7) 주민밀착형 치안강화를 통한 범죄 예방 - 고화질 CCTV설치 확대, LED 보안등 등 치안기본장치 확충 - 범죄예방활동과 기반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8)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 절반감축 및 건설현장 안전강화 - 발주자의 단계별 책임 명확화, 중대 재해발생시 입찰불이익 -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전수 조사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9) 원전 안전 기준과 원전 주변지역 주민보호 대책 강화 -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승인제도 도입 ▶ 10년 단위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 - 지진에 대한 원전부지 안전성 및 내진설계 기준 재검토 ▶ 최신 경주지역 지진상황 반영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4	과학기술 정보통신 교육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1) 과학기술혁신 -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R&D투자 확대, 기초연구 지원 강화 - 민간의 R&D투자 확대 ▶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술범위 확대 등 2) 혁신창업 -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인프라 조성 - 신규 벤처투자 펀드 조성 및 투자 추진 ▶ 1.8조원 벤처펀드 조성, 청년창업·4차산업혁명 등 분야 집중투자 ▶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단계적 조성 ▶ 혁신기업에 대한 20조원 규모의 연계 대출 프로그램 마련 - 기술거래시장 선도 ▶ 기술금융, 기술거래플랫폼 등 기술거래 및 평가에 필요한 인프라 융합 3) 사람 혁신 -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 위한 대학 혁신 지원 확대 - 우수 고졸인재 양성 ▶ 미래유망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 및 4차산업혁명과정 개설 4) 사회제도 혁신 - 혁신성장 옴부즈만·혁신성장 지원단 등을 통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 이해갈등 과제는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규제혁신방안 논의 -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제도 도입 추진 5) 규제혁신 - 규제샌드박스 도입하여 혁신적 사업시도 장려 ▶ 지역의 신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추진 ▶ 규제샌드박스 도입 위한 규제혁신 5법 입법 추진 -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특구' 신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으로 지역혁신성장 견인 6)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 육성 - 스마트시티,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산업, 초연결 지능화 사업 우선 육성
5	외교통일 국방	한반도 평화	1)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2018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판문점 선언 이행 - 미·중·일·러 등과의 정상외교 통한 국제사회지지 확보 - 남북 고위급회담, 국회회담 등 다양한 회담 추진 -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추진 - 판문점 선언 이행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으로 남북 공동 번영 달성 -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 ▶ 환동해권 경제벨트, 환서해권 경제벨트, DMZ환경관광벨트 조성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5	외교통일 국방	한반도 평화	3) 남북 교류 다양화·활성화로 상생의 남북관계 형성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로 당국간 협의, 민간 교류협력 보장 -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 역사, 문화, 종교, 산림, 환경, 재해재난, 여성, 청소년, 청년, 노동계, 방송계 등 - 6.15 등 의미 있는 날을 계기로 민족공동행사 추진 4)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이산가족 상봉 상시 정례화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추진 - 북한주민 삶의 질과 인권개선을 위한 종합적 접근 -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구축 5) 통일공감대 확산으로 평화·통일odzi 고양 - 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인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 지역통일센터 확대 설치, 균형있는 평화·통일교육 확대·강화 6) 신경제지도 추진을 통한 한반도의 동북아 평화경제협력허브로 발전 및 평화변영정책의 외연 확대 7) 책임국방 구현할 수 있는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 -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 굳건한 한미동행 바탕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 장병 복무여건 개선 ▶ 봉급 연차적 인상, 낙후 병영시설 현대화 추진, 군사법개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8)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 - 국방 R&D 지식재산권 과감한 민간 이양 9) 보훈가족 위한 의료·요양시설 확충 및 국립묘지 안정능력 확충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내실있게 추진 10) 국민외교 구현, 영사서비스 확대로 글로벌 통상질서 확립에 기여
6	행정자치 건설교통 농림해양수산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1) 중앙의 권한·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현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제도 도입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 확대 -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보호 강화 -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확대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개인이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혜택) 2) 주민참여제도 확대 및 개선으로 주민권리 강화 - 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 요건을 조정 및 차등화 - 주민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 활성화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6	행정자치 건설교통 농림해양수산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3) 청정분권 실현 - 공익제보자 센터 설립으로 권력형 비리 등 다양한 지역적폐 해소 - 청렴도 평가 상위 지자체의 경우 재정인센티브 부여 4) 혁신도시 시존2(스마트시티)로 균형발전 완성 - 공공기관의 지역사회기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투자지원제도의 개편으로 유턴기업 등의 지방투자 확대 5) 도시재생뉴딜로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질 개선, 일자리창출 실현 - 노후 주거지에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 확충 - 지역재생에너지산업 적극 육성 - 청년창업 활성화 및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 6)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 육성 - 혁신도시 등 지역의 핵심거점 연계하여 시도별 맞춤형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7)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대도시권 교통난 획기적으로 해소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설립으로 광역교통 혼잡, 안전문제 등 해결 - 광역급행버스(M버스) 확대, 수도권 내 광역전철망 지속 확충 8)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 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지역 규제완화 추진 - 4대강 재자연화 추진 - 통합물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 참여형 지역문화 실현(매년 동호회 100개 결성, 작은문화시설 등) - 인구 100만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 - 지역주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 및 지역방송 활성화 - 신문시장의 건강화 및 지역신문 지원으로 신문언론 발전 9) 미래농업의 핵심주체 육성하고 식품산업의 지역거점산업 육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복합 푸드랜드마크 조성, 국비지원 확대 - 영농창업 지원 : 청년창업농 1만명 선발 - 숲을 일자리와 휴식 공간으로 재창조 10) 어촌 살리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 스마트 육상 양식단지 시범조성, 스마트 해상물류 구현, 연안 및 항포구의 정주 개선 -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확립, 갯벌 생태계 개선 위한 복원사업 확대 - 수산자원 회복위한 자율 휴어제도 도입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7	노동 경제 (중소벤처)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차질없는 지원 - 사업주 및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 - 대규모점포의 입지·등록·영업규제 강화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2)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및 소득 향상 - 생활임금제도 전면화, 공공기관 시중노임단가 적용 대상 확대 - '체불임금 ZERO 시대' 실현 : 현장감독 강화,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3)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보장, 상가세입자의 권리보장 -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 5년 → 10년 - 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상권 활성화 도모 ▶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 온라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새로운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수수료 제로화 추진 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충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전용예산 '18년 2.1조 → '22년 4조원 규모로 확대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 '22년까지 1.5만개 혁신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성공모델 확산 5) 지역맞춤형 일자리 위해 지자체에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 광주형일자리 등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 6) 노동시간 단축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노동시간 단축(1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노동자 기업 부담 완화 - 노동시간 조기단축 유도위한 지원 7)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으로 차별없는 일터 조성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2017.7.20.)대로 추진 -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여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 비정규직 차별 제로화 실현 - 도급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법적 보호 강화 8) 국민에게 편안한 쉼터, 좋은 일터로 농촌을 재생 - 기준소득금액 상향으로 농업인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 농지 감정평가율 상향(80%→90%)으로 농지연금 지급액 확대, 분권형 자치 농정 실현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7	노동 경제 (중소벤처)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9)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로 서민부담 경감 - 1회용 티켓 외 다회 이용 쿠폰 발행 - 일·주·월·시간제 패스 등 다양한 교통상품 공급으로 선택권 강화 및 교통비 절감 - 버스준공영제 강화 10) 노동존중 사회실현과 실직·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 -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
8	정치 산업 (중소벤처)	상생하는 공정경제	1) 재벌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 제도화 - 재벌총수 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총수일가 전횡방지 위한 법적기반 구축 2)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중소기업의 대기업과 거래과정 협상력 강화 -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 -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가칭)' 설치 3) 납품단가 적정가격 보장으로 공정한 시장 형성 - 공공조달시장 및 민간하도급시장 납품단가 현실화 4) 소비자 권익보호 확대, 공정거래 감시 역량 강화 -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소비자단체 소송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개선 - 공정위의 법집행체계 개선 추진 ▶ 전속고발제도 개편,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배상제 확대, 과징금 상향 등 5)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이익 보호 -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참여하는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 6) 공정과세 실현으로 정의사회 구현 -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 - 탈루소득 과세 강화 7)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정책금융과 금융혁신을 통한 생산적 금융 실현 - 정책자금 안정적 공급,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 - 다양한 핀테크 사업자 출현 지원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으로 창업 초기단계 혁신형기업의 판로 개척 8) 소비자 우선의 포용적 금융 실현 - 금융소비자의 가계부담 경감, 법정 최고금리 단계적 인하(24%→20%) -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 마련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법제화 추진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8	정치 산업 (중소벤처)	상생하는 공정경제	9)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으로 경제의 허리 강화 - 월드챔프 1조 클럽 '22년까지 80개 육성 - 글로벌 혁신 역량 강화로 중견기업 수 '22년까지 5,500여개로 확대 - 민관공동창업프로그램(TIPS)타운 확산으로 지역 창업 활성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시 지역고용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 10)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 집중 육성 - 사회적경제 3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형성
9	보건복지 교육 문화관광 건설교통	보육, 교육, 복지, 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1) 유아교육 만족도 향상, 안심보육환경 조성, 초등돌봄 확대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22년까지 40%(22.4만면)로 확대 -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인상 - 0~5세 보육료 현실화로 보육인력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 국공립 어린이집 단계적 확충(전체 40% - 취원 아동수 기준) - 학교 초등돌봄 확대로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 보건복지부, 지자체, 교육청 간 협력으로 마을돌봄 확대 - 지자체 민관학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 2) 고교무상교육실현, 국가장학금 확대, 취약계층 교육복지 확대 -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시행('20년 실시, '22년 완성) -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 지원 확대('19년부터 최저교육비 100% 수준) - 등록금 지원 수혜대상 확대로 중산층 이하 가정까지 반값등록금 지원 3)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추진 지원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 MRI, 초음파 등 고가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12세 이하 아동 총치치료 및 선천성 기형 교정치료 건강보험 적용 - 무료 독감 예방접종 중고생과 임신부까지 확대 4)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보육·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 시설 지자체 직영, 종사자 처우개선 - 복지종사자 임금인상·임금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 사회복지직 1일 8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 보장 5) 효도정책 시행 - 치매국가책임제 강력 추진 : 모든 기초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50% → 30%) - 노인 일자리 '22년까지 80만개로 연차적 확대 및 다양화 6)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강국 건설 -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역사문화 조성·콘텐츠 중심 문화유산정책 수립 - 문화예술인 생활복지,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 - 국민건강권 확보 위한 체육환경 조성, 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 - 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활성화 위한 제도 혁신 - 이용자 중심 미디어복지 구현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9	보건복지 교육 문화관광 건설교통	보육, 교육, 복지, 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7)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으로 권리보장 강화 - 장애인 교육, 이동, 문화여가 접근권 강화 8) 계층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선순환 주거복지 구현 -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정책 주거복지 구현 ▶ 토지 공공성 강화, 소득주도성장에 맞는 부동산세제 개편, 주택시장 선진화 등 -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정책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등 -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충('22년 실입주 3만명) - 다양한 형태의기숙사 제공 ▶ 학교 밖 국·공유지 확보 등을 통한 연합기숙사 등 - 장수명주택 지원 활성화·녹색건축 확대 등으로 주거만족도 향상
10	여성	성평등 사회와 가족 행복	1) 성평등 사회 완성 노력 - 성평등 위원회 설치 및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18~'22)수립 - 정부·지자체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2) 사회 각 분야의 여성참여 및 여성대표성 향상 -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에 따른 여성비율 10% 확대 실현 및 상향화 -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 20% 확대 추진 - 정부위원회 여성 위원 40% 지속적 달성 노력 3) 젠더폭력 근절, 여성 안전사회 구현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 - 다양한 유형의 젠더폭력 처벌 강화 4) 인권·성평등 교육 강화,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 성범죄 교육 공무원 퇴출로 학교 내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 - 학교 내 인권·성평등 교육 강화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성폭력 예방교육 필수화 -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5) 위기청소년의 새로운 출발과 건강한 성장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위기청소년 지원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복지시설 확대 및 지원 인프라 확충 6) 위생용품 바우처제도 도입 등으로 여성청소년 건강한 성장지원 - 현물 지원 및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위생용품 지원 추진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10	여성	성평등 사회와 가족 행복	7) 양육비 지원 강화 등 으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확대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위한 법률지원 강화 - 양육 한부모에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 생활설계 및 지원 안내를 통한 미혼모·부 자립지원 강화 8)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이중언어 인재 풀 확충을 통한 일자리 연계 강화 -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설치 추진 9) 일과 삶의 균형위한 건강한 일자리 지원 강화 - 경력단절여성 지원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 ▶ 임신 상태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인상, 출산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로 확대

2) 자유한국당 10대 공약 세부내용

〈표-2〉 자유한국당 10대 공약 세부내용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1	노동 산업자원	자영업자·소상공 인 기살리기	1) 최저임금 합리화 - 최저임금 인상 합리적 조정 : 인상결정기준 근거 의무제시 규정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시 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력 회복 -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 법제화 - 영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3억 이하 영세 가맹점 : 0.8% → 0.5% ▶ 3억~5억 이하 중소가맹점 : 1.3% → 1.0% - 영세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상가권리금보호대상에 포함 - 임차인 보호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포털사이트의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갑질행위 차단 3)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 -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시설물 재난보험' 도입 - 전통시장 주차시설 대폭 확대 : '21년까지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 - 전통시장 입주 청년창업인 대상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 시행 -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추첨제도' 도입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2	재정경제	서민·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1) 서민 세금 줄이기 - 유류세 인하 : 2,000cc 미만 승용차 유류세 50% 인하 추진 - 퇴직자 지원 : 납부한 고용보험의 20% 환급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확대 및 세제혜택 추가 ▶ 연금저축, 퇴직연금 구분없이 연금계좌 합산 연 7백만원 세액공제 한도 혜택 ▶ 50세 이상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 대상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추가 확대 2) 가계부담·금융부담 줄이기 - 버스, 지하철 통합 월정기권 교통카드 도입(학생 3만원, 성인 5만원) ▶ 4인가족 기준 약 월 10~15만원 교통비 부담경감 효과 ▶ 수도권 통합정기권 운영 등 광역알뜰카드 출시 -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기 ▶ 알뜰폰 전파사용료 다년간 면제(3년) ▶ 사용자는 무료, 제로레이팅(스폰서요금제) 도입 - 가계금융 부담 대폭 낮추기 ▶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 국무총리실 중심, 실손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연계관리 강화 - 예금자 보호한도 7천만원으로 확대 3) 강동전세피해 방지 위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 인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보증보험료 인하 ▶ 대상 : 3억원 이하 아파트,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 금액 : 1억 기준, 1년 보험료 5만원으로 하향 조정 - 보험료 할인(40%) 대상자 확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맞벌이부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1인가구까지 확대
3	재정경제 농림해양수산	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1) 법인세 인하로 기업살리기 - 법인세 누진구조 2단계로 단순화, 과표구간별 세율 2~5% 인하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최저한세율 조정 : 과표구간별 2%p씩 인하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으로 기업의 세 부담 경감 ▶ 민간부문 고용 및 투자여력 확대, 해외자본 유출 방지 효과 2)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 산업별 규제 완화 일정지역 한정시행 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 -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 지원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제정 추진 - 지역 내 미래 신성장산업 거점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3)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통한 69만 일자리 창출 - 서비스업 분야 산업경쟁력 제고 ▶ 서비스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 위한 특성화 교육 강화 ▶ 서비스산업 특성 반영한 R&D 기반 강화·자금·세제·구매·판로 확대 등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3	재정경제 농림해양수산	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4) 4차산업 육성 - 신기술 신산업분야 규제 특례 제도,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 - 일자리 4.0, 전국민의 평생 일자리화 - 네거티브규제 기반한 신산업 육성 위해 '신기술인허가위원회' 설립 - 「신산업 규제완화 특별법」, 「4차산업혁명 일자리특별법(제)」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스마트시티”, “스마트타운” 육성 -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제조(생산)현장 혁신 5)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국내복귀 기업의 세금부담 경감으로 사업기반 안정 여건 조성 ▶ 대기업에만 금지된 ‘부분복귀’를 지방에 제한적으로 허용 ▶ 국내복귀 기업의 감면기간 연장 및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3년 유예 등 세제혜택 제공 6)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기 - 농어업재해 보험료 국비지원 70%로 확대 - 농어업인 면세유 및 금융비과세 등 조세지원 연장 - 농약 살포용 드론 무료 보급
4	환경 안전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1) 미세먼지 발생원인 줄이기 - 노후 경유트럭 LPG1톤 트럭으로 교체시 최대 3백만원 지원 -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70%) ▶ 노후경유차 폐차 후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교체시 -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및 30년 이상 석탄발전소 3~6월 가동중지 -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대폭강화 - 「환경친화적 선박법」제정 및 지원금 확대 - 선박 미세먼지 감축 위한 AMP(육상전원공급설비) 확충 -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확대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 -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위한 집중 연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2) 미세먼지 제대로 측정하기 - 미세먼지 측정기 재설치 ▶ 미세먼지 측정망 전수조사 및 측정기 설치 높이 현실화 ▶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등급인증제 도입 -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 관리 ▶ 지하철 역사에 사람 코높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확대 ▶ 미세먼지 측정 시 시설별·연령별·대상별 차등 기준 마련 ▶ 지하철 흡배기구 높이 상향,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도입 3)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지키기 - 영유아·노약자 이용시설부터 마스크 지급 및 공기청정기 설치 ▶ 어린이집, 경로당부터 단계적 설치 4) 중국에 미세먼지 피해보상 촉구 - 양국 중재재판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을 통해 중국에 피해보상 요구 -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외교 강화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5	통일외교 통상 국방	완전한 북핵폐기 위한 강한안보 당당한 외교	1)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로 북핵 대응 외교력 강화 -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 달성 -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추진 2) 완전한 북핵 폐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 구축 - 국제공조 통한 전방위적 대북 제재 · 압박으로 비핵화 추진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전력 확충 - 한미동맹 강화 통해 억제 및 대응능력 발전 ▶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 및 정찰능력 구비 ▶ 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 ▶ 핵심지역 파괴 위한 고위력 타격 전력(KMPR) 확보 ▶ 한미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 미사일 대응능력 및 태세 발전 ▶ 북한 핵 · 화학 · 생물 위협 대응관련 한미협력 강화 ▶ 북 SLBM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 북의 EMP공격에 대비한 방호 대책 구축 3) 대북 퍼주기 막고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시대 개막 -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없는 대북지원 반대 - 자유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안보교육 추진 - 통일준비 네트워크 구축 및 통일기반 조성 -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교류협력에 대한 예산감시 및 견제 강화
6	노동 보건복지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1) 일자리(고용) 안전망 구축 -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저소득 근로자에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3배 이상 확대 지원 ▶ 근로장려제도의 수급자 범위 확대, 최대 지급액 대폭 인상 등 - 저소득층 및 청년 대상 취업수당 지급(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 대상 : 근로능력있으나 실업상태인 저소득층과 청년 ▶ 지원내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고용보험, 실업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으로 구성된 4중 사회안전망 구축 -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 인상 ▶ 구직급여 지급일수 연장 : 90~240일 → 120~270일 ▶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60% 2) 자살이력 위기가정 보호 강화 - 자살이력 있는 가정은 재산, 소득 상관없이 위기가정으로 지정 - 자살시도자 · 유가족 긴급지원 연계체계 핫라인(경찰서-복지기관)구축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 - 전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추가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6	노동 보건복지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3) 장애인과 함께 따뜻한 동행 - 특수교육과 운영 대학교 내에 부설 특수학교 설립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지원액 인상 및 내구연한 축소) - 최종중장애인 대상 24시간 활동지원급여서비스 - 장애인콜택시 150명 : 1대 로 증차 - 공공 교통수단 · 여객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 ▶ 원격교육 확대, 스마트기기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교육, 홈스쿨링, 소규모 그룹프로그램 개설
7	여성 보건복지	저출산 극복,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만들기	1) 일가정양립 - 엄마·아빠 출산휴가 / 육아휴직 보상 - 아빠 출산휴가 한달 유급 및 육아 우수동참기업에 세제혜택 부여 - 부부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육아휴직 급여 동시 지급)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1회 → 3회) - 육아휴직 부부합산 2년 사용 후 3개월 추가 부여(부모 중 1인 해당) 2) 임신(난임)·출산·보육 국가가 함께 책임 - 근로자 난임휴가 확대, 난임 휴직 도입 ▶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난임휴가 보장 ▶ 일반 근로자도 난임치료휴직 보장(최대 90일) ▶ 난임으로 이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게 개선 - 첫 아이 임신까지 난임시술(건강보험)지원 횟수제한 폐지 - 모자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시간 확대 ▶ 평일 중 하루 오후 9시 까지 연장, 토요일은 격주 운영 - 모자보건지소에 '출산코디네이터제도' 운영 ▶ 출산과정 전반에 걸쳐 심리상담 및 안정지원 ▶ 출산 이후 육아상식, 산후 우울증 등 관련 맞춤형 케어 지원 ▶ 경력단절여성 대상 '출산코디네이터' 양성 - 미숙아 가정지원 강화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30일 추가 부여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백신 무료접종 미숙아 전체로 확대 -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연 3백만원 한도)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 -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대(공기청정기 설치, 위생점검 의무화) - 장난감 도서관 전국 확대 및 편리한 장난감 반납 지원 3) 한부모도 마음껏 양육 -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 1세미만 모든 미혼모 · 부의 경우 자산, 소득, 부양의무자 무관하게 기초생활수급자지위 최대 1년까지 제공 -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조사 가능 -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 강제 위한 제재 강화 - 양육환경개선 및 국가가 부담하는 양육제도 수립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8	보건복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1) 노인복지청 설립 -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인복지업무 일원화로 노인정책 총괄 2) 어르신 부담 완화 - 재산세 대폭 감면(공시지가 3억원 이하) - 만 60세 이상 노인에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 중증 와상 노인 거주시설부터 자동대소변 처리기 단계적 도입 3) 홀로 어르신 지원 강화 - 고독사 예방센터 설치 - 전국 고독사 전수조사 및 고독사 위험지도 작성 - 노후화된 IoT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교체 - 독거노인가구 전체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단계적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4) 경로당국가지원 확대(식사도우미, 주치의제도, 양곡비, 냉난방비) - 경로당 식사도우미와 주치의제도 도입 -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국가지원, 법률에 명문화 5)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 지자체-고용복지센터-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계 근로활동 지원 강화 ▶ 통합적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제도 구축 ▶ 전국 시군구 단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확대 설치 및 컨설턴트 배치 - 노인교육지원법 제정 - 노인 특화 공약분야 일자리 발굴 ▶ 도서관 구연동화 활동, 이주여성 요리도우미 등 - 노인 통합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창업희망 대상 컨설팅, 행정사항 안내, 창업교육 등 6)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 - 65세 이상 초중등 무상 평생교육 시행(가칭 시니어누리과정) - 평생교육학습시설 이용한 전국민 대상 생활과학 교육 활성화
9	기타(청년) 건설교통 문화관광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	1)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청년기본법 제정) -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지정 -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청년정책 책임관 지정 2) 청년 주거복지 확대 - 청년안심주택 및 행복연합기숙사 공급 확대 ▶ 청년안심주택 : 향후 5년간 매년 5만호씩 공급 ▶ 행복연합기숙사 : 향후 5년간 6만 명에게 지원 - 셰어하우스 거주 청년층 독립 세대주 권한 부여 ▶ 독립세대주 권한 부여로 국민주택 청약신청 자격 부여 - 청년 주거고민상담소 설치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9	기타(청년) 건설교통 문화관광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	3)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무이자로 전환 - 청년 장병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 도입(취업역량강화)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22년까지 제도 연장 및 3년간 소득세 100% 감면으로 일원화 - 지속가능한 법률지원시스템으로 스타트업 지원 ▶ 정부운영 '리걸 파트너십 센터'플랫폼 구축으로 전문로펌 매칭, 6개월 간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 지원(1회 연장 기능) - 산업단지 내 청년선호 복합문화시설 확충 4) 청년 대상 국내탐방 지원 '꿈찾아발굴단' - 청년대상 국내탐방을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 제안 발굴단 선정 -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탐방자금 지원
10	교육 안전 과학기술 정보통신	아이들의 교육, 돌봄,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1) 방과후 등지학교 설립으로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육 통합 운영 -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 통합하여 '방과후등지학교 체계' 신설 - 교육지원청별 지역내 인력풀 관리 시스템 구축 - 국가 교육과정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양적질적 다변화 2)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부활 - 원어민, 한국인 교사 동시수업 강화 - 영어체험 프로그램 참가 확대 3) 학교에서 4차 산업 인재양성 교육 - '첨단미래학교' 확대, '지능형 학습플랫폼',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 학교 무선망 프리존 전면 구축 - 전국 교육지원청에 '4차 산업혁명 체험실' 설치 4) 정시확대로 대입제도 정상화 - 대입 정시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대입전형 6년 예고제 추진으로 대입혼란 최소화 - 소외계층 선발 확대 5)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조성 - 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 확대 - 어린이 스쿨존 내 동시신호제(All-Green, All-Red) 도입 - 스마트 신호등 설치 확대 -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신설 - 전국 모든 학교 지진 대비 내진 보강 - 모든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용 전기료 추가 인하 - 학교 내 소화소 CCTV 확충,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연계 의무화 6)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 필수 설치 - 노후 출입문, 창문 전면 교체 - 초·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의 설립 확대 및 개보수 - 미세먼지 경보 등 긴급상황 대비 미세먼지 마스크 비축배포 지원

3) 바른미래당 10대 공약 세부내용

〈표-3〉 바른미래당 10대 공약 세부내용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1	재정경제 산업자원	활력 넘치는 바른 경제, 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	1)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적용제도 법제화 2) 실패경험이 성공의 씨앗이 되는 ‘칠전팔기 플랫폼’ 구축 - 창업실패사례 DB구축, 원인분석, 교육 등 3)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청년 취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4) 중소기업 재직 청년대상 국민주택 및 주택 특별공급 우선분양 5)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 최대 20% 할인 6) 소상공인 맞춤형 AI 상권분석시스템으로 생존율과 자생력 강화 - 소득소비·인구·교통·매출 등 상권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정보 제공 7)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로 사회안전망 구축 - 대상 : 3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자영업자 - 내용 :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50%~90%까지 지원, 실업급여 수준과 지급기간을 근로자와 형평을 맞추도록 개선 8)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를 일정수준까지 지원 9) 중소기업에 피해가는 블랙프라이데이의 불공정 구조 개선 -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부과 명시 - 유통구조방식 변경 : 특약 매입 중심 → 직매입 방식 10) 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갑질 및 불공정 거래 근절 - 가맹본부 갑질 근절법으로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 가맹사업법 수준으로 대리점 보호 강화
2	노동 보건복지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	1)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 근로시간 초과한 시간을 저축해 휴가나 휴식에 사용 2)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동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육아휴직 1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으로 확대 4) 임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 - 현재 임신 후 12주 또는 36주 이후만 가능 5)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 접종 6) 미세먼지 없는 공공시설 실내놀이터 및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 보건소, 문화회관, 평생교육시설 등의 유휴 공간 활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아파트 실내놀이터 설치 의무화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2	노동 보건복지	위라벨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	7) 학교환경 위해물질 사전 차단 종합점검체계 마련 및 학교내 위해물질 측정기 설치,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8) 학교 안전 보호지역 통합지정 및 통학로 학생 보행 안전 확보 9) 학교 안전사고 무상치료 실시 - 학생, 교육활동참여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및 무상치료 10) 주민자치센터 ‘초등돌봄 재능교실’ 운영 11) 아이돌보미 임금보전제 실시 - 지자체 보전금을 통한 아이돌보미 임금 현실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자체 통합관리체계 구축
3	환경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친환경에너지 푸른 미래	1) 지역별 미세먼지 맞춤형 관리 - 지자체별 미세먼지 저감목표 수립, IoT측정망 체계 구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청정미세먼지 조례 제정 - 건설노동자, 어린이, 노인 등 지원 2) 1억 그루의 미세먼지 정화숲 조성 - WHO권장 1인당 9㎡ 도시숲 면적조성, 건물외벽 등 식물벽 조성 3)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특별 대책 수립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정보공개 의무화 4)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과학적 규명으로 근본대책 마련 -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장거리이동오염물질 감시체계 구축 -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위 감시체계 구축 5) 국내 미세먼지 감축위한 제도 개선 - 사업장 굴뚝 TMS(굴뚝원격감시체계)정보 연중 실시간 공개 - 자동차 미세먼지프리 마일리지 시행으로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친환경운전 점수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 6) 폐지수거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 폐지수거 노인 대상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인상 및 지자체도 지급대상에 포함 7) 재활용품 공공기관 의무구매로 재활용 활성화 - 재활용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구매량 법제화 - 재활용품 수입기준 강화 - 조달청 우수조달품목에 환경표지 및 GR 제품 인증·공동판매 8) 청정에너지·에너지 복지 시대를 여는 에너지 분권 실현 - 청정에너지 조례 제정 및 에너지 복지 확대 - 바이오 에너지마을 조성으로 에너지자립과 부가소득 창출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4	보건복지 문화관광 건설교통 과학기술 정보통신	생활의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는 복지	1) 통신복지해책 강화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데이터 프리시대 개막, 통신비 저렴한 알뜰폰 활성화 지원 - 제로레이팅 활성화, '중고폰 유통 활성화 진흥센터' 설립 추진 -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 · 면제 추진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노인, 차상위계층에 통신비 바우처 지급 2) 영화관람료 · 음원사용료 소득공제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내용 : 연 100만원 한도로 사용료의 30% 공제 3) 알뜰하고 여유로운 결혼식 위한 공공기관 개방 4) 금연 실천시 건강보험료 50% 할인 - 금연치료지원사업 프로그램 완수, 익월부터 1년동안 50% 할인 5) 공공도서관 밤 10시까지 연장 개관 및 문화행사 활성화 6) 반려동물 관리체계 선진화 및 동물복지 강화 - 반려동물 이력제 단계적 도입 및 이력제와 연계한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보험비 일부 지원 7) 저소득 청년 1인가구 · 신혼부부에 주거비 지원 - 월평균 10만원 주거안정자금 5년 한시 제공(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8) 친육아주택인증제도 도입 - 출산, 양육에 필요한 주택의 품질과 넓이 기준 및 도달 목표 마련 - 전국 공공 · 민간주택(단지)에 친육아시설 설치 기준 및 목표 마련 - 3세대 동거세대에 공공 · 민간주택 입주가산점 부여 9) 주거빈곤 차상위 고령자대상 주거 바우처 보조 확대 및 광열비 보조 10) 지자체별 장기공공임대 공급 할당제 실시 및 공공분양 확대 · 후분양제 활성화
5	교육	바른 나라를 이끄는 교육, 밝은 미래를 여는 교육	1) 학생·학부모 교육정책 참여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지자체 교육정책을 주민이 직접 점검 및 의견 제시 -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중장기 교육개혁 추진 2) 초등돌봄 및 방과후수업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돌봄 및 학습기능 향상,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하교시간 연장기능 강화 - 지자체 중심 돌봄체계 구축으로 주민센터 돌봄교실 등 활성화 -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로 맞벌이가정 자녀 안전하게 보호 3) 고교무상교육 및 중·고교 무상교복 실시 4) 공교육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초·중·고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 - 오케스트라 공연, 그림 및 사진 전시행사 등 학교 투어 프로그램 마련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5	교육	바른 나라를 이끄는 교육, 밝은 미래를 여는 교육	5) 학교 중심 보안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보안 강화 6) 마을번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제도 실시 - 전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역별 마을번호사 매칭 제도 실시 - 마을 번호사 확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 번호사 학폭위 전문위원 참여 위한 업무 협약 체결 7) 고교-대학 연계 창업 및 창직 교육 - 고교-대학 연계 창업창직 교육 및 정보교류 사업 실시 - 대학 평생교육원, 특수대학원 과정을 통한 창업교육전문가 양성 8)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단계 평생직업교육 - '지자체-대학-산업체' 연계 시민직업대학 운영 - 취업준비 EBS 강의 무료 수강 바우처 제공 - 은퇴자 인생이모작 직업교육 및 은퇴준비 1: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노인 인턴십 및 재취업,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안전 여성 사법윤리	일상이 안전한 걱정없는 안심 미래	1)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 성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연장 등 제도 개선 및 형량 강화 - 비동의 간음죄 신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2) 성폭력피해자 2차 피해방지 및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규정 구체화 - 2차 피해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징계 요청권 부여 - 조직내 성희롱 피해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3) 재난약자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거주하는 건물마다 경사로 설치 및 단일층 또는 건물의 1·2층에 피난시설 설치 - 재난안전도우미를 양성,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 거주시설에 배치 4) 집단 거주시설에 야외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 최소화 및 신속정확한 인명구조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 - 소방훈련 시 대피장소로 모일 수 있는 훈련 병행 5) 지역별, 재난 유형별 맞춤형 안전체험관 신설 통한 안전교육 강화 - 지진안전체험관(경주·포항), 원전안전체험관(울산·울산영광), 특수재난안전체험관(대규모산업단지) 등 신축 - 소방관서의 이동체험차량 확대 보급으로 상시 안전교육체계 확립 6) 가정폭력 가해자 즉각 분리 및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 가정폭력 가해자의 즉각적 분리를 위한 유치장 유치 제도 도입 -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및 모니터링 자원 확보 ▶ 10세 이상 남아의 동반 입소 및 야간 시간대 쉼터 이용 확대 등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6	안전 여성 사법윤리	일상이 안전한 걱정없는 안심 미래	7)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예방 강화 - 각 지역 내 경찰, 지자체, 소방당국,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해 '지역사회 안전 파트너십'을 구성, 정보 공유로 범죄예방 전략 도출 - 범죄 통계를 이용하여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예방강화구역 선정 - '탄력순찰제' 강화(주민의 순찰 희망장소 순찰계획에 반영) 8)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이주여성 피해에 대한 상담소 일원화로 지원체계 강화 - 이주여성에 통역 지원, 법률 지원 등으로 피해 구제 및 보호 강화
7	보건복지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	1)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부여 - 효도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함 2) 간호간병 인력이 부족한 지역 공공병원의 간병비 한시적 무료화 3) IoT 기술 기반의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 - 독거노인 가정에 기기 설치 - DB관리자(돌봄센터)모니터링 및 생활관리사폰 실시간확인 - 119연계 및 긴급조치 4) 스마트한 어르신 지킴이,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 도입 -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긴급 연락처, 의료정보 등이 적힌 카드를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자택 냉장고에 보관, 외출 시에도 카드 휴대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원활한 구조 활동 지원 5) '찢다방'의 악덕 상술로부터 보호 - 계약취소권을 부여하는 소비자계약법 제정 - 지자체-주민센터-소비자보호원-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고령층 소비자 지킴이 핫라인 설치 및 단속 강화 6) 노인을 위한 문화일자리 확대 - 문화해설전문강사 육성 및 취업 확대로 문화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장려와 동시에 부가수익 창출 7) 장애인의 주거권, 이동권, 노동권 강화 - 주거권 강화 ▶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 기존 주거지원제도의 소득 인정액 및 입주요건 완화, 주택바우처 현실화, 자립생활지원 주택 공급 - 이동권 강화 ▶ 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 긴 대기시간(평균 46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증차, 저상버스 증차 및 연계지역 확대 - 노동권 강화 ▶ 최저임금 준수 기업에 공공계약 체결 시 우대 ▶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7	보건복지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	8)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 지역 내에서 접근이 쉬운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으로 여가활동 활성화 9) 장애인 가족 휴식권 보장 - 시간제 입소, 하루 입소, 단기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보호자 휴식권 보장 10)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지원 -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전담팀 구성, 상설 공연 전시장 확보
8	농림 해양 수산	항촌의 농어촌에서 해 뜨는 농어촌으로	1) 2018년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 2018년 말로 감면시한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 지원에 대해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 연장 ▶ 농어민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2) 소득 지원 및 월급제로 농어업인 복지 강화 - 농어촌다움 유지 마을 기본소득 지원제도 도입 - 수확물 담보형 농어업인 월급제도 도입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기준소득월금액 : 91만원 → 105만원) 3) 농어촌관광 활성화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 농어촌 민박체험마을관광농원 등과 신규형태의 농가맛집, 테마마을 등 포함하는 제도 정비 및 지원 강화 -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지원 및 '고향세' 도입으로 자치 농정 실현, - '1시도 1농어업관광 융복합형 테마파크' 조성 지원 4)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 고부가가치화로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 비용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 - '농지 다원적 기능 직불제' 도입 - 기업 등의 R&D 지원을 통한 쌀 가공품 개발과 원료사용 촉진 강화 5) 농수산물 소비처 및 안전안심 농식품 공급 확대로 농어업 소득 견인 강화 - '농작물 작황정보 관리 시스템' 및 '농산물 적정소득보장제' 도입 - 국산 우수 농수산물사용 촉진, 미래 농어업과 식품산업 성장기반 강화 6) 고령농, 여성농 등 특색에 따라 맞춤형 영농지원 7)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 바우처 지원 확대 8) 중국어선의 긴급 피난을 악용한 수산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강화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9	국방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이 대접받는 나라	1)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군 장병 창취업 지원 확대 - 전역 후 학업이나 창업·취업 등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점인증제, 창업·취업 교육, e-러닝 확대 등 종합대책 마련 - 군 유관업체에 전역장병 취업 알선, 관련 업체에 혜택 부여 - 장병 체육문화 시설 확충 - 군 복무 중 부상·질병은 완치까지 국가 책임 치료 또는 보상 2) 넓은 군대문화의 개선으로 선진 병영문화 조기 정착 - 인권성 군기, 구타 사고 등에 대응하는 종합대책 강구 - 군 복무 부적응자 애로사항 조치로 능동적 병영관리 강화 - 군 병원 내 진료인원 증원, 지역 민간병원과 연계된 진료 여건 강화 -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송체계 마련 3) 조국에 헌신봉사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 6.25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과 병원 진료비 추가 지원 - 국가유공자 진료비 감면을 확대, 병원 이용 제한규정 완화 - 유공자 국립묘지 추가 조성 및 기초연금 산입기준 개선, 보상 확대 4) 안보 희생지역, 군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 - 접경지역 규제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 및 투자 확대 - SOC 등 투자 확대로 접근성 보장, 유적지 발굴·복원, DMZ 생태계 보전으로 관광지 개발, 투자 유치 - 지역 특수의 이벤트 행사와 안보관광지 연계 개발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로 민군 상생여건 마련 5) 직업 군인과 가족의 생활 여건 향상 - 노후하고 협소한 군 관사 및 군 가족 진료 여건의 획기적 개선 - 군 자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장학금 제공 등 실질적 대책 - 전역간부 생활안정자금, 주택분양권, 재취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10	행정자치 정치	주민이 행복한 지방 분권 지방을 살리는 바른 정치	1) 지방세 확충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동시 추진으로 지방 재정 강화 2) 사회복지비의 국비 전환 확대로 지방재정 확충 - 국민 전체가 지역 간 차별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복지사업은 중앙 정부 재정으로 전환 - 폐지된 국고보조사업 부분은 지방교부세율 상향으로 보전 3) 강력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 강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상 강력한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 도입 근거 마련 - 지방교부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육성 - 연구개발 및 지역인재 양성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균형발전교부세 신설 4) 주민소환 대상 확대를 통한 주민의 직접통제권 강화 및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 -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소환대상자를 선출직 공직자를 한정하고 있어 주민소환 대상에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포함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10	행정자치 정치	주민이 행복한 지방 분권 지방을 살리는 바른 정치	5) 모든 지방정부에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 및 규범 내용 강화 6) 14년째 동결된 아통장 수당 인상 - 2004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동결된 아통장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 및 처우 개선

4) 민주평화당 10대 공약 세부내용

〈표-4〉 민주평화당 10대 공약 세부내용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1	재정 경제	더 많은 지역예산 지자체 복지급여 중앙정부 부담으로 지역사업 활성화	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현금급여 매칭 부담 면제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주요 현금성 복지사업들 (기초연금, 의료급여, 아동양육수당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를 면제로 지역격차 해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제고 - 현금성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비매칭 사업으로 전환 시, 지방정부는 예산 10조원 이상의 재량권을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 - 현금급여 이외 사업에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2) 지역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요소 가중치 상향 반영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의 가중치 배분내용을 「국가재정법」에 직접 규정 - 대형 건설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요소 가중치를 10%p 이상 상향 -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사업에 지역균형발전요소 가중치 추가 3) 지방교부세를 현행 19.24% → 25%로 상향 조정
2	노동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 지역주민 의무고용, 지역인재 할당제	1)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사업에 지역 거주민 40% 이상 의무고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역 거주민 의무고용할당제 추가 - 지역주민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는 공공사업 입찰 참여시 가산점 부여 2)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고용 50% 이상 의무화 - 혁신도시법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을 상향 조정 - 이전 공공기관 신규채용 지역주민 비율확대 ('19년 8% → '22년 50%) 3)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미달한 해당 공공기관에 성과평가에 불이익 부여, 성과급 환수 등을 통해 의무채용 강제 및 책임부여 4) 모든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지역인재 의무고용할당제 확대 - 「지방공기업법」 제63조 2항에 지역인재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부여 5)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역 내 거주민' 포함 - 지역인재를 최종학력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내 거주민'을 포함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3	기타 (청년)	청년이 미래다 소득·자산 부모자산별 청년기본소득 도입	1)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원칙으로 하나, 과도한 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성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과 재산 및 부모의 재산에 따라 차등적 지급하는 절충형 방식으로 기본소득 도입 2) 18~34세 청년들에게 5년(60개월분)을 개인의 생애설계 필요에 따라 탄력적 지원 3) 청년기초생활보장 현금을 소득·자산·부모자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4) 현재 청년에게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 복지인 청년취업수당, 청년취업준비수당, 청년근로장려세제, 대학등록금지원 등을 청년기본소득으로 포괄하여 보편적 제도로 안착 5) 대학등록금 대출이자 무이자화
4	농림해양 수산업 자원	쌀 소비 확대 ‘쌀로 만드는’ 식품·음료제조업 지원, 공공급식에 햅쌀 공급	1) 쌀국수, 쌀 빵, 쌀 소주, 쌀 맥주 생산 등 주정, 떡류, 조리식품, 장류 등 식품·음료 제조업에 쌀 소비 촉진 지원제도 도입 - 쌀 가공식품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 쌀 가공식품 브랜드 개발 및 수출에 대한 지원 - 쌀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2) 학교, 군대, 경로당,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에 ‘햅쌀’을 공급하여 이용자 복지를 증진하고 쌀 소비량 제고 3) 북한에 쌀 연간 40만톤 지원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4) 남북간 물물교환 바터무역(Barter Trade) 방식을 통해 유전자 조작 논란에서 자유로운 북한의 옥수수, 콩 등과 교역
5	교육	명문 지방교육 부활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역별 4년제 산업대학 육성	1) 수도권과 일류대에 집중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공평분배로 전환 -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을 수도권 대 지방대학 4:6로 전환 - 수도권에 유리한 재정지원 평가지표를 균형발전 및 특성화 대학 발전 요소의 비중을 제고하여 공정하게 재조정 - 지방대 육성을 위한 지역특성화사업 재정지원 확대 2) 4년제 산업대학 20개 설립 - 대학구조 조정과 연계하여 대학 간 통폐합·구조조정으로 전환·신설 - 지방거점 산업인력 양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 - 교양과목이나 직업능력교육을 포괄하며 취업 후에도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6	보건복지 건설교통 여성	세입자가 웃는 주거복지 임대료 상한제, 여성안심주택, 청년공공기숙사 건립	1) 주택임대료 및 상가임대료의 제한(1년 5% 인상 → 2년 5% 인상) 2)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권 강화 3)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4)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성 안심주택 공급 확대 5) 청년 공공기숙사 권역별, 대학가, 산업 및 벤처단지 등에 확대 공급
7	보건복지	빈틈없는공공복지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장기요양시설 운영, 공공서비스센터단 설립 품격 있는 서비스	1) 산후조리를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 - 공공 산후조리원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2)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 전국 200개소 이상 추가 설립 3) 지자체에 전문화된 ‘공공사회서비스센터’를 설립 - 사회복지분야 전문인력을 확보 - 재가 및 시설에 파견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8	정치	‘민심 그대로’ 선거제 국회의원·지방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각 정당의 의석수를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정함으로써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비례성을 높이고 표의 등가성을 획기적으로 높임 - 현행 소선거구제와 전국비례대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인으로 유지 ▶ 비례대표의원수를 현재의 47인에서 63인으로 늘려 의석수 증가를 16인으로 최소화 - 지역구 당선자가 비례대표 득표율에 의해 할당된 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당은 초과의석을 그대로 보유 2) 권력분권,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분권형 개헌 추진 -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분산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공직자에 대한 소환 투표 청구권(국민소환)·법률안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 도입 -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명시 -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조정제도 마련 - 지역 간 재원의 상생적 배분을 위한 ‘공동세’ 도입 -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해 정당별 득표율과 국회의원 의석점유율의 비례성 보장 -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개입을 못 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화 -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조정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9	통일외 교통상	평화가 강물처럼 평화체제에 걸맞은 남북교류 확대	1) 남북 대학생 교환학생 연 500명 규모로 교류 - 과학기술, 인문, 문화예술체육 등 비정치 학과 중심으로 파견 - 1학기 이상으로 학점 공동 인정제 도입 실질적 대학생들과 연계 - 학교생활 외 다양한 봉사, 체험 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2) 남북 시군구 자매도시 100개 체결 및 상호방문 교류 - 각각의 지역특성과 이해에 따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 - 친선 교류 및 경제, 기술 상호 지원관계를 유지하고 체육문화예술 정기적 교류 및 상호 방문행사 진행 3) 남북 우편 교류 - 이산가족 중심으로 우편교류 즉각 실시 - 서울과 평양에 우편취급소 개설 4)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 기반 구축 - 개성공단 재가동 - 제2개성공단 착수 - 평화철도 개통 - 남북 교역의 실질적 진행
10	건설교통 산업자원	지역균형발전 열악한 호남 SOC에 획기적 투자	1) 호남권 SOC사업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 - KTX 호남선 2단계 사업 - 흑산공항 건설 -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 조기 완공 - 달빛내륙고속철도 건설로 동서화합 및 국토 균형 발전 - 광주-완도 고속도로 조기 완공 - 경전선 광주-순천간 전철화 건설로 남부 신경제권 구축 - 새만금특별법 등 개정 및 새만금개발공사 조기 안착 2) 호남권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보 - 광주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육성 - 전북 새만금 복합문화벨트 건설 - 전남신재생 에너지단지 건설 3) 새만금을 낙후된 전북의 미래발전 거점으로 개발 - 새만금 공항과 항만 확대 조기 건설 - 식품산업 대중국수출 전진기지로 개발 - 익산시를 새만금 입주기업 연구개발단지로 조성 -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 새만금내부철도 호남선 연장 개통

5) 정의당 10대 공약 세부내용

〈표-5〉 정의당 10대 공약 세부내용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1	기타 (청년)	희망찬 청년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실시 - 지방정부 차원에서 만19세 청년 대상으로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 실시 - 배당금은 200~500만원, 소득 상위 10%에는 지급하지 않는 클로백 제도 도입 2) 공공기관부터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기회균형채용제 도입 - 지방 공기업 의무고용 청년미취업자 비중 확대(3% → 5%) - 자치단체 조례 관련 근거 규정 마련 - 기회균형채용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 여성 30%, 고졸이하 학력 10%, 전문대학과 지방대학교 졸업자 30% 3) 시도립대 무상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진짜 반값 등록금 시대 선도를 위해 시도립대학부터 무상 등록금 실시 - 학자금 대출금리 2.5%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대출이자 1.5~2.5% 지원 4) 청년 아르바이트 대상 감질 및 체불행위 근절 - 자자체, 노동부(지청), 검경합동 부당노동행위 대책반 구성 - 자치단체의 민간근로감독관(명예근로감독관)을 확대(근로감독관 대비 1:1 수준)하여 상담 및 현장점검 강화 -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의 조달계약을 3년간 금지 - 체당금 제도 이용편의를 위해 행정지원하고, 자자체에서 '체불임금' 선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5) 지역형 청년실업부조 도입 - 고용보험 미가입 내지 미수혜 청년(15~35세 미만)을 대상으로 청년실업부조제도 도입 - 정부가 지급하는 청년구직수당 대상자에게 2018년부터 월 60만원(최대 6개월간)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액을 광역시도가 지원 6) 대학기숙사 확충 및 청년 1인 가구 주거 지원 -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으로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 자자체 지원 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 확대 - 월세거주자 세액공제 확대 및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보증금 대출 (연 2% 이하) 확대 7) 청년 참정권 확대와 청년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 -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 대통령 40세→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25세→18세 - 청년기본조례 제·개정을 통해 청년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2	노동	노동이 당연한 도시 노동이 존중되는 지방자치	1)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유로운 삶 - 공공부문부터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 공무원의 최대 초과근무 시간 단축(월 57시간 → 월48시간) ▶ 2022년까지 공공부문부터 근로시간의 주 35시간(법정노동시간) 및 연 1,800시간 상한제 도입 (관련 조례 제정) 2) 노동인권 보호 및 구제 -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리동네 노동상담소' 설치 ▶ 주민센터 내 노동상담소 설치, 시·군·구청에 전담노무사 배치 ▶ '시민 명예근로감독관' 확대 3) 2020년까지 비정규직 제로화 -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완료 및 추진 ▶ 2020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완료 ▶ 2022년까지 민간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 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모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 2022년까지 노조조직률 20% 달성 ▶ 모든 시·군·구청에 노동조합 설립 지원 창구 설치 ▶ 노조-시민사회 협력을 통해 노조설립 상담, 노조운영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5) 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노동 존중 실현 - 모든 중·고교에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노동인권 강사단' 운영 - 모든 사업주 대상 '노사갈등 예방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6)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소방과 긴급의료(외상센터) 등 생명안전업무 우선 증원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현 3%→5%) -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공공발주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7) 최저임금 120% 이상 수준의 생활임금 보장 - 모든 공공부문에 대해 최저임금 120% 이상 수준의 생활임금 보장 - 공공사업의 민간기업 발주 시 최저임금 준수여부 엄격 적용 -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시 임금체불 방지 등 원청의 책임 명시적 규정 8) 노동행정의 지방분권 실현 - 모든 자치단체에 '노동 전담 부서' 설치 -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권익재단 등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조직 활성화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3	여성 기타(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아동이 행복한 도시	1) 슈퍼우먼 방지 조례로 일·생활 균형 달성 - 돌봄인력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공공기관 사업 발주 시 입찰 가산점제 시행 등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발굴 및 확대 -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마련 2) 성별임금공시제 도입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성별임금공시제 시행 - 지역 특성 반영 여성 창업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 공간 확충으로 창업 컨설팅 지원 등 창업 통합지원 - 취약계층 안전, 돌봄 분야 보육 등 여성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마련 3) 여성 안심도시 실현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건축물과 지역 환경에 적용하는 조례 제·개정 - 5대 안심서비스 제공 ▶ 안심귀갓길, 안심귀가, 안심택배, 안심화장실, 안심흡방범 4)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실시, 신종 3대 폭력 피해자 지원 - 여성폭력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신종 3대 폭력(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지원 사업비 편성 및 피해자 지원 강화 5) 비혼·여성 1인가구 취약주거환경 개선 - 여성안심주택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 안전기준 마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설을 신설 또는 확충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6)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등 여성건강권 보장 -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를 여성 청소년에게 무상 지원 -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으로 공공수영장부터 생리할인 20% 의무화 7)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전반에 여성 관리자 확대 - 「성평등 기본조례」 제·개정 8) 질 좋은 보육 환경 조성 및 아동 지원 강화 - 출산 가정에 질 좋은 출산육아 물품이 담긴 핀란드형 마더박스 선물 - 어린이집 및 내 집 앞길 '안전존' 지정 - 아파트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해 공공성 강화 - 어린이집 특별활동 선택제 도입과 필요경비 예산 지원 - 입원·외래 본인부담의료비가 연간 100만원 초과 시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아동(18세 미만)부터 무상의료 실시 -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주치의제 실시 - 아동학대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기관·쉼터 종사자 확대 및 처우 개선 - 긴급생계바·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 등 피해아동·가족지원 강화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4	보건복지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	1) 주민 건강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 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 보건지소 기능을 진료 →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 - 임신부·아기(만 2세 이하) 무료방문간호 실시 -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임신부·아기 방문간호사(정규직) 배치 - 18세미만 아동청소년 무상으로 실시 ▶ 입원·외래 본인부담의료비(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가 연간 100만원 초과시 전액 국가가 부담 -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한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리더양성 교육 실시.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 시행 -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소규모 일터 건강관리 책임 부여 - 공단 지역 등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역노동건강센터로 전환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대한 방문서비스 제공 - 지역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치의를 맡는 의료기관의 사설이나 장비, 주치의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간호인력 확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활동공간 구축.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 적정 의료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금 문제 해결 2)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보장 - 실버아파트·실버임대료제 도입 - 독거노인을 위한 홈세어링·원룸형 공동주택 도입 확대 - 노인맞춤형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 '지역사회 돌봄 봉사 바우처' 도입 - 공립장기요양시설 확대 및 인력·시설 기준 강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상담원 확대 -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 종사자 정기교육 실시 및 재학대 방지 - 생활체육시설 노인 할인 - 산책로에 편의시설 설치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복지전담 공무원 확대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3) 지역형 장애인 모델 구축 - 스웨덴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을 민간의 2배로 하는 더블제(6%) 도입 -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 지역 상황에 맞게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자체 추가 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및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지원 -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 지자체별로 장애인 보장구 공공수리센터 설치 -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지역사회 적합 모델 개발 -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지역 내 장애여성 전담산부인과 지정, 방문간호제 운영 - 주·단기보호시설에 다양한 형태의 낮시간 프로그램 배치 - 민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 지원 -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 시 지자체에서 지원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5	기타 (농업 중소 상공인 지역경제)	농업·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1) 농민 기본 생활 보장, 안전한 먹거리·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 「지역농민 기본소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65세 이하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원 지역형 농민기본소득 시범 실시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 -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및 친환경 축산농가 지원 - 로컬푸드 및 Non-GMO 공공급식 사용 조례 제정 - 농축임협 공동참여 상설 회의체계 마련, 농업인 월급제 - 지역 사회적 금융 기반 마련 - 협동조합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 협치 농정실현을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 -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농촌지역 출신 청소년 정착 지원 - 토종종자 시범포 사업 실시 및 토종종자 사용 농민 지원 - 로컬푸드 가공상품 생산 활성화 및 마을기업지원센터 설립 - 공동경작 마을공동체와 지역특산물 가공 마을기업 육성 - 농어촌 노인의 집 신축 및 가정용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마을별 소규모 LPG 공급 확대 - 농부병 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및 도립농민요양병원 운영 - 질병예방 등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 농업위원회에 여성농민 30% 이상 참여 의무화 - 75세까지 여성농민에게 20만원 이상 행복바우처 지급 - 여성 친환경 농기계 확충 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보호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 도시계획수립 단계에서 중소유통상업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대규모 소핑몰 입점 제한 -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변경 - ‘지역사랑상권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온누리상품권 수준으로 확대 - 지자체가 시행하는 아동수당 등 현금 지급 복지사업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환산보증금 폐지 - 임대료상한제 실시(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 - 지자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정 권한 부여 -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퇴거보상 보장 - 전체 카드 수수료 1% 상한제 실시 - 금융위의 원가비용 산정 시 가맹점 단체의 참여와 협상권 보장 -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연간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담배세·유류세 등)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 지자체장에게 불공정행위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 부당한 필수품목 구입강요 금지 -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제한 삭제, 오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 최저임금 준수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를 지방정부에서 한시 지원 -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확대 - 지역신용보증의 신용보증·신용조사·신용정보 관리 등 핵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5	기타 (농업 중소상공인 지역경제)	농업·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3) 공정하고 활기찬 지역경제 - 지역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립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무료법률서비스 실시 - 광역단위마다 지방은행을 설립 - 「지역금융 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하여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서민과 지역주민,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기회 확대 의무 부과 -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역내에서 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축 -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강화
6	건설교통	서민 주거복지 확대 교통 공공성 강화	1)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부동산·주택시장 정상화 -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반값 임대주택 공급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연 15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된 지역에는 재정을 보전하는 프랑스형 임대주택 쿠퍼제 도입 - 1인 가구·청년·대학생 맞춤형 주거 지원 ▶ 1인 청년 월세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의 대상 확대 ▶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 확충 - 지역별 공정임대료제 도입 ▶ 지역별로 공정임대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임대료 산정·공시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임대차등록을 의무화하여 임대차 시장 정상화 - 부동산 과세 기준 산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 ▶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상향 조정하여 공정 과세 실현 ▶ 표준지와 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 지자체 공급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 의무화 ▶ 후분양제를 도입한 민간 건설사에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우선참여권 부여 - 지방정부 발주 건설공사 혁신 ▶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해 건설노동자 법정 임금과 8시간 노동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 도입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6	건설교통	서민 주거복지 확대 교통 공공성 강화	2)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과 환경을 생각하는 교통 정책 실시 - 저상 시내버스 50%, 장애인 콜택시 확대 ▶ 저상버스 보급률 50%, 마을버스 30%, 농어촌 버스 25%로 확대 ▶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장비 도입 - 민간투자사업 특혜 폐지,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 민자 사업 무상 재정 지원 특혜 폐지 ▶ 민자 지하철과 경전철 요금 체계 개선 ▶ 기초생활수급자(일반수급자) 교통비 월 3만원 ~ 5만원 지원 - 대중교통 통합 공영화,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 지자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공공부문에서 버스 운영을 담당하는 버스 공영제 실시 ▶ 대중교통 통합 운영을 위한 광역지자체별 '대중교통공사' 설립 ▶ 지하철 9호선을 공영화하여 신설되는 대중교통공사에서 통합 운영 -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 도심을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에서 교통수단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 ▶ 대중교통 통합 공영화, 교통 혼잡 해소를 통한 비용 절감 - 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 ▶ '보행자 안전 위원회' 설치 ▶ '스쿨존' CCTV 단속, 과속방지턱 확대, 학교앞 도로 요철포장, '입체형 횡단보도', '옐로우 캡' 횡단보도 등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 자전거 안전교육과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 초등학교 대상 방과 후 수업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강좌 운영 및 강좌 이수자에게 '면허증' 교부 및 일정 기간(1년 이상) 자전거 보험료 전액 지원 ▶ 간선 자전거 도로, 생활권역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대폭으로 확충 - 상징적 도심·부도심과 외곽에 트램 설치 ▶ 상징적 도심에 도로 등 가로의 풍경(유람 및 관광)과 도심 환경 및 도심 재생 측면을 고려하여 트램 설치 추진 ▶ 부도심과 외곽 등 지선 교통노선에 경전철 대신 대중 교통수단으로 트램 설치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7	교육 기타 (문화예술 방송통신 언론)	풍족한 삶과 행복을 위한 교육문화예술	1) 사람의 미래를 우선하는 정의로운 교육 - ‘석면, 미세먼지, GMO, 보행위험’ 퇴출 ▶ 지자체별 「어린이 안전조례」 제정 -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 부모 놀이지원단 육성 지원. 어린이 마을 놀이 공간 우선 확보 ▶ 지자체 중심 모험 숲 놀이터와 실내 놀이터 조성 ▶ 민간 실내 놀이터 관리 강화 -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방과 후 활동 강화 ▶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운영 -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돈 안 드는 교육 완성 ▶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50% 달성 ▶ 2019년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무상교육 실시 - 학교인권 조례 제정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 「학교인권 조례」 제정 및 학생참여형 인권친화적 학칙 개정 ▶ 민주시민교육(통일평화, 세계시민, 성평등, 생태환경, 노동인권) 강화 - 지역 교육안전망 확충 ▶ 초등 저학년 한글교육 책임제로 기초학력 미달 예방 체제 강화 ▶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및 전문가 배치로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시 - 혁신교육·공정교육 지원 확대 ▶ 혁신학교 확대, 혁신교육지구 확대·지원. 교육여건 취약지구 지원확대 ▶ 외고·자사고·국제고·국제중 등을 일반 고등(중)학교로 전환 2) 예술가가 행복한 지역사회,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우리 동네 - 문화예술 다양성·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문화예술 예산의 10%를 다양성 위한 사업비로 확보 ▶ e나라도움 폐지 - 예술인 노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 ▶ 가칭 「문화예술인 지원조례」 제정으로 산재 및 고용보험 지원. 예술인 활동수당 지급 - 지역 문화예술 교육 강화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 민간 문화예술 공간을 지역 생활문화예술지원센터로 개편 -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 문화기본선 도입으로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전문성 강화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7	교육 기타 (문화예술 방송통신 언론)	풍족한 삶과 행복을 위한 교육문화예술	3) 지역언론 활성화, 주민의 정보 접근권 향상 - 마을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도서관·복지관 등 주민 생활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활용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거점 공간 마련 - 중소상공인 통신비 부담 경감 ▶ 통신환경 개선 우선 지역 선정 ▶ 통신인프라 확대계획 수립 및 필수설비 구축 지원 -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무선 와이파이공유기 설치비용 지원 - 공공케이블 정비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 ▶ 학교·주거밀집지역·상가·밀집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중화 유도 및 공공케이블 난립 방지 - 지역 언론 활성화와 독립성 강화 ▶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지역신문 지원 기금 조성(조례 제정)
8	환경 과학기술정 보통신	생태친화적인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나라	1)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국토 조성 - 4대강 친환경 복원 ▶ 「4대강 친환경 생태복원 특별법」 제정. ▶ 보 개방 및 순차적 철거, 4대강 주변 습지 복원과 친수구역 철거 ▶ 수질오염관리 강화,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 도심 녹지 및 물관리 강화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 녹지 지정 검토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 민간공원 특례제도 개선. 도시 녹지 네트워크 복원 계획 수립 ▶ 지역 물순환체계 수립 의무화 - 자원순환도시 구축 및 '내 주변 유해물질' 관리 강화 ▶ 자원순환도시 기반 시스템 구축 ▶ 폐기물의 발생량 저감 정책을 마련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정비 ▶ 비닐·플라스틱 등 고품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과 재활용 실태조사 및 순환 방안 마련 ▶ 유해물질 피해지역 대상 현장 정밀조사·인체위해성 평가 수행 - 난개발 금지 및 복원 ▶ 새만금·가리왕산 등 난개발지역 복원계획 수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금지 - 미세먼지 노출 저감 및 대응 정책 마련 ▶ 건강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무상 보급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 공장시설 미세먼지 배출량 집중 관리 ▶ 차량 친환경등급제 실시 ▶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금 확대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8	환경 과학기술정 보통신	생태친화적인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나라	2) 에너지 정의 실현 - 지역특화형 재생에너지 확대 ▶ 에너지 자립률 20%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모델 개발 ▶ 태양광발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및 태양광발전지원제도 도입 -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강화 ▶ 「지역에너지 복지조례」 제정 ▶ 에너지 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 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 저장장치 지원 - 핵 안전 강화 ▶ 핵 취급시설 안전 정보 공개 및 주민 안전 강화 ▶ 사용후 핵연료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 및 고속로 개발 중단 3) 풀뿌리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혁신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 광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폐지 및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지역혁신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 지역혁신체제허브 조직 ▶ 지역소재 과학기술 출연연과지역 테크노파크·대학중소기업 연계 ▶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화대학 지원 확대 - 지역 산학협력 활성화 ▶ 출연연 본원과 지역조직을 재배치하여 지역조직을 지역거점 R&D 전담기관으로 전환 - 과학기술 지역사회 기여모델 구축 ▶ 지역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설치 ▶ 지역 중·고교·대학생 창의경진대회 실시 - 우리동네 과학센터 설치
9	통일외교 통상 기타(인권, 소수자, 동물복지)	평화, 인권, 동물권 보장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	1)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 - ‘(비핵)평화’ 선언과 조례 제정 - 평화센터 혹은 전쟁 상처 치유센터 설치 - 소녀상 등 전쟁의 아픔 기억물 설립 - 민관협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군기지 선정 시 지역주민 참여 제도와 -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및 환경오염정화 실시 - 지역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 개성공단 연계 특구 및 서해평화협력지대 추진 - 서해 5도 긴장완화와 주민지원 강화 - 남북 강원도 통일관광 특별지대 및 DMZ 내 평화생태공원 설치 - 동해 평화의 바다공원 및 남북 공동조업구역 설치 등으로 남북협력과 지역관광 활성화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9	통일외 교통상 기타 (인권, 소수자, 동물복지)	평화, 인권, 동물권 보장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	2) 인권존중 지방자치 시대 개막 - 인권조례 제개정 ▶ 「3대 인권조례(인권보호 및 증진, 차별금지, 인권교육) 제개정 ▶ 인권전담부서 설치. 공무원 등의 인권교육 의무화 - 인권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 군 입영자·인권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 인권피해자에 대한 기본상담 ▶ 구제기관 진정 및 민원제기·소송 등 법률구조 지원 - 위기 청소년 사회 복귀 지원 ▶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 제정 - 동반자관계 인증제 도입 ▶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의 동반자관계 인증제 도입 조례 제정 ▶ 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은 결혼 직원과 동등한 처우 보장 - HIV/AIDS 감염인 건강권 보호 ▶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병원 지정운영 ▶ 지역 내 자조모임을 통한 건강보호 서비스 제공 ▶ 의료인 교육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기관 확충 3)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강화 -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 헌법에 동물보호 포함 및 조례 제정 ▶ 동물복지 및 생명권 교육 강화 ▶ 동물복지를 환경부로 일원화 ▶ 지자체별 동물복지 전담부서.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 현실화 - 반려동물 생애 관리 체계 마련 ▶ 불법 번식농장 단속 강화 ▶ 체계적인 반려동물 번식 관리 ▶ 주요 질병과 질환의 적정 의료비 산출 ▶ 시민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 화장장에 동물화장장 추가 설치 ▶ 반려동물 행동교정 및 반려인 교육 지원 ▶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확대 - 도시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 강화 ▶ 지방자치단체 운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 동물보호소 관리 동물의 입양 지원 ▶ 생태이동통로 확대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 ‘동물복지주간’ 운영 및 채식 선택권 확대 - 동물복지농장 확대 및 전사동물 관리 강화

공약 순위	공약분야	공약제목	이행방법
10	행정자치 재정경제	자치분권 확대로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	1) 자치분권 확대 -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7:3에서 5:5로 개선 -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확대 - 광역 및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분권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2) 지방행정 개혁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 - 단체장·기관장 일정, 각 부서별 생산 문서, 예산지출내역 실시간 공개 - 주요 정책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정책실명제 도입 - 지방공기업 노동·시민이사제 도입으로 투명성·책임성 강화 - 관변단체 보조금 등 특혜 폐지 3) 지방의회 개혁 -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 '선심성 예산'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 지방의회 의정모니터 활성화 4) 제대로 일하는 지방의회 실현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인력 확대 - 지방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 - 지방의회 소속의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로 부패 척결 -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 5) 주민자치 실현 -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 주민직접참여제도 요건 완화 및 실효성 강화 - 주민의 제안을 조례로 만들어주는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 도입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실효성 강화 -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 및 권한 강화 6) 지방재정 분권 실현 - 부동산 보유세 과세기준 산정 시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반영률을 현재 65% 수준에서 80~90%로 상향 - 공시지가의 60~80%를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 -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로 9%p 단계적으로 인상 - 지방교부세 교부비율 19.24%에서 24.24%로 단계적으로 인상 -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도 본청을 대신하여 시도세를 징수할 경우 받는 징수교부금을 현시도세의 3%에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전을 위해 5%로 2%p 인상 -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 주민세(종업원분),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탄력 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세 세입 증대 - 기초연금,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주요한 복지 사업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환원

2. 광역시도지사후보 10대 공약 세부내용

1) 전라북도지사 후보의 10대 공약 세부내용

〈표-6〉 전북도지사 송하진 후보 10대 공약

공약 순위	공약제목	이행방법
1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 현황과 문제점 - 식품(익산), 종자(김제), 농기계(김제), 미생물(정읍, 순창), 첨단농업(새만금) 5개 클러스터 연계한 농생명산업육성 필요 · 목표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스마트 팜 혁신밸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물류센터,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2	전북산하 1000리길 조성	· 현황과 문제점 -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전라북도의 문화와 생태를 상징할 수 있는 천리길 조성 및 스토리텔링 · 목표 - 전북산하 1000리길 조성(해안길, 강변길, 산들길, 호수길), 스토리텔링 및 마케팅, 천리길 생태환경조성
3	4차산업혁명대응 Big3 대표사업육성	· 현황과 문제점 - 정부의 4차산업혁명대응과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강점인 농생명, 금융, 탄소산업 등과 연계한 4차산업혁명대응 대표사업 필요 · 목표 - 농생명 빅데이터 비즈니스센터, 블록체인 거점센터구축, 탄소산업연계 3D 프린팅산업 육성
4	친환경 전기차보급 및 경유차 저공해화로 미세먼지 저감	· 현황과 문제점 - 미세먼지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에 의한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이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등이 필요 · 목표 - 전기버스 연차별 216대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전기차 충전소 100개소 설치
5	우리아이 정밀검진 건강관리 책임제	· 현황과 문제점 - 2016년 기준 전라북도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68,857명) 중 정밀검진이 필요한 영유아는 2,755명(수검자의 4.0%)으로 정밀검진 소요비용 지원 필요 · 목표 - 영유아 건강검진자 중 이상소견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

공약 순위	공약제목	이행방법
6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 현황과 문제점 - 글로벌 경기침체와 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 필요 · 목표 -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생산 및 수출 전진기지 조성
7	전라북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	· 현황과 문제점 -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 평가와 지속가능한 기능유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확산 · 목표 - 농업가치 평가를 위한 농업인 전문가 TF구성 및 순도비 농업 예산 중 직불성 예산비율 50%로 확대
8	농산어촌 마당캠프 활성화	· 현황과 문제점 - 전라북도 농산어촌 과소화대책은 인구의 유입정책과 더불어 유동인구의 증대를 통한 마을 활성화가 더욱 절실 · 목표 - 마을회관 및 모정 등을 활용한 농산어촌 캠핑마을 25개 마을 선정 및 50회 캠핑지원,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의 교류프로그램 및 농특산물 판매
9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	· 현황과 문제점 - 14개 시군 대표축제에 지원하고 있는 축제지원정책과 별개로 작지만 의미있는 마을축제를 육성하여 마을까지 관광객 유입확대 필요 · 목표 -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1개이상 대표적 작은축제 공모 및 매년 4개 축제 지정
10	사회적 가치활동 연계 청년기능수당 신설	· 현황과 문제점 - 청년들이 진출을 꺼리는 분야에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계 · 목표 - 전라북도 거주 만18~39세 청년 1,000명선발 6개월간 50만원 수당 지급 (문화예술종사형, 귀농귀촌형, 사회복지종사형, 중소기업종사형 등으로 구분)

〈표-7〉 전북도지사 임정업 후보 10대 공약

공약 순위	공약제목	이행방법
1	1조원 도민배당 고향펀드	· 현황과 문제점 - 전라북도 신성장동력의 부재와 경제 위기 · 목표 - 일자리 1만개 만들기로 모두가 잘사는 전북 융성시대 개막
2	에너지 뉴딜	· 현황과 문제점 -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저조 및 일자리 감소 · 목표 -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3	익산, 전라북도 제2청사 건립	· 현황과 문제점 - 서부권역 사업 총괄할 컨트롤타워 부재 · 목표 - 임기 내 전라북도 제2청사 건립
4	로컬푸드 2.0	· 현황과 문제점 - 로컬푸드 사업의 정체 · 목표 - 로컬푸드 급식 확대 및 수도권 직매장 설치
5	청년배당제	· 현황과 문제점 - 취업난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활력 상실 · 목표 - 청년취업 장려 및 사회참여 지원
6	농림수산업(農UP) 일자리	· 현황과 문제점 - 농촌자생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마을기업 지원사업 규모 미미한 수준 · 목표 - 마을기업 1,000개 달성으로 마을 단위 소득사업 활성화
7	출산이 행복한 전라북도 - 공공산후조리원/조산원	· 현황과 문제점 - 도내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산모를 위한 시설 태부족 · 목표 - 공공산후조리원 및 조산원 설립을 통해 여성복지 향상
8	'집'은 생존권, '주거 기본권' 확립	· 현황과 문제점 - 전북개발공사의 무분별한 택지 매각 · 목표 - 임기내 공공주택 2만호 공급

공약 순위	공약제목	이행방법
9	지역중소상인을 위한 '같이 일해 봄 직職'	· 현황과 문제점 - 중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및 인력풀 부재 · 목표 - 중소상인 상생센터 설립
10	건강한 도시 만들기 -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조성	· 현황과 문제점 - 미세먼지 대책 부재와 도내 도시공원 태부족 · 목표 - 전주시내 12만 m2 면적 유휴지 등에 도시숲 조성

〈표-8〉 전북도지사 권태홍 후보 10대 공약

공약 순위	공약제목	이행방법
1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벨트 조성	· 현황과 문제점 - 새만금 착공 30여년이 지났으나, 전북도민의 이득 및 전북경제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전북부터 신속하게 저탄소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새만금 전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 정부 신재생에너지 2030국가목표 95% 수준으로 충족 가능 · 목표 - 새만금을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화, 1만개 일자리 창출
2	수소연료전지자동차상용화센터 유치	· 현황과 문제점 - 한국GM 군산공장 철수로 군산경제는 파탄 수준에 이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또한 기술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전북에 수소연료전지자동차산업을 육성하여 전북경제 도약을 준비 · 목표 - 새만금을 수소시대 중심으로 육성, 5천개 일자리 창출
3	마을자치경제와 농촌르네상스 시대	· 현황과 문제점 - 농·어촌 주민의 소득 감소와 부채 대폭 증가 · 목표 - 마을주민의 자치·자치경제 역량 강화로 도민주도 성장
4	4차산업혁명 인재양성센터 설립	· 현황과 문제점 - 전북의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쟁력 현저히 낮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 대비 STEM 교육 등 전북인재 양성에 소홀한 상태 · 목표 - 전북 4차산업혁명 청년인재 1천명 양성

공약 순위	공약제목	이행방법
5	공공건강복지 허브 구축	· 현황과 문제점 - 전라북도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독거노인가구의 비중이 높고, 고령화 현상 또한 매우 심각함. 공적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 세대 노인에게는 즉각적인 경제적 안정 대책을 위한 주거비나 보건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지출감소가 중요함. 또한 건강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일상적인 건강 관리와 예방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목표 - 남원에 설립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전역을 공공의료 중심 지역으로 확립. 군산의료원(서북권), 남원의료원(동남권), 진안군의료원(동북권) 중 병상수가 적은 곳은 3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남권에 지역거점병원 지정.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재활병원,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을 연계해 돌봄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돌봄-복지 허브화. 또한 모든 읍면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0~12세 아동에게 아동주치의서비스 제공
6	아동부터 무상의료 실시	· 현황과 문제점 - 20세 미만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4%로 1인당 평균 월 4.4~5.1만 원을 납부하고 있고 보험료만 4~5조원에 이르는 실정임. 게다가 저소득 부모들은 몇 만원에 달하는 어린이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마저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의료보험에서조차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 전북의 경우 아동부터 무상의료 정책을 시행한다면 부모들이 사보험 시장에 내는 보험료 1천 4~5백억 원은 줄일 수 있어 1/10 수준의 공적재원으로 가계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의료안전망도 튼튼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김 · 목표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 31만 명에게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7	공공실버아파트, 실버임대료제 도입	· 현황과 문제점 - 2018년 전북은 노년 비중이 19%로 100세 이상 노인도 723명에 달하고, 특히 김제, 부안, 고창, 장수,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등은 노년 인구가 30% 내외 수준으로 특단의 대책 필요. 게다가 2014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40.5%가 주거와 관련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목표 - 전북 전역에 공공실버아파트 설치,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어르신에게는 실버임대료 지급

공약 순위	공약제목	이행방법
8	선진 장기요양서비스 구축	· 현황과 문제점 - 2017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43,064명이 장기요양혜택을 받고 있으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2016년 기준 1,010개소 중 9개소에 불과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원 수 기준으로도 4.4%에 불과함. 게다가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신고려장이라 불리를 정도로 서비스의 질 수준이 열악한 상황임. · 목표 - 지역사회 내에 집과 같이 편안한 소규모 공립장기요양시설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시설 설비 강화로 좋은 돌봄 실현
9	산모·영유아 방문간호 실시	· 현황과 문제점 - 저출산 문제는 성별 격차 해소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의 근본적 해법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함. 특히 출산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첫 출발이 되어야 함. 반면 병원과 산후조리원은 엄마와 아이를 구조적으로 분리시켜 생애 초기에 중요한 애착관계를 약화시키고 산후우울증 등을 포함해 출산 여성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목표 -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 보호(임산부 및 만2세까지의 영아 가정에게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산모·영유아에게 건강상담·관리, 영양관리, 육아정보, 지역 복지자원 연계서비스 등 제공)
10	지자체 공급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아파트 선분양제로 인한 아파트의 기본정보 부족,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 증가. 또한 건설사들의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소비자들은 고분양가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함. 현행 법령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 방식 모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 차원에서 공공부문 후분양제 의무화가 가능함. 이미 서울시 SH 공사의 경우 2006년 9월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분양원이 공개와 80% 완료 후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음 · 목표 - 지자체 공급 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 의무화, 후분양제를 도입한 민간 건설사에게 지자체 발주 공사 우선 참여권 부여, 선분양제 민간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이 61개 세부항목 공개

〈표-9〉 전북도지사 이광석 후보 10대 공약

공약 순위	공약제목	이행방법
1	새만금통일농업전진기지 건설	· 현황과 문제점 - 새만금 간척사업이 30년이 되었지만 농어민을 내쫓고 환경문제를 야기 하는 등의 문제점만 양상하고 있음.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며 공사 설립으로 '내부준설'에 의한 매립작업이 진행되면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적 재앙이 발생하게 됨. 새만금 사업으로 기 조성된 간척지를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여 전북발전의 지렛대로 삼으면서도 생태, 환경문제, 농어민들의 생존 문제까지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함. · 목표 - 농도 전북의 성장 잠재력은 농업에 있음. 전북의 강점인 '농업'과 목전에 다가온 '통일'을 접목한 '통일농업'으로 시대를 선도 - 내부준설 중단과 완전한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의 생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조성된 광대한 간척지를 '통일농업 전진기지'로 재설계하고자 함. - 한반도 농업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동경작, 공동연구 등 농업교류의 산실이 될 것이며, 남북공동식량계획에 기초한 식량생산 기지가 될 것임.
2	농민수당 연 240만원 지급	· 현황과 문제점 - 50여 개국과 맺은 FTA와 WTO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축산물 수입은 늘어나고, 국내 농업 생산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농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음. 정부는 기업농, 대농 육성과 6차 산업, 수출농업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고 중소농에 대한 대책이 없어 농촌사회의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아울러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 중소농이 무너지면 농업의 다양성이 무너져 식량자급률이 더욱 떨어지게 되며, 농업이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농업 생태계마저 불균형하게 됨. 또한 중소농이 무너지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농촌사회가 뿌리째 흔들리게 됨.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농업생태를 보호해 온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더불어 FTA등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업에서 밀려나고 있는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함. · 목표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함 - 중소농을 육성하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 - 농촌농업 붕괴를 막고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

[부록 2] 빅데이터 분석 자료

1.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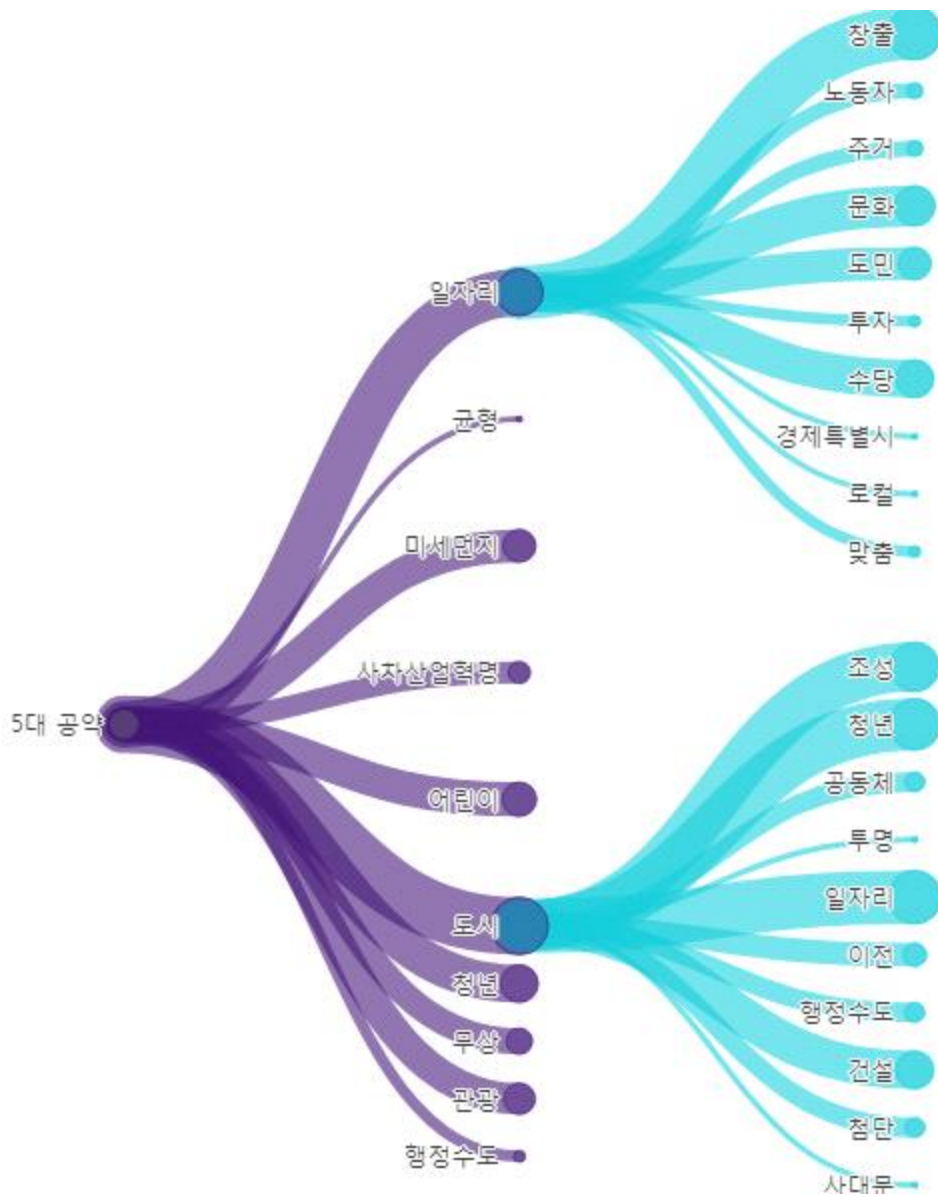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대 공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5대 공약을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텍스트롬(texto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임.
- 분석 결과 시, 청년, 일자리, 경제, 미세먼지, 시민, 복지, 교육, 지역, 4차 산업혁명 등이 높은 빈도를 보임
- 즉 지역 경제 발전, 청년 일자리 창출, 복지 및 안전, 교육, 미세먼지 관련 대책 등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가 강조하는 이슈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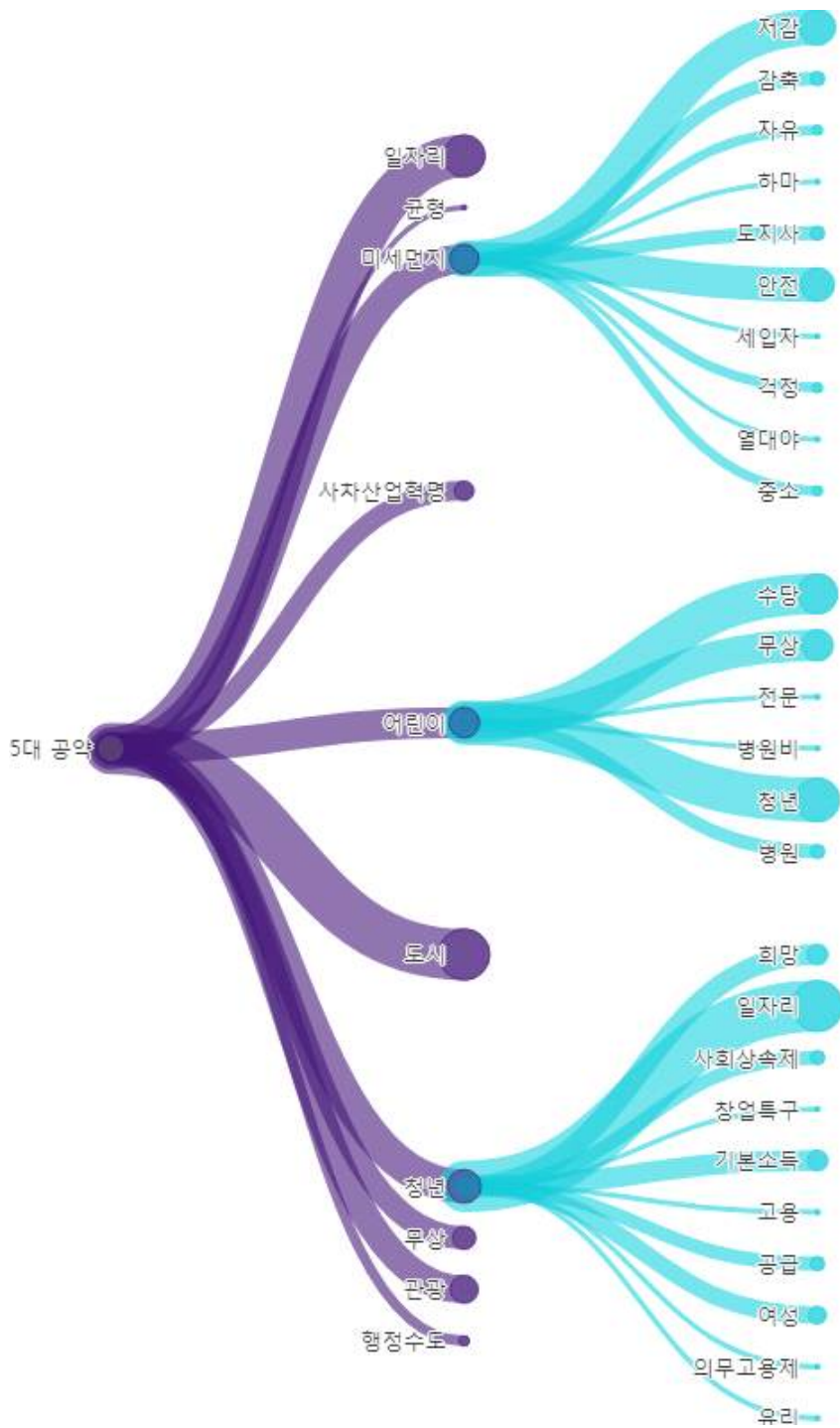
〈표-10〉 5대 공약 핵심 단어

순번	핵심 단어	빈도	순번	핵심 단어	빈도
1	도시	41	16	어린이	9
2	청년	26	17	무상	9
3	일자리	23	18	보육	8
4	경제	22	19	친환경	8
5	미세먼지	17	20	평화	7
6	시민	15	21	균형	7
7	복지	14	22	산업	7
8	교육	12	23	건강	7
9	지역	12	24	보장	6
10	4차 산업혁명	11	25	공항	6
11	문화	11	26	저감	6
12	안전	10	27	교통	6
13	노인	10	28	기본소득	5
14	수당	10	29	원도심	5
15	관광	9	30	통일	5

-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워드트리로 사이즈가 클수록 높은 출현빈도, 작을수록 낮은 출현빈도를 나타내고, 중심단어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도시, 일자리, 청년, 어린이,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공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1〉 5대 공약 2단계 워드트리 - 1



〈그림-2〉 5대 공약 2단계 워드트리 - 2

2)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0대 공약 분석⁷⁾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게시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10대 공약을 빅데이터 분석한 것임⁸⁾
 - 후보자의 공약 대부분이 청년, 도시, 일자리, 산업, 미세먼지, 지역, 시민, 안전, 어린이집, 복지 등의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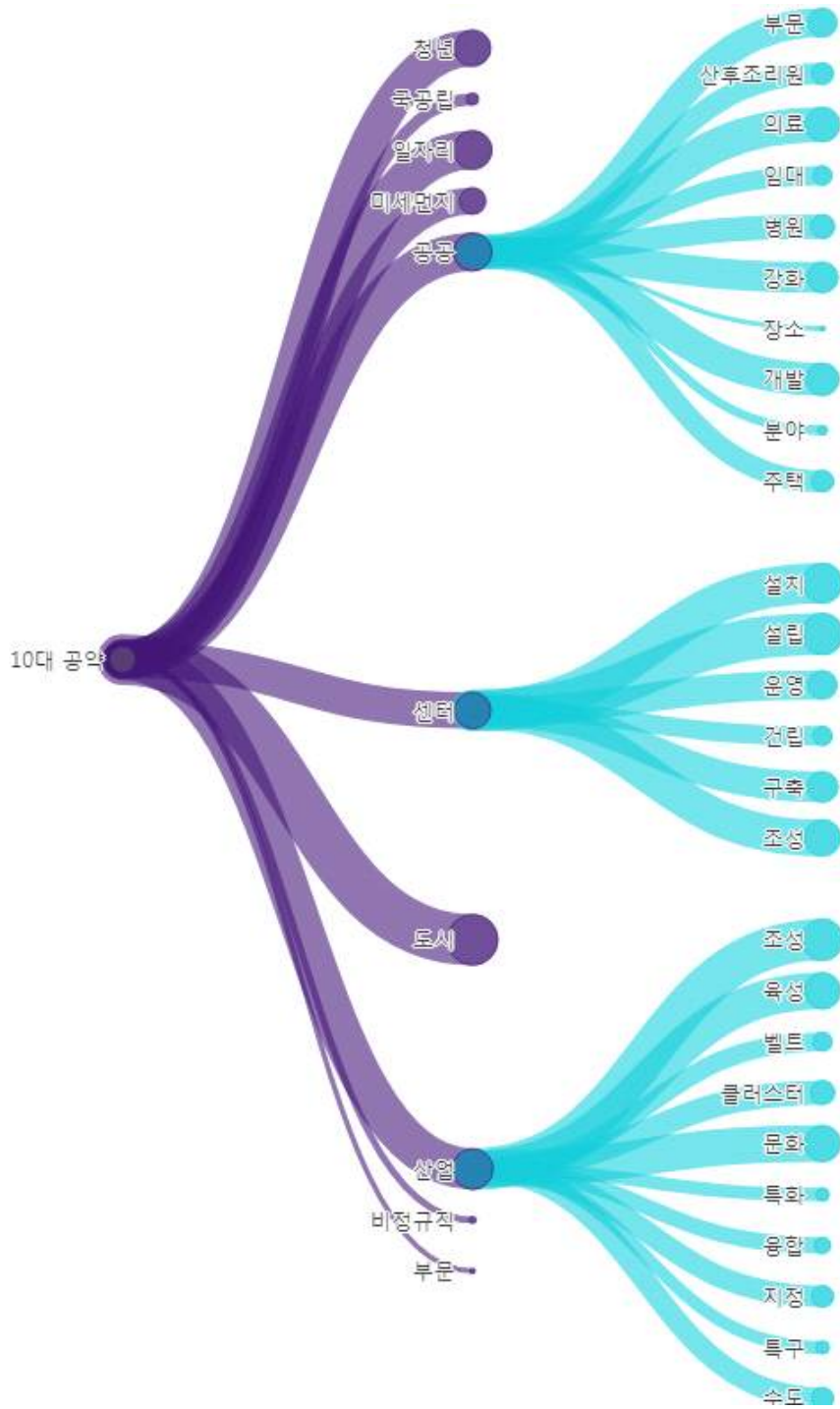
〈표-11〉 10대 공약 핵심 단어

순번	핵심 단어	빈도	순번	핵심 단어	빈도
1	청년	45	11	교육	13
2	도시	38	12	문화	13
3	일자리	22	13	무상	12
4	산업	20	14	수당	12
5	미세먼지	19	15	평화	11
6	지역	16	16	의료	11
7	시민	16	17	4차 산업혁명	10
8	안전	14	18	행복	10
9	어린이집	14	19	철도	9
10	복지	14	20	아동	9

- 10대 공약의 중심 단어 간 연결을 보면 도시, 산업, 일자리, 센터, 공공, 일자리, 청년, 미세먼지, 산업 빈도가 높음
 - 10대 공약이 5대 공약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도시, 일자리, 일자리, 청년, 미세먼지가 높게 나옴
- 5대 공약에서 보여주지 않은 공공, 센터, 산업의 연결 단어를 보면 공공에서는 산 후조리원, 의료, 병원 등을 강화, 산업에서는 친환경과 4차산업혁명 조성 및 육성 등이 중요한 공약임을 보여주고 있음

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식 홈페이지 참고 : <http://manifest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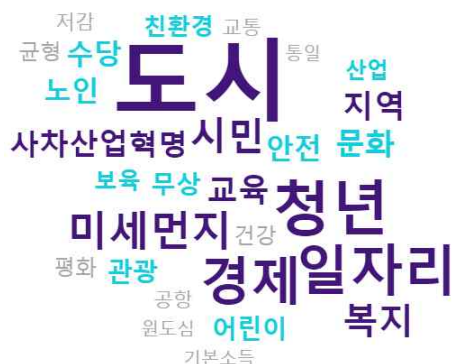
8) 다수 후보자의 10대 공약 내용이 빠져 있음



〈그림-3〉 10대 공약 2단계 워드트리

3) 5대 공약과 10대 공약 비교

- 워드 클라우드는 핵심 단어의 빈도를 시각화 한 것으로 5대 공약과 10대 공약의 핵심 단어를 비교하면 도시, 청년, 일자리, 미세먼지 등이 핵심 단어로 나타남



〈그림-4〉 5대 공약 핵심 단어 워드 클라우드



〈그림-5〉 10대 공약 핵심 단어 워드 클라우드

2. 도지사 후보 공약 분석 9)

1) 전라북도

-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 차, 청년, 미세먼지, 농업 등의 핵심단어가 분석되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발전, 미세먼지 저감 등의 이슈를 강조하고 있음
-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의 5대 공약을 기타 8개 도지사 후보의 공약과 비교해보면 지역 경제 발전, 교육, 일자리 창출, 안전 및 복지 등의 공통적인 이슈를 포함하고 있음

9)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

〈표-12〉 전라북도지사 후보 5대 공약 핵심 단어

순번	핵심 단어	빈도
1	새만금	3
2	차	2
3	청년	2
4	미세먼지	2
5	농업	2
6	일자리	2
7	친환경	2
8	경제	2
9	건강	2
10	배당	2
11	공공	2
12	장애인	2

〈그림-6〉 전라북도지사 후보 5대 공약 핵심 단어 워드 클라우드

2) 기타 시도지사 후보 5대 공약 분석

- 기타 시도지사 후보의 5대 공약의 핵심단어는 경제, 일자리, 청년, 발전, 복지 등의 핵심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청년, 일자리, 경제, 복지 등의 핵심단어는 지역별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 강원도를 비롯한 기타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통이슈로 분석되어짐

〈표-13〉 기타 시도지사 후보 5대 공약 핵심 단어

순번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1	수당	3	경제	4	일자리	3	무상	3	청년	5	무상	2	발전	3	도민	5
2	관광	3	복지	3	병원	3	자원	2	노인	3	수당	2	안전	2	반값	3
3	지역	3	평화	3	남해안	3	청년	2	공공 의료	2	어린이	2	균형	2	안정	2
4	일자리	2	청년	2	지리산	2	산업	2	관광객	2	고교	2	지역	2	공기업	2
5			통일	2	경제	2	일자리	2	농민	2	경제	2			공공	2
6			일자리	2	산업	2	기본 소득	2	통일	2	발전소	2			특별 자치	2
7			임금	2	관광	2	급식	2	공항	2	교육	2			복지	2
8			조례 제정	2	해양	2			노후	2						
9			공단	2	벨트	2			수당	2						
10					도시	2			보육	2						

〈그림-7〉 기타 시도지사 후보 5대 공약 핵심 단어 워드클라우드



3.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언론 분석

○ 수집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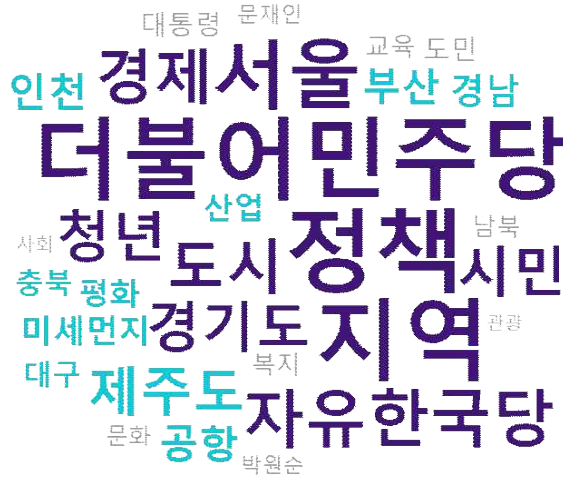
- 수집기간 : 2018년 3월 13일~2018년 6월 12일(3개월)
- 수집채널 : 조선일보, KBS, MBC, SBS,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 키워드 : 지방선거, 공약
- 수집도구 : 텍스트
- 분석도구 : UCINet, NetDraw
- 수집 및 분석 자료량 : 4,495건

1)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언론 분석

- 지방선거 공약과 관련하여 언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공약보다 당, 지역, 인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가 정책이나 핵심 단어에서는 공약보다는 당, 지역명, 후보자에 대한 빈도가 높음
- 더욱이 남북과 평화가 핵심 단어로 나타난걸 보면 지방선거가 남북교류 개선에 문혔음을 볼 수 있음
-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경제, 도시, 청년, 미세먼지, 산업, 교육, 복지, 관광이 빈도가 높게 나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볼 수 있음

〈표-14〉 언론 핵심 단어

순번	핵심 단어	빈도	순번	핵심 단어	빈도
1	정책	1,359	16	산업	506
2	더불어민주당	1,354	17	평화	500
3	서울	1,145	18	대구	485
4	자유한국당	960	19	충북	476
5	경제	923	20	도민	456
6	도시	908	21	대통령	453
7	청년	877	22	교육	425
8	경기도	860	23	복지	420
9	시민	854	24	남북	419
10	제주도	818	25	대전	401
11	인천	638	26	문화	391
12	공항	637	27	문재인	373
13	부산	621	28	박원순	357
14	경남	577	29	사회	333
15	미세먼지	538	30	관광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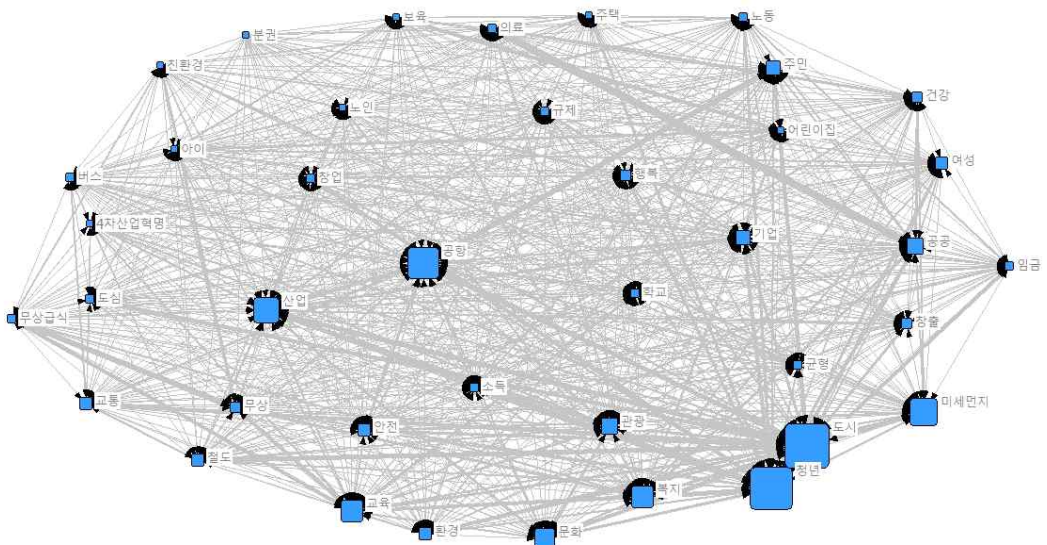


〈그림-8〉 언론 워드 클라우드

- 공약과 관련된 유의미한 단어를 선정한 후 가중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
 - 가중 네트워크로 연결선이 굵을수록 두 단어의 동시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고 연결선이 줄수록 동시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
 - 또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해당 단어의 출현빈도가 높고 작을수록 낮음을 의미
 - 단어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할수록, 즉 연결중심성이 높아 그 단어와 직접 연결된 단어가 많음을 의미
- 가중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어떠한 주제들이 나타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적 등위성 분석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CONCOR 분석을 실시
- 가중 네트워크 분석 결과 도시, 청년, 미세먼지, 공항, 산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주요 이슈로 나타남
 - 도시와 관련하여 스마트 도시, 창업 도시, 도시재생산업, 도시공원 형성, 도시 재건축, 문화 도시, 도시 간 균형발전 등이 주요 이슈
 - 청년과 관련하여 청년 행복, 청년 공공임대주택, 청년 고용장려금, 청년 임금보조, 청년 반값 아파트, 청년 수당, 일자리 창출 등으로 청년 실업 감소를 위한 내용이 주요 이슈
 - 공항과 관련하여 공항 유치 및 이전, 공항 백지화, 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등이 주요 이슈로 공항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
 - 산업과 관련하여 항공우주 산업, 해양플랜트 산업, 전기차 산업, 에너지 산업, 관광 산업, 농축산 생명 산업, 농생명 산업, 농기계 산업 등의 산업 육성과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4차산업혁명 특구, 4차산업혁명 기지와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 스마트 혁신 산업단지, 글로벌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스포츠 산업 메카, 청년친화 산업 단지 등 조성이 주요 이슈

〈표-15〉 언론 공약 중심 핵심 단어

순번	핵심 단어	빈도	순번	핵심 단어	빈도
1	도시	908	21	행복	195
2	청년	877	22	노동	176
3	공항	637	23	임금	175
4	미세먼지	538	24	균형	170
5	산업	506	25	무상급식	169
6	교육	425	26	창업	168
7	복지	420	27	소득	165
8	문화	391	28	규제	159
9	관광	317	29	도심	155
10	공공	314	30	의료	146
11	주민	291	31	버스	144
12	기업	280	32	학교	142
13	안전	258	33	아이	140
14	여성	249	34	보육	139
15	환경	241	35	노인	131
16	철도	232	36	주택	130
17	교통	224	37	어린이집	128
18	창출	209	38	4차산업혁명	127
19	무상	202	39	친환경	127
20	건강	199	40	분권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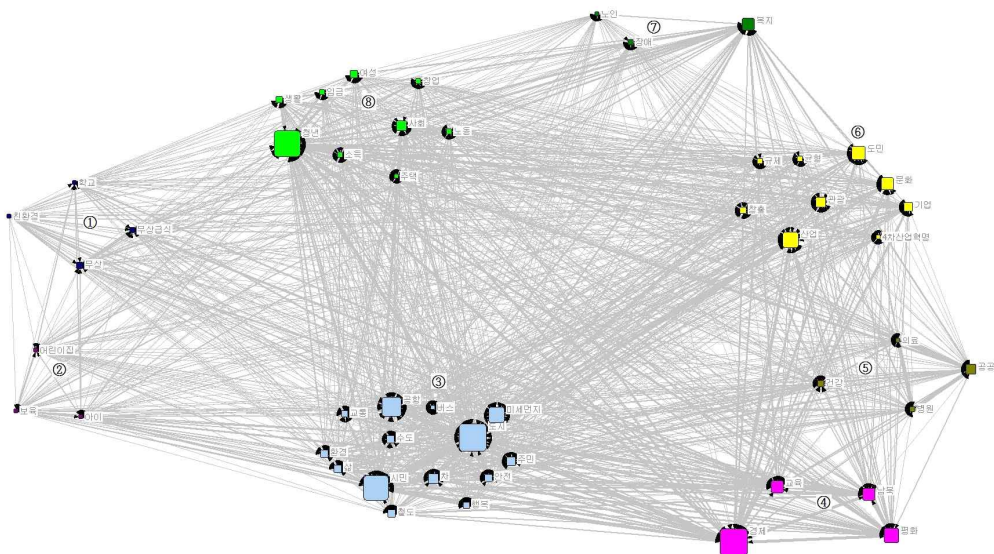
〈그림-9〉 지방선거 공약 언론 기증 네트워크

○ 가중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CONCOR 분석 실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①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한 학교,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 복지 등 교육환경 정책이 이슈
- ②는 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체계개편, 친환경 교통수단,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비 절감, 트램 설치 등의 대중교통 정책이 이슈
- ③은 4차산업혁명, 문화 및 관광 산업 육성, 규제완화와 창업 및 기업 활성화 등의 고용 및 산업정책이 이슈
- ④ 청년 주거복지, 청년 복지, 청년 행복, 여성 등 의 청년과 여성 복지 정책이 이슈
- ⑤, ⑥, ⑦은 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의료, 노인과 가족 복지정책이 이슈
- ⑧은 기타로 주민의 안전과 도시재생, 재개발, 지역격차 해소 등의 균형발전 정책 및 산업 육성과 단지 조성이라는 지역개발 정책이 이슈

○ 가중 네트워크와 CONCOR 분석에 따라 언론에 노출된 공약 이슈를 정리하면 이번 민선 7기의 공약은 주로 사회복지 (①,④,⑤,⑥,⑦) 정책이 주가 되고 그 다음이 경제 개발 정책(②,③,⑧)인 것으로 나타남

- 지진에서부터 최근 자주 발생하는 화재 등의 사고로 사회복지와 경제 개발 정책만큼은 아니지만 안전도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음



〈그림-10〉 언론 CONCOR 분석 네트워크

2) 전북도지사 후보 공약 언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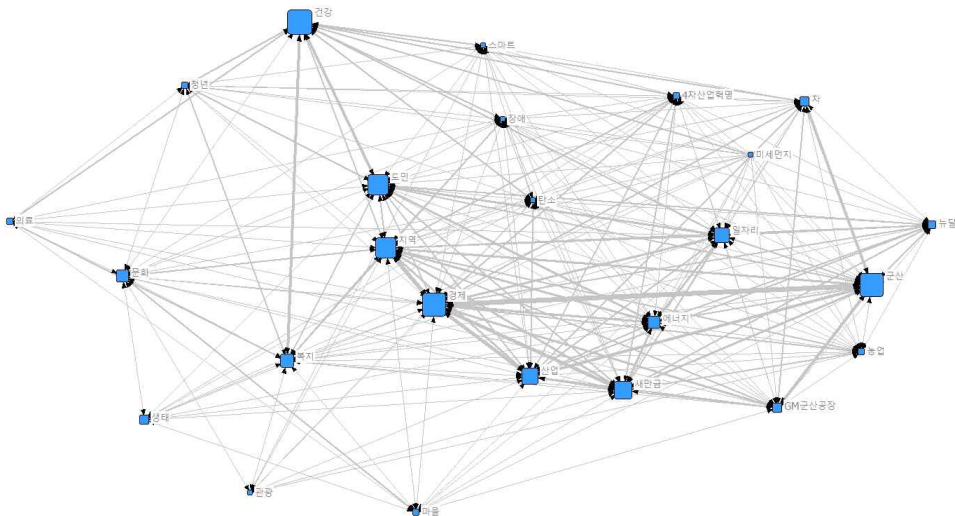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장 언론 내용에서 전북을 정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북도지사 선거가 공약보다는 후보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공약과 관련된 유의미한 단어**
를 선정한 후 가중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 군산,
경제, 도민, 새만금이 주요
이슈로 나타남(그림 23)

- 건강과 관련하여 맞춤 건강, 유아 정밀검진, 도민 안정 건강 시스템, 공공 건강 등이 이슈
 - 군산과 관련하여 전기차 부품 산업 메카, 군산공장 폐쇄 대책, 군산 경제 불활 및 회복 등이 이슈
 - 경제와 관련하여 지역 경제 회복, 지역 경제 부활, 지역 일자리 등이 이슈
 - 도민과 관련하여 도민 건강, 도민 펀드, 도민 소득 등이 이슈
 - 새만금과 관련하여 새만금 개발 속도,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세계잼버리, 남북협력 단지 등이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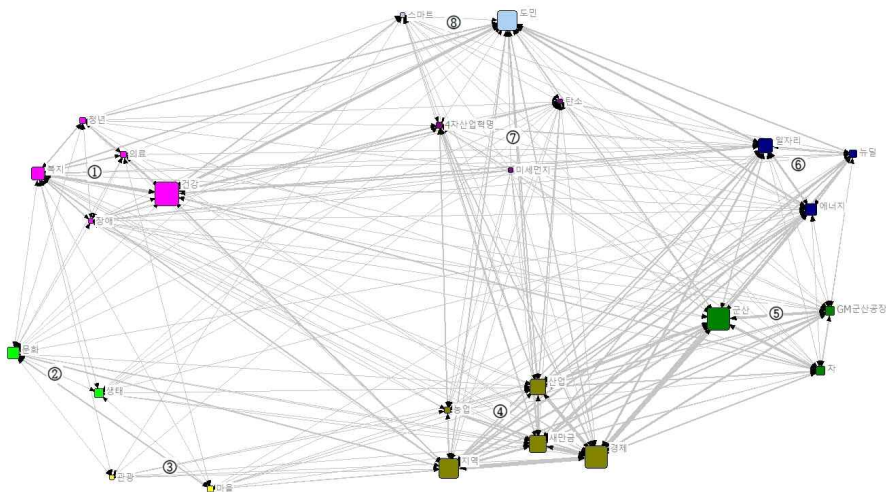
〈그림-11〉 5대 공약 핵심 단어 워드 클라우드



〈그림-12〉 지방선거 공약 언론 전복 기중 네트워크 분석

○ 가중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음

- ① 건강검진 지원, 노인건강 관리, 도민안전 건강, 유아정밀검진, 청년 상담, 청년 건강검진, 도민 복지, 건강복지, 문화복지 시설 조성, 공공의료, 맞춤 건강 지원 서비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개설, 장애인 복지 등의 사회복지 정책이 이슈
- ② 문화 수도, 마을 문화, 생태 관광지, ICT 여행 산업 등의 지역 개발과 관련된 경제 개발 정책이 이슈
- ③ ICT 융합 여행 체험 산업, 투어페스 연계 관광, 문화 관광, 마을 축제, 마을 재생 사업,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등의 지역 개발과 관련된 경제 개발 정책이 이슈
- ④ 새만금과 관련하여 세계 잼버리 유치, 새만금 매립, 남북협력단지 조성,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농업용지 무상 임대, 잼버리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등, 지역과 관련하여 GM군산광장 폐쇄 지역경제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 동력 강조, GM군산공장 폐쇄를 기회로 삼아 전기차 산업 적극 육성 등, 산업과 관련하여 군산 전기차 부품 산업 육성, 탄소산업 육성, 4차산업혁명 대비 스마트 시티구축, 농생명 금융 산업 육성, ICT 여행 체험 산업 육성,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뉴딜 추진 등, 경제와 관련하여 군산경제 부활 및 회복, 군산 조선소 재가동, 군산 공장 미래형 친환경 차량 생산으로 대체 등으로 지역 개발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 개발 정책이 이슈
- ⑤ ④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전기차 생산, 전기차 자율 주행차 전진 기지 조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차량 기술 개발 등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 개발 정책이 이슈
- ⑥ 에너지 뉴딜 정책 1만개 도민 일자리 창출, 에너지 뉴딜 사업 농가 소득 모델 창출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 뉴딜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경제 개발 정책이 이슈
- ⑦ 4차산업혁명 미래성장 동력 마련, 탄소활용 산업 강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차 보급, 새만금 매립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필요 등으로 경제 개발 정책과 환경 정책이 이슈
- ⑧ 스마트 농생명 밸리, 스마트 여행 체험, 스마트 시티 건설 등의 지역 개발 정책과 도민 소득 향상, 도민 안전, 도민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복지와 안전 및 고용과 관련된 것으로 경제 개발 정책, 사회 복지 정책이 이슈



〈그림-13〉 지방선거 공약 언론 전복 가중 네트워크 CONCOR 분석

○ 가중 네트워크CONCOR 분석에 따라 민선 7기 전북 도지사 후보 공약 이슈를 정리 하면 공약은 경제 개발 정책(②,③,④,⑤,⑥,⑦)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이 사회복지 정책(①,⑦,⑧)으로 나타남

-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별 후보 공약 이슈가 주로 사회복지 정책인 것과 비교하여 군산발 지역 경제 위기로 전북 도지사 후보의 공약이 경제 개발 정책에 집중 된 것으로 보임

4.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분석

1) 소셜 미디어

○ 수집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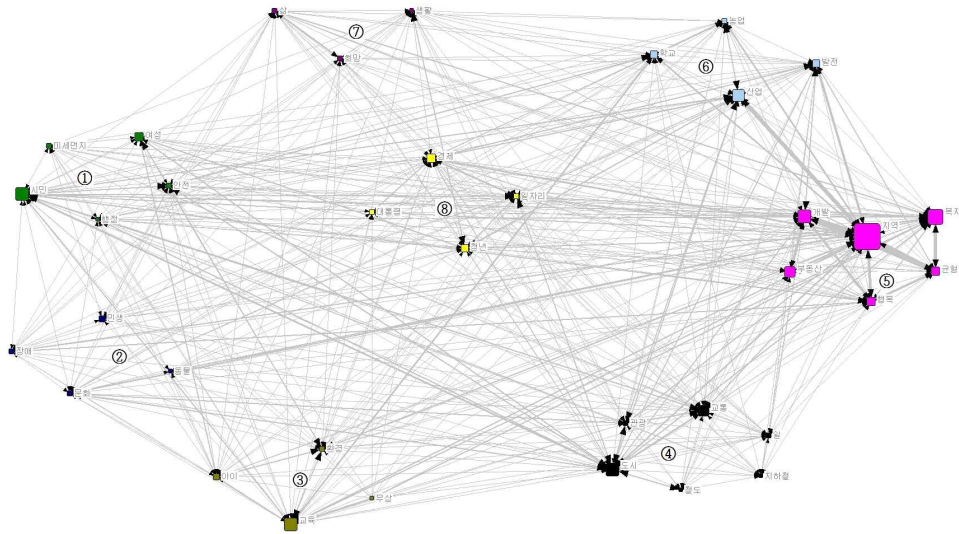
- 수집기간 : 2018년 5월 13일~2018년 6월 12일(1개월)
- 수집채널 : 네이버 (블로그, 카페), 다음 (블로그, 카페)
- 키워드 : 지방선거, 공약
- 수집도구 : 텍스툼
- 분석도구 : UCINet, NetDraw
- 수집 및 분석 자료량 : 3,543건

○ 지역, 복지, 개발, 시민, 교육, 도시, 산업, 교통, 부동산, 여성 등의 이슈가 높은 빈도로 등장

- 소셜 미디어 핵심 단어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유권자가 지역 경제, 복지, 개발, 산업, 균형, 부동산, 교통, 교육, 청년, 부동산 등의 이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가중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음

- ① 은 기타로 미세먼지 저감, 여성과 시민 복지, 시민의 안정 등과 관련한 환경과 사회복지 정책이 주요 이슈
- ② 는 반려동물, 민생, 장애인 복지, 문화 발전 등의 사회복지 정책이 주요 이슈
- ③ 은 아이 교육, 무상 교육, 교육 환경 등의 사회복지 정책이 주요 이슈
- ④ 는 철도, 지하철 등 도시 교통과 관련된 경제 개발 정책이 주요 이슈
- ⑤ 는 지역 간 균형 발전, 지역의 부동산 개발, 지역 복지 및 행복과 관련된 지역의 경제 개발 정책과 복지가 주요 이슈



〈그림-16〉 소셜 미디어 가중 네트워크 CONCOR 분석

2) 소셜 네트워크(SNS)

○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언론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기간 설정은 지방선거일 전 1개월로 한정하여 분석되었음

-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소셜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당 중심의 선거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워드 클라우드도 민주당이 중심에 있고, 다음으로 한국당이 오고 있어 그렇게 볼 수 있음
- 또한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경남, 대구, 서울, 부산이 상위에 올라와 있어 상대적으로 치열했던 지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인물로서는 홍준표, 김경수로 거론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 더욱이 소셜데이터의 주요한 데이터소스가 거의 전적으로 뉴스에 의존하고 있음은 이러한 추세의 흐름이 언론보도의 경향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 범주별로는 정치적인 이슈가 대부분이며, 사회분야에 대한 것들이 후반으로 가면서 거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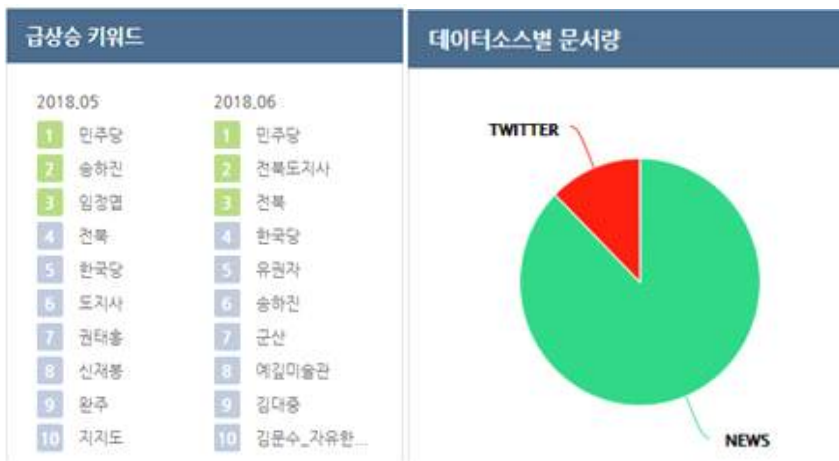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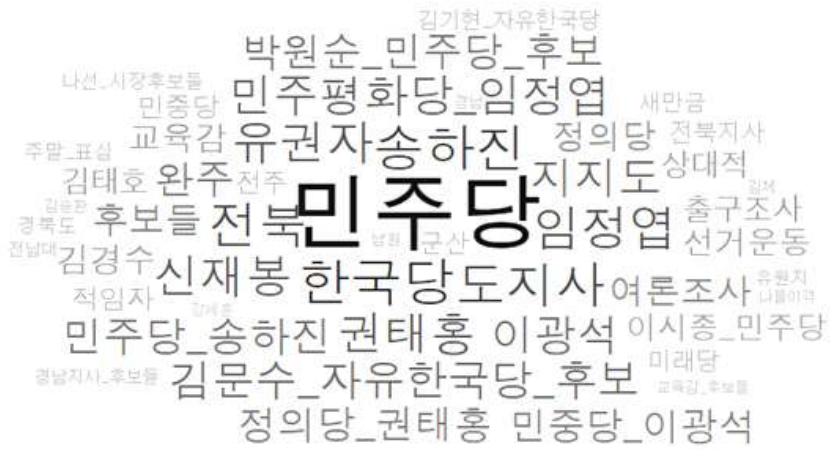


〈그림-17〉 광역단체장 선거 워드 클라우드

2) 전북도지사 선거 워드 클라우드

○ 전북도지사 선거에 대한 소셜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보면, 광역단체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당 중심의 선거임을 나타내며, 처음부터 민주당 위주의 선거임을 확연히 보여주며, 선거에 임박할수록 도지사, 전북이 상승하는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전라북도지사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새만금으로 연결됨
- 인물로서는 송하진 후보가 5월에는 2위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6월 선거에 임박하여서는 6위에 있고, 특히 군산지역의 자동차산업 위기에 대한 대응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음
- 더욱이 소셜데이터의 주요한 데이터소스가 거의 전적으로 뉴스에 의존하고 있음은 광역단체장과 유사하나, 트위터도 상당히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 하나,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은 언론보도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 범주별이슈는 정치와 사회분야로 집중되는 경향은 광역단체장 선거와 비슷한 추세를 보임



〈그림-18〉 전북도지사 선거 워드 클라우드

5. 전북 도지사 후보 공약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분석

1) 소셜 미디어

○ 수집개요

- 수집기간 : 2018년 5월 13일~2018년 6월 12일(1개월)
- 수집채널 : 네이버 (블로그, 카페), 다음 (블로그, 카페)
- 키워드 : 전북, 선거, 공약
- 수집도구 : 텍스트툼
- 분석도구 : UCINet, NetDraw
- 수집 및 분석 자료량 : 779건

○ 본 조사 결과는 6.13 지방선거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과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 내용을 수집, 빅데이터 분석한 것

- 이를 보면 지역, 군산, 완주, 경제, 교육, 도시, 전주, 전통, 여행, 사업 등의 이슈가 높은 빈도로 등장
- 전라북도 지방선거 관련 유권자는 지역 경제, 교육, 여행, 문화, 부동산, 청년, 환경, 여성 등의 이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다만 지역 이슈로 새만금, 군산 공장, 농업 등이 낮지 않은 빈도로 등장함

〈표-17〉 소셜 미디어 전북 핵심 단어

순번	핵심 단어	빈도	순번	핵심 단어	빈도
1	지역	130	16	개발	24
2	군산	94	17	산업	24
3	완주	77	18	자치	19
4	경제	73	19	농업	19
5	교육	51	20	학교	19
6	도시	47	21	여성	19
7	전주	47	22	환경	19
8	전통	45	23	청년	17
9	여행	43	24	상인	17
10	사업	33	25	기초	17
11	문화	29	26	청소년	16
12	부동산	28	27	농정	16
13	새만금	25	28	동네	15
14	일자리	25	29	학생	15
15	공장	25	30	정읍	15



〈그림-19〉 소셜 미디어 전북 워드 클라우드

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 수집개요

- 수집기간 : 2018년 5월 13일~2018년 6월 12일(1개월)
- 수집채널 : 구글(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 키워드 : 전북, 선거, 공약
- 수집도구 : 텍스트
- 분석도구 : UCINet, NetDraw
- 수집 및 분석 자료량 : 610건

○ 본 조사 결과는 6.13 지방선거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의 공약과 관련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용을 수집, 빅데이터 분석한 것임

- 이를 보면 지역, 경제, 청년, 학교, 시민, 수당, 전통, 미세먼지, 차별, 일자리 등의 이슈가 높은 빈도로 등장
- 지역 경제 발전, 아이, 교육, 취업, 수당, 미세먼지 등의 이슈는 기타 지역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다만, 군산, 익산, 전주, 김제 등의 지역과 새만금 관련한 이슈가 높은 빈도를 보임

〈표-18〉 소셜 네트워크 전북 핵심 단어

순번	핵심 단어	빈도	순번	핵심 단어	빈도
1	전주	38	16	미세먼지	4
2	지역	17	17	일자리	4
3	군산	14	18	임실	3
4	익산	13	19	교육	3
5	호남	13	20	여성	3
6	경제	11	21	장애	3
7	청년	10	22	배당	3
8	학교	9	23	민족	3
9	수당	6	24	새만금	3
10	시민	6	25	농업	3
11	전통	5	26	공생	3
12	정읍	5	27	통일	3
13	김제	5	28	문화	3
14	학생	4	29	출산	3
15	차별	4	30	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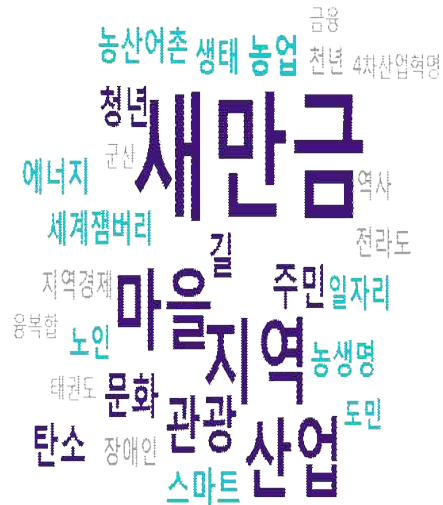
〈그림-20〉 소셜 네트워크 전북 워드 클라우드

6.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 공약 분석

- 텍스트를 이용하여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을 분석한 워드클라우드를 보면 새만금, 마을, 지역, 산업, 관광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
 - 특히 새만금이 가장 높은 빈도로 중앙정부 주도의 새만금 개발 사업이 전북의 가장 큰 이슈
 - 공약 핵심 단어 중 상위 36개를 정리한 표로 고용, 산업, 균형발전, 지역개발, 관광, 환경, 문화진흥활동, 복지 등 다양한 정책 이슈를 다룸
 - 특히 관광, 길, 문화, 역사, 천년, 공유, 생태, 마을 등 문화와 공간, 관광, 자연을 접목한 경제 개발 정책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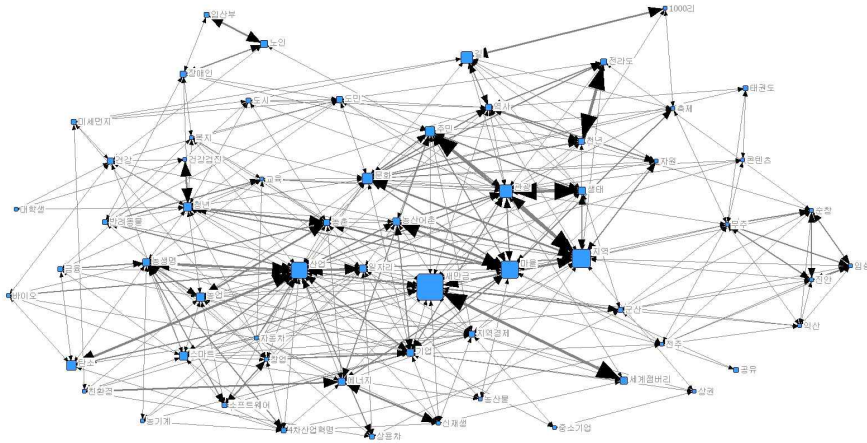
〈표-19〉 소셜 네트워크 전북 핵심 단어

순번	핵심 단어	빈도	순번	핵심 단어	빈도
1	새만금	104	19	노인	23
2	지역	69	20	기업	22
3	마을	65	21	도민	21
4	산업	64	22	농촌	21
5	관광	47	23	전라도	20
6	길	42	24	건강	20
7	문화	36	25	역사	19
8	주민	35	26	천년	19
9	탄소	32	27	지역경제	19
10	청년	30	28	장애인	19
11	농업	30	29	금융	16
12	스마트	29	30	태권도	16
13	농산어촌	26	31	반려동물	16
14	에너지	26	32	군산	15
15	생태	26	33	4차산업혁명	15
16	농생명	24	34	공유	15
17	세계잼버리	23	35	마을	15
18	일자리	23	36	상용차	14



〈그림-21〉 소셜 네트워크 전북 워드 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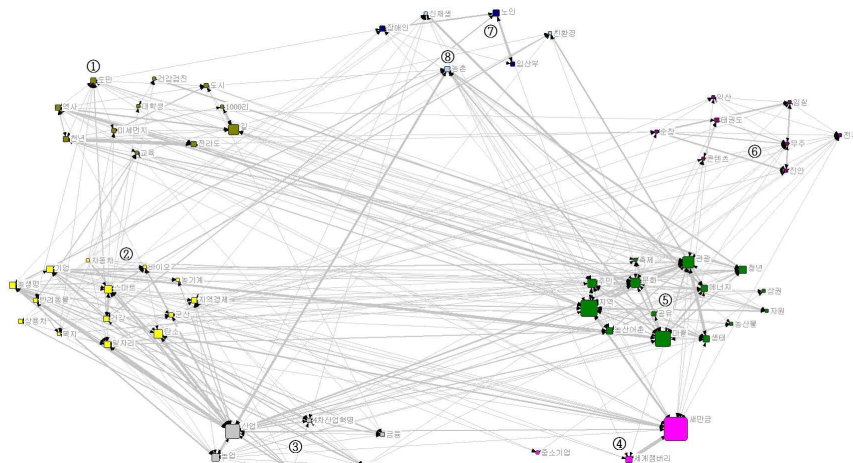
- 송하진 도지사 공약 중 추출한 62개 단어에 대한 가중 네트워크 분석 결과 산업, 새만금, 마을, 지역이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하며, 노드가 크고 연결선이 굵음을 통해 송하진 도지사 공약의 핵심 임
 - 새만금-세계잼버리, 농생명-산업, 탄소-산업, 산업-일자리, 주민-관광, 관광-지역, 관광-생태, 전라도-천년, 신재생-에너지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22〉 송하진 도지사 공약 네트워크

○ 가중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CONCOR 분석을 한 결과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본 송하진 도지사 공약의 핵심은 경제 개발 정책과 복지로 나타남

- ① 환경과 문화 및 교육으로 도민의 질적 삶 제고를 위한 공약
- ② 지역경제를 위한 산업별 개발 정책 관련 공약
- ③ 지역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산업 개발 정책 관련 공약
- ④ 전북과 새만금 홍보를 위한 세계잼버리 개최 관련 공약
- ⑤ 지역발전 위한 개발 정책 관련 공약
- ⑥ 지역의 균형발전 위한 개발 정책 관련 공약
- ⑦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의 복지를 위한 공약
- ⑧ 기타 경제 개발 정책 관련 공약



〈그림-23〉 송하진 도지사 공약 CONCOR 분석 네트워크

7. 주요정당 10대 공약

○ 본 분석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주요 정당의 10대 지방선거 공약을 빅데이터 분석한 것임

- 주요 정당 대부분이 청년, 교육, 일자리, 안전, 복지, 산업, 창업 등의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각 정당별로 자유한국당은 육아, 난임, 출산, 휴직 등의 여성 이슈, 바른미래당은 장애 및 장애인 등의 이슈, 민주평화당은 쌀, 대학, 식품, 호남, 자치 등의 지역 이슈, 정의당은 노동, 인권, 복지, 동물, 장애인 등의 진보 이슈가 높은 빈도를 보임.

〈표-20〉 주요정당 10대 공약 핵심단어 분석

순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핵심 단어	빈도
1	청년	33	교육	33	교육	37	지역	60	지방	40
2	교육	20	청년	28	지역	31	대학	33	교육	33
3	일자리	20	일자리	22	안전	26	쌀	28	지자체	31
4	안전	18	미세먼지	20	지방	22	청년	26	청년	28
5	도시	17	노인	18	문화	16	지방	23	노동	26
6	산업	16	학교	15	소득	13	산업	18	인권	23
7	창업	15	취업	13	지자체	12	복지	17	건강	23
8	환경	14	산업	13	미세먼지	12	남북	16	여성	22
9	기업	14	출산	12	주민	12	경제	12	동물	22
10	복지	14	기업	11	복지	12	소득	12	복지	19
11	여성	14	복지	11	주택	12	임대주택	11	자치	19
12	경제	14	전통시장	11	농어촌	11	지방자치	11	장애인	19
13	고용	14	규제	11	어르신	11	취업	11	주민	18
14	규제	14	안전	10	재난	11	식품	10	안전	16
15	투자	13	지역	10	학교	11	기본소득	9	문화	15
16	문화	13	가정	9	장애인	11	일자리	9	예술	13
17	기술	12	창업	8	주거	11	균형	9	임금	12
18	지방	12	육아	8	아이	10	고용	9	아동	12
19	공정	11	난임	8	창업	9	호남	9	환경	12
20	건강	11	휴직	8	육아	8	공공기관	8	공정	11

〈그림-24〉 주요 정당 10대 공약 핵심 단어 워드클라우드



[부록 3]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지

1. 1차 델파이 조사지

전라북도 정책아젠다 설정을 위한 1차 전문가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의 중요 정책결정을 위한 아젠다 설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전라북도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중요 정책 아젠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조사는 총 3회에 걸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번 실시하는 1차 조사는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전라북도의 중요한 정책아젠다를 자유롭게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1차 설문조사는 연구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 도출된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아젠다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김동영 연구위원(063-280-7174)

민선7기 지방선거 정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온 핵심분야 그리고 각 분야별 주요 키워드입니다. 분야별 키워드를 참고하여 각 분야별로 아젠다를 작성해 주십시오

분야	주요 키워드
청년	청년행복,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고용장려금, 청년임금보조, 청년수당, 일자리창출, 인구, 사회상속제, 창업특구, 기본소득
일자리	창업, 에너지뉴딜 1만개 일자리창출, 소득, 기본소득, 투자, 맞춤, 경제특별시, 의무고용제
안전·건강	미세먼지, 유아정밀검진, 공공의료, 장애인복지, 친환경, 열대야
산업·경제	4차산업혁명, 규제완화, 창업, 기업활성화, 에너지산업, 군산공장폐쇄후속대응, 전기차, 상용차, 자율주행, 스마트혁신산업단지, 농생명 금융산업육성, 클러스터
SOC	공항, 철도, 교통망확충, 대중교통체계개편,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
새만금	새만금개발속도,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세계잼버리, 남북협력단지
농생명	스마트농생명밸리, 농기계산업, 스마트팜, 농생명산업, 농축산생명산업, 농산어촌
문화·관광	ICT여행체험산업, 문화도시, 스포츠산업메카, 문화예술, 생태관광지, 투어패스연계관광, 마을축제, 마을문화, 문화수도, 전통, 전라도천년
복지	의료, 노인, 가족, 여성, 청년, 어린이, 무상, 보장, 보육, 수당
균형발전	지역, 분권, 도시재생, 재개발, 지역격차 해소, 원도심

전라북도 정책아젠다[청년분야]

전라북도의 청년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아젠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를 두 개 이상 제시해 주시고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젠다1	
아젠다2	
사유	

전라북도 정책아젠다[일자리 분야]

전라북도의 일자리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아젠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를 두 개 이상 제시해 주시고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젠다1	
아젠다2	
사유	

전라북도 정책아젠다[안전·건강분야 분야]

전라북도의 안전·건강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아젠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를 두 개 이상 제시해 주시고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젠다1	
아젠다2	
사유	

전라북도 정책아젠다[산업·경제분야]

전라북도의 산업·경제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아젠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를 두 개 이상 제시해 주시고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젠다1	
아젠다2	
사유	

전라북도 정책아젠다[SOC분야]

전라북도의 SOC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아젠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OC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를 두 개 이상 제시해 주시고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젠다1	
아젠다2	
사유	

전라북도 정책아젠다[새만금 분야]

전라북도의 새만금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아젠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만금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를 두 개 이상 제시해 주시고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젠다1	
아젠다2	
사유	

전라북도 정책아젠다[농생명 분야]

전라북도의 농생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아젠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생명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를 두 개 이상 제시해 주시고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젠다1	
아젠다2	
사유	

전라북도 정책아젠다[문화관광 분야]

전라북도의 문화관광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아젠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를 두 개 이상 제시해 주시고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젠다1	
아젠다2	
사유	

전라북도 정책아젠다[복지 분야]

전라북도의 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아젠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를 두 개 이상 제시해 주시고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젠다1	
아젠다2	
사유	

전라북도 정책아젠다[균형발전 분야]

전라북도의 균형발전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아젠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 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를 두 개 이상 제시해 주시고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젠다1	
아젠다2	
사유	

전라북도 정책아젠다[농생명 분야]

전라북도의 농생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아젠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생명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를 두 개 이상 제시해 주시고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젠다1	
아젠다2	
사유	

2. 2차 델파이 조사지

전라북도 정책아젠다 설정을 위한 2차 전문가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의 중요 정책결정을 위한 아젠다 설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전라북도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중요 정책 아젠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조사는 총 2회에 걸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번 실시하는 2차 조사는 1차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핵심아젠다 설정 그리고 각 아젠다별 우선순위에 관한 조사입니다. 1차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김동영 연구위원(063-280-7174)

1차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각 분야별 아젠다입니다.

분야	다수 응답 키워드	소수 응답 키워드
청년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공공임대주택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유출 방지	
	청년 행복	
일자리	창업활성화	지역인재 의무고용 4차산업혁명관련 일자리 창출 투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 건강	미세먼지대책	교통사고 예방강화 암예방 강화
	친환경 관리체계 강화	
	기후환경 변화대응	
산업 경제	군산공장폐쇄 후 후속대응	금용산업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대기업유치 기업활성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농생명 금융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SOC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친환경교통수단 확충 지역일착형 동네인프라 개선 철도교통기능강화
	교통망 확충	
	대중교통체계 개편	
새만금	새만금개발속도 가속화	새만금개발정책 변화 기업도시 유치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세계캠버리 개최 및 파급효과 확산	
농생명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스마트팜 기술보급 및 활성화 지역가공식품 고급화 농기계 산업육성
	농생명산업 발전	
	농산어촌 활성화	
문화·관광	ICT여행체험산업	대표관광지 개발 새만금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전라감영 복원사업 조기완공 전북관광정책체성 확립 및 문화수도
	투어패스연계관광 활성화	
	전통자원보존 및 생태관광지 개발	
복지	보육제도 개선 및 강화	가족중심 생활환경구축 어린이생활환경개선 기업형 실버타운 건설확대
	노인복지정책 개선 및 강화	
	청년지원정책 강화	
균형 발전	지역격차 해소	원도심활성화 체류형 관광벨트구축 전주,완주,김제 통합광역시추진
	분권체계 구축	
	도시재생	

주 : 산업경제분야 및 문화관광분야의 일부 아젠다는 유사한 아젠다별로 통합하여 1차 아젠다 추출

1. 전라북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별로 1순위에서 10순위까지 제시해 주십시오

청년 (10순위 중____순위)	일자리 (10순위 중____순위)	안전·건강 (10순위 중____순위)	산업·경제 (10순위 중____순위)	SOC (10순위 중____순위)
새만금 (10순위 중____순위)	농생명 (10순위 중____순위)	문화·관광 (10순위 중____순위)	복지 (10순위 중____순위)	균형발전 (10순위 중____순위)

2. 각 분야별 세 개의 아젠다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십시오

분야	아젠다 추출	아젠다 우선순위
청년	청년일자리 창출	3순위 중(____순위)
	청년유출 방지	3순위 중(____순위)
	청년행복	3순위 중(____순위)
일자리	창업활성화	3순위 중(____순위)
	맞춤형 일자리 창출	3순위 중(____순위)
	양질의 일자리 창출	3순위 중(____순위)
안전·건강	미세먼지대책	3순위 중(____순위)
	친환경 관리체계 강화	3순위 중(____순위)
	기후환경 변화대응	3순위 중(____순위)
산업·경제	군산공장폐쇄 후 후속대응	3순위 중(____순위)
	4차 산업혁명 대응	3순위 중(____순위)
	농생명 금융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3순위 중(____순위)
SOC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3순위 중(____순위)
	교통망 확충	3순위 중(____순위)
	대중교통체계 개편	3순위 중(____순위)
새만금	새만금 개발속도 가속화	3순위 중(____순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3순위 중(____순위)
	세계잼버리 개최 및 파급효과 확산	3순위 중(____순위)
농생명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3순위 중(____순위)
	농생명산업 발전	3순위 중(____순위)
	농산어촌 활성화	3순위 중(____순위)
문화·관광	ICT여행체험산업	3순위 중(____순위)
	투어패스연계관광 활성화	3순위 중(____순위)
	전통자원보존 및 생태관광지 개발*	3순위 중(____순위)
복지	보육제도 개선 및 강화	3순위 중(____순위)
	노인복지정책 개선 및 강화	3순위 중(____순위)
	청년지원정책 강화	3순위 중(____순위)
균형발전	지역격차 해소	3순위 중(____순위)
	분권체계 구축	3순위 중(____순위)
	도시재생	3순위 중(____순위)

* 2차 조사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연구 2018-18

지방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전라북도 미래정책 아젠다 발굴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18년 11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41-7 9335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